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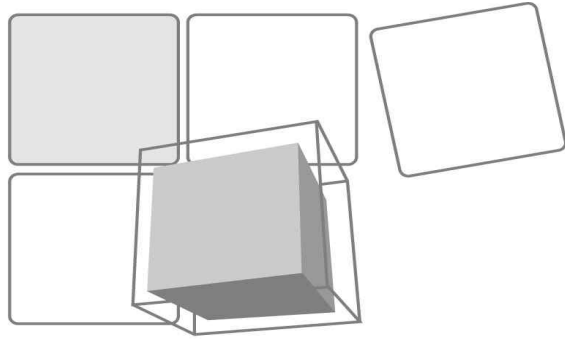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22 ~ 2026)

2023년 해사안전시행계획

2023. 2.



해양수산부



2023년 해사안전시행계획

요 약 본

1

시행계획 개요

□ 「해사안전법*」에 따라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2~'26)' 수립

○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시행

* (법 제6조)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5년 단위 수립 / (법 제7조) 매년 시행계획 수립

【 제3차 국가해사안전 기본계획('22~'26) 개요 】

- ❖ 비 전: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실현
- ❖ 목 표: 해양사고 30% 저감, 인명피해(사망·실종) 30% 저감
- ❖ 정책과제: 5대 추진전략, 21개 이행과제
 - ①안전한 해양이용 확보, ②해양모빌리티산업 선도, ③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④실생활 중심 교육·문화 정착, ⑤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2

해양사고 현황 및 정책여건

□ (**해양사고**) 최근 5년('18~'22)간 14,222건의 사고로 538명* 사망·실종

* 어선 사망·실종 434명(81%), 일반선박 사망·실종 104명(19%)

○ 사망·실종의 91%*가 △안전사고, △전복·침몰, △충돌에 기인

* 안전사고(320명, 59%), 전복·침몰(119명, 22%), 충돌(52명, 10%) / 주요인: (안전 사고) 해상추락·신체가격, (전복·침몰) 기상악화·과다적재, (충돌) 경계소홀 등

□ (**정책여건**) 낚시·레저활동 등 국민의 해양이용 지속증가* 및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으로 해상교통환경은 점차 복잡·다변화

* (낚시어선이용) 428만명('18)→518만명('22), (레저선박등록) 27,515척('18)→35,794척('22)

○ 이태원사고 등을 계기로 안전에 대한 국가책무 강화 요구 증대, 해양 탈탄소·디지털 기술 적용 가속화, 사이버안전 중요성 증가

3 기본 방향

비전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 실현	
기본계획 목표	해양사고 30% 저감 (‘20년) 3,156건 → (‘26년) 2,209건	인명피해(사망·실종) 30% 저감 (‘20년) 126명 → (‘26년) 88명
‘23년 목표	해양사고 2,700건 이내	인명피해(사망·실종) 100명 이내
추진 전략	1.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탈탄소·디지털화 촉진으로 해양모빌리티산업 선도	
	3.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4. 실생활 중심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5.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4 5대 전략별 시행계획 (기본계획 전략별 ‘23년 주요 추진과제)

전략 1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안전보건관리체계) 해양수산분야 산업안전 실태조사, 어선원 안전 보건체계 구축 지원* 및 어선안전감독관 제도 도입**(~’25) 추진
 -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연근해어업 대상 위험성평가·매뉴얼제작 컨설팅
 - ** 「어선안전조업법」 개정(~’23.12) → 하위법령 개정 및 어선안전감독관 채용(~’25)
- (사이버보안) 선박 운항과 관련된 사이버 위협·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 및 종합대책 마련(‘23.上), 전문가** 포럼 개최(‘23.下)
 - * 「해사안전법」 개정(「해사안전기본법」 조문신설), 「해사사이버안전 관리지침(안)」
 - ** 해운협회, 해양대, 정보보호학회, KMI, KRISO, 한국선급,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 (처벌강화) 다발 및 중대 인명사고 근절을 위해 고의·중과실에 의한 사망·실종 발생 시 어업허가·면허 등 정지·취소제도 도입* 추진
 - * 처분방법, 판단기준 및 국내외 사례 검토(‘23) 및 관련법령 개정(‘24~)

전략 2 탈탄소·디지털화 촉진으로 해양모빌리티산업 선도

- **(친환경선박)** 저탄소(LNG, 메탄올)·무탄소(수소, 암모니아) 핵심기술 개발*, 기준마련·제도개선** 및 「국제해운 탈탄소화 대응전략」 수립('23.2)

* 암모니아·LNG·하이브리드 등('22~'31, 2,540억원), 액화수소선박('23~'24 예타, 800억원)

** 수소연료전지선박 잠정기준, 전기추진선박 통합기준, 암모니아 배출처리시스템기준 / 친환경 신기술을 적용한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규제 간소화 등

- **(바다내비)** '23년 2.2만척(누적)을 목표로 ①디지털 통신장비(단말기·앱) 보급, ②안전·복지격차 해소, ③해상안보 지원 및 ④저변확대 추진

정책과제	주요내용
단말기 보급	■ 단말기 구입가격의 50%(최대 154만원) 보조
안전·복지격차 해소	■ 맞춤형 교통정보, 응급의료지원, 단말기-모바일 앱 문자 서비스
해상안보 지원	■ 소형선 북방한계선 진·출입 실시간 경보 제공(합참·해경·세관)
저변확대	■ 단말기 다변화(10인치→13·15인치, WiFi 이용), 어탐장치 연계 기능 등

- **(자율운항선박)**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25, 587억원) 및 실증센터 구축('23, 울산), 인·허가 특례*, 인증 간소화** 등 규제혁신 추진

* 신기술 선박 시험운항 시 특례적용으로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 면제

** 설비인증 시 정부의 4단계 절차를 민간의 1단계로 간소화(상용화기간 1년 단축)

전략 3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 **(해역관리)** 디지털 해상교통 플랫폼 구축(타당성조사, '23), 안전진단 제도 강화* 및 대규모 해양시설(해상풍력단지 등) 관리체계 마련 추진

*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선 통항수역에서의 해양개발행위 등 진단대상 포함

- **(정보고도화)** 차세대 해양 PNT(위치·항법·시각) 기술개발* 추진 및 해양기상정보 정확도 제고를 위한 기상관측망(서해남부해상**) 확충

* 위치정보 오차감소(10m급→5cm급, '22~'32, 2,540억원) 초정밀 위성항법기술

** 제1기지(북격렬비열도, '05) → 제2기지(덕적도, '21) → 제3기지(안마도, '23)

- **(해상교통관제)** 제주·동해권 광역 VTS 구축*, VTS 레이더 확충** 및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예측기술(위험상황·혼잡시간 등) 개발

* 통항량↑, 사고위험도↑ 제주·서귀포해역(~'23), 동해·포항해역('23 착공)

** 새만금 신항만 및 부산 기장해역 관제공백 해소를 위해 레이더 추가 설치('23~'26)

전략 4 실생활 중심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 **(안전중심경영)**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체제 유지·감독의무 부과* 및 노후선 교체, 선박 유지관리 등 안전투자내역 공시제도** 도입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해사안전법」 개정·시행)

** 여객선사, 위험물운송선사 대상 시범운영(2년간 시행유예), 성과분석 등을 거쳐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해사안전법」 전부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 마련, '23.上)

- **(교육내실화)** 이론중심에서 사례·실습중심*으로 개편, 자문단**을 구성해 취약선박(어선·낚시어선 등) 안전교육 내실화 방안 마련

* 어로작업 기본수칙, 사고사례, 시뮬레이터·VR장비 활용, 구명뗏목 작동·탑승 등

** 조업안전·선박안전·인적과실 등 해양수산업 분야 안전 전문가 8인으로 구성

- **(문화확산)** 구명조끼 무상보급*·착용 캠페인 중점추진 및 '해양안전의 날'·'어선안전의 날'(매월 1일) 계기 안전문화 진흥운동** 전개

* 1인 조업어선(706척, ~'23)→1·2인 일반선박(313척, ~'24)→2인 조업어선(14,167척, '25~)

** 해양안전실천본부(전국 12개) 중심, 해수부·해경·지자체·수협·해양수산업단체 등 참여

전략 5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 **(위상제고)** IMO 이사국 12연임 달성('23.12, 총회) 추진 및 글로벌 이슈 논의주도를 위한 주요 해운국 장관급 콘퍼런스* 개최 등

* '23.6.14.~16(서울)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 선언문' 채택 등

- **(국제표준화)** 디지털·친환경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국내 전문가 국제기구 진출 확대, 기술협력 및 개도국 ODA 강화('23, 50억원)

* 기술개발 → 국제표준화(IMO 기준 반영) → 상용화 →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

- **(회원국감사)** 감사('22.11) 수감결과(경미 식별사항 1건) 시정조치 계획 수립·제출('23.2, IMO) 및 상시감사 전환 대응* 등

* 상시감사 수감절차 등 마련을 위해 「IMO 회원국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

□ '23년 해사안전시행계획 소요예산: 5,187억원*

* 국비 3,601억원(69%), 지방비 1,191억원(23%), 공공기관 395억원(8%)

【 과제별 소요예산 】

(단위: 백만원)

기본계획 5대 전략		계	국비	지방비	공공 기관
전략1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 기반 마련	220,349	171,616	39,698	9,035
전략2	해양모빌리티산업 선도	199,452	113,177	61,380	24,895
전략3	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78,741	66,034	9,081	3,626
전략4	실생활 중심 교육·문화 정착	15,623	5,932	7,781	1,910
전략5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4,540	3,340	1,200	-
합계		518,705	360,099	119,140	39,466

주요내용		세부과제	일정	추진기관
전략1.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 기반 마련	안전보건관리	·산업안전 실태조사	1월~	해수부
		·어선원 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	1월~	해수부
		·어선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1월~	해수부
	사이버보안	·해사사이버안전 관리지침(안) 마련	~3월	해수부
		·사이버보안 종합대책 마련	~12월	해수부
		·전문가 포럼 개최	11월	해수부
전략2. 해양모빌리티 산업 선도	처벌강화	·중대사고시 어업허가·면허 정지·취소제도 도입	1월~	해수부
		·저탄소·무탄소 핵심기술 개발	1월~	해수부·산업부
		·친환경선박	1월~	해수부
	바다내비	·수소연료전지선박, 전기추진선박 등 기준마련	1월~	해수부
		·국제해운 탈탄소화 대응전략 수립	~12월	해수부
		·디지털 통신장비 보급 지원	연중	해수부·KOMSA
	자율운항선박	·맞춤형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연중	해수부
		·원격응급 지원체계 구축	연중	해수부
		·단말기 다변화(10인치→13·15인치, WiFi 이용)	1월~	해수부
		·어탐장치 연계	1월~	해수부
전략3. 공간중심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해역관리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울산) 구축	연중	해수부
		·인·허가 특례 및 인증 간소화	연중	해수부
		·디지털 해상교통 플랫폼 구축	연중	해수부
	정보고도화	·안전진단제도 강화	연중	해수부
		·대규모 해양시설(해상풍력) 관리체계 마련	1월~	해수부
		·차세대 해양 PNT 기술개발	1월~	해수부
	해상교통관제	·기상관측망 확충(서해)	연중	기상청
		·제주·동해권 광역 VTS 구축	연중	해경청
전략4. 실생활 중심 교육·문화 정착	안전중심경영	·VTS 레이더 확충(새만금 신항만, 부산 기장)	연중	해경청
		·예측기술(위험상황·혼잡시간 등) 개발	1월~	해경청
		·선박소유자 안전관리체제 감독의무 부과	연중	해수부
	교육내실화	·해운분야 안전투자내역 공시제도 도입	연중	해수부
		·시뮬레이터·VR 장비 활용 실무교육 개편	연중	해수부
		·취약선박 대상 자문단 구성 및 안전교육 실시	1월~	해수부
전략5.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문화확산	·구명조끼 무상보급 및 착용 캠페인 추진	연중	해수부·KOMSA
		·‘해양안전의 날’, ‘어선안전의 날’ 안전문화 확산	연중	해수부·KOMSA
		·위상제고	연중	해수부
	국제표준화	·주요 해운국 장관급 콘퍼런스(서울) 개최	6월	해수부
		·국내 전무가 국제기구 진출 확대	연중	해수부
		·기술협력 및 개도국 ODA 강화	연중	해수부
	회원국감사	·감사 수감결과 시정조치 계획 수립·제출	~7월	해수부
		·상시감사 전환 대응	연중	해수부



목 차



I. 추진배경 및 경과	1
II. 정책성과 및 평가	2
III. 정책현황 및 전망	5
IV. 기본방향	9
V. 2023년 중점추진과제	10
VI. 5대 전략별 시행계획	14
1.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5
2. 탈탄소·디지털화 촉진으로 해양모빌리티산업 선도	75
3.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95
4. 실생활 중심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126
5.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168
VII.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	189
부 산 광 역 시	189
인 천 광 역 시	217
울 산 광 역 시	228
경 기 도	237
강 원 도	243
충 청 남 도	253
전 라 북 도	259
전 라 남 도	267
경 상 북 도	278
경 상 남 도	283
제 주 특 별 자 치 도	299
VIII. 전략별 소요예산	311

I.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해사안전법*」에 따라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2~‘26)’ 수립

○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시행 필요

* 법 제6조: 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법 제7조: 해양수산부는 매년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 제3차(‘22~‘26)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개요 】

- ❖ 비 전 :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 실현
- ❖ 목 표 : 해양사고 및 인명피해(사망·실종) 30% 저감
- ❖ 정책과제 : 5대 추진전략, 21개 이행계획
 - 전략1.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전략2. 탈탄소·디지털화 촉진으로 해양모빌리티산업 선도
 - 전략3.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 전략4. 실생활 중심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 전략5.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2 추진경과

□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2~‘26)’ 수립·고시(‘22.1)

○ 2023년 해사안전시행계획 수립 추진

- 관계기관에 시행계획 작성지침 송부(‘22.10)

* 4개 중앙행정기관, 11개 시·도 및 7개 공공기관

- 관계기관별 시행계획 제출(‘22.11)

Ⅱ. 정책성과 및 평가

1 [정책] 대형사고 ZERO, 해양사고 저감 및 국제위상 강화

□ 여객선 대형 인명피해 “Zero” 달성(‘16~) 및 해양사고 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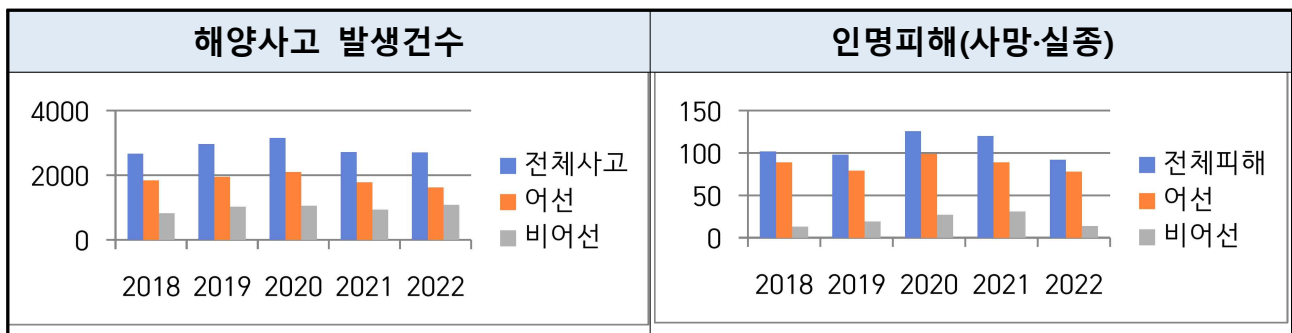
- 지난 8년간(‘13~’20) 지속 증가추세의 해양사고가 감소*(‘21~)로 전환

* (‘13) 1,093건→(‘15) 2,101건→(‘19) 2,971건→(‘21) 2,720→(‘22) 2,704건(잠정)

- ‘22년 해양사고 발생건수는 2,704건으로 전년(2,720건) 대비 1%(16건) 감소, 인명피해는 92명으로 전년(120명) 대비 23%(28명) 감소

- (해양사고 건수) 최근 5년 평균(2,844건) 대비 5%(140건) 감소
- (사망·실종 현황) 최근 5년 평균(108명) 대비 15%(16명) 감소

[최근 5년 해양사고 및 인명피해 현황]



-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2~’26) 및 종사자·바다이용 국민의 구명조끼 착용문화 정착을 위해 「My Life Jacket*」 프로젝트 수립·시행

* 인명피해 저감을 목표로 △나홀로선박 구명조끼 무상보급, △다각도 교육·캠페인 전개, △착용 편의·기능성 개선, △착용 의무화 및 단속 병행 등 중장기 프로젝트 지속 추진

□ 해사분야 글로벌 리더 입지 강화 및 재난업무 ‘최우수기관’ 선정

- IMO 회원국 감사는 경미 식별사항 1건 및 모범사례 2건 도출로, 그간 감사를 수감한 96개 회원국중 가장 우수한 결과 도출
-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 최우수(‘22.8), 재난관리평가 우수(3회/‘19, ‘20, ‘22) 및 국가핵심기반 재난평가 우수(6년 연속, ‘17~) 등 선정

2

[안전] 취약선박 대상 안전관리 강화

□ 해양사고 예방 및 전문적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제도 운영

- (해사안전감독관) 사업장·선박(총 6,299*개소) 중 2,123개소(36%)에 대해 3,682회 지도·감독 실시, '22년 목표(3,427회) 대비 107% 점검 달성

* 내항여객선 분야 357개소 / 내항화물선 분야 5,689개소 / 원양어선 분야 253개소

※ (사업장) 운항관리규정 미숙지 등 1,307건의 미비사항 시정조치 / (선박) 기관설비 고장 등 10,249건 시정 및 6척 항행정지 조치

- (항만국통제) 고위험 및 안전관리 부실 편의치적선(파나마, 마샬제도 등)에 대한 우선점검 시행*으로, 외국적 선박에 의한 주요 해양사고 발생 차단

* 총 2,036척 점검, 1,543척(75.8%) 결함시정 조치 및 54척(2.7%) 출항정지 조치

- (인증심사) 총 860건(사업장 245건, 선박 615건)의 심사를 시행하였고, 부적합사항 2,196건(중부적합 113건, 경부적합 2,083건)을 식별

* 중부적합(113건)은 △회사 책임·권한 24건(21%), △선박정비 16건(14%), △비상대책 수립 15건(13%), △인력 배치·운영 14건(12%) 順으로 식별

3

[법령] 안전기준 강화

□ 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대폭 강화

- '22.1월 「해사안전법」 개정을 통해 신규도입·강화*된 제도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해사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안전관리(책임)자 책임·역량 강화를 위한 이행명령 제도 등

- 여객선 복원성 관련 선박 변경·개조 금지, 기관·조타·구명·소방 등 주요설비 요건* 및 컨테이너 안전·관리 기준 개선 등

* 선박개조 범위 제한, 선박검사기록 요건 강화, 결함신고 의무화·벌칙규정 강화

□ 환경 관련규제의 선제적 대응 및 친환경선박 생태계 조성

- 선박평형수설비 최초승인('08) 이후 세계시장 1위 유지, 선박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제시·목표설정(50%, ~'50년) 등 환경규제 적극 대응
- 친환경선박 국가인증제도 도입('21) 및 전환계획(528척, '21~'30) 수립, 친환경선박 전주기 기술개발('22~'31, 2,540억원) 등 R&D 추진

□ 세계최초 바다내비 시행 등 디지털 안전관리 정책기반 마련

- 해양안전 플랫폼 및 디지털 해상통신망(LTE-M, ~100km) 구축(264개 기지국), 바다내비 서비스 이용자 증가*로 안전서비스를 통한 안전항해**지원 확대

* (단말기·앱 이용자) 35천명('21.12) → 66천명('22.12)

** ('22년 구조실적) 단말기·앱을 통해 22척 긴급구조신호(sos) 접수, 총 75명 구조 기여

-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 구축('22) 및 해양PNT 기술개발('20~'24) 추진

□ 연평균 8%(1,141→2,290억원) 예산 증가로 지속적 안전관리 기반 강화

- 해사분야 신산업 기술개발(R&D) 및 민간 보급 지원사업 등(친환경선박, 바다내비 등) 확대로 연평균 8%(1,149억원) 증가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예산 (억원)	1,141	1,227	1,019	1,245	1,429	1,485	1,766	1,889	1,957	2,290	2,652	3,705	3,675	3,121	3,214

Ⅲ. 정책현황 및 전망

1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현황

◆ 3대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사망·실종)가 전체 92%를 차지

* △안전사고, △전복·침몰, △충돌

□ (사고건수) 최근 5년간('18~'22) 14,222건*(연평균증가율 0.2%)의 해양사고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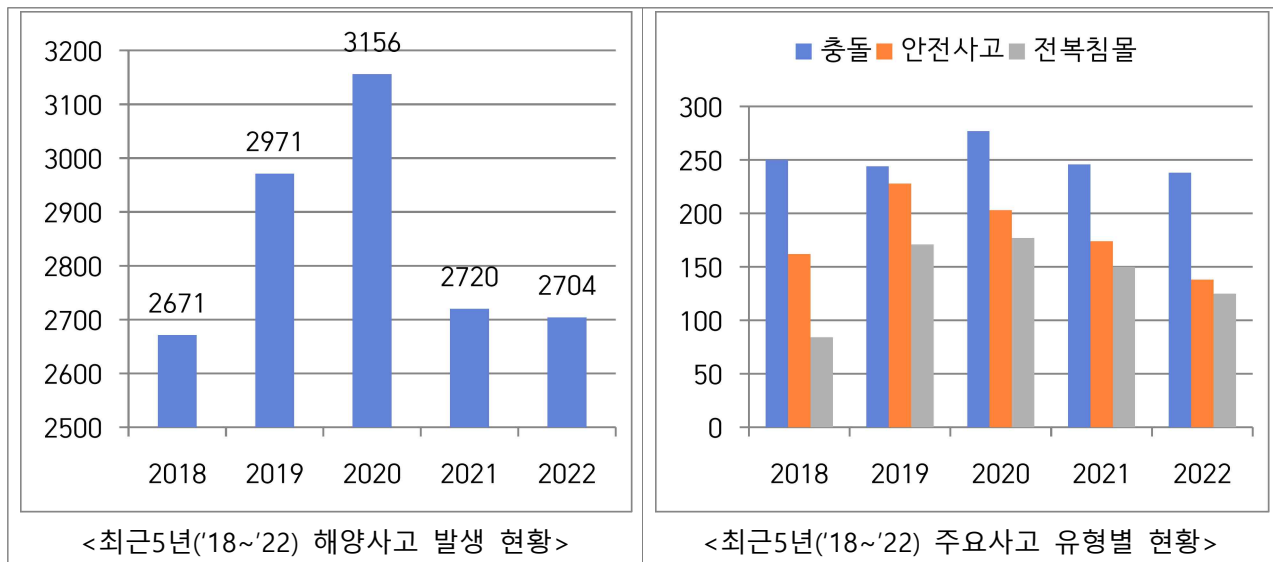
* ('18) 2,671건 → ('19) 2,971건 → ('20) 3,156건 → ('21) 2,720건 → ('22) 2,704건

○ (선종별) 어선(9,306건), 레저기구(2,721건), 예인선(503건), 화물선(461건) 順

* 전체사고 건수 중 어선 사고발생율 65%, 비어선 35% 차지

○ (유형별) 주요사고는 충돌(1,255건), 안전사고(905건), 전복·침몰(709건) 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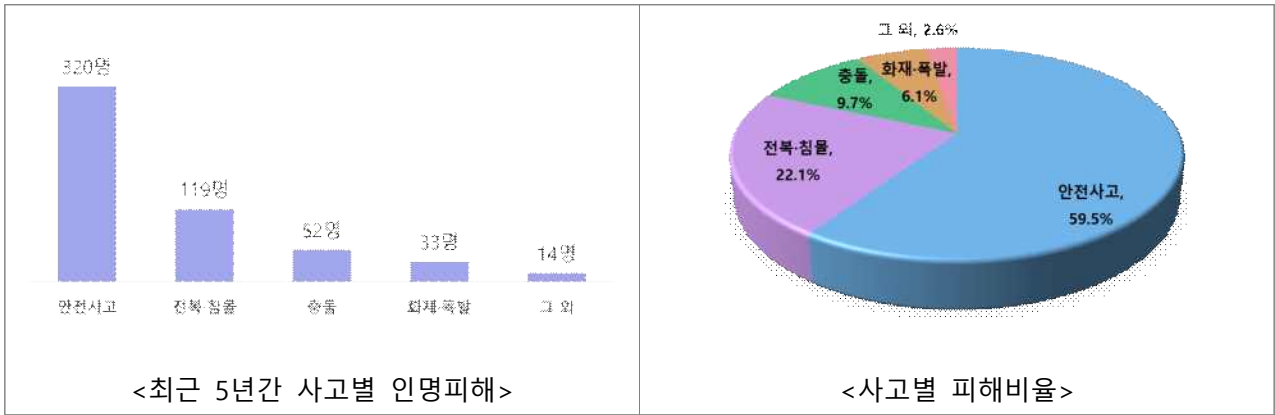
※ 단순사고는 기관손상(4,248건), 부유물감김(1,633건) 順



□ (인명피해) 최근 5년간 538명(연평균 107.6명)의 사망·실종자 발생

○ 전체 사망·실종의 92%가 안전사고, 전복·침몰, 충돌에 기인

* 인명피해 비중 : 안전사고(320명, 59%), 전복·침몰(119명, 22%), 충돌(52명, 10%) 등



《 사고종류별 인명피해 유형 》

- ① 안전사고 : 해상추락 및 1인 조업 중 실종 169명(54%), 어구·로프·구조물 신체가격 45명(14%) 등
- ② 전복·침몰 : 기상악화 47명(40%), 원인미상 37명(31%), 무리한 조업에 의한 복원성 상실 9명(8%) 등
- ③ 충돌사고 : 어선간 충돌 25명(48%), 어선-일반선박 충돌 22명(42%), 일반선박 충돌 5명(10%)

○ 어선·일반선박 모두 사망·실종의 주 원인은 안전사고, 전복·침몰, 충돌

* 어선(434명) : 안전사고 58%(250명), 전복·침몰 23%(98명), 충돌 6%(46명) 등
일반선박(104명) : 안전사고 67%(70명), 전복·침몰 20%(21명), 충돌 6%(6명) 등

《 최근 5년('18~'22)간 선종별 사망·실종자 발생 현황 》

구분	어선(434명)		일반선박(104명)					
	어선 (424명)	낚시어선 (10명)	레저기구 (16명)	여객선 (1명)	화물선 (29명)	유조선 (13명)	예인선 (21명)	기타선 (24명)
인명 피해 (538명)	■ 안전사고(249) ■ 전복·침몰(98) ■ 충돌(40) ■ 화재·폭발(28) 등	■ 충돌(6) ■ 접촉(3) ■ 안전사고(1)	■ 안전사고(8) ■ 전복·침몰(6) ■ 충돌(1) ■ 화재·폭발(1)	■ 안전사고(1)	■ 안전사고(24) ■ 충돌(3) ■ 화재·폭발(1) ■ 침수(1)	■ 안전사고(10) ■ 화재·폭발(2) ■ 기타(1)	■ 안전사고(14) ■ 전복·침몰(6) ■ 화재·폭발(1)	■ 안전사고(13) ■ 전복·침몰(9) ■ 충돌(2)

□ (해양오염) 최근 5년(18~22년)간 1,796.3kl(연평균 359kl) 오염물질 유출

○ 해양오염사고의 주요 원인별로는 부주의 465건(36%), 오염원별로는 어선 541건(40%), 물질별로는 경질유 520건(40.3%)이 최다

○ 최근 5년간 100kl 이상 유출된 해양오염사고는 1건 발생

* 2020년 통영 케이블부설선 침몰(병커C유 등 629kl 유출)

- ◆ 다각적 안전관리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 인명피해 지속 발생
- ◆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도 증대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을 계기로 해양수산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 및 정비 요구
- ◆ 친환경 선박, 자율운항선박 등 해사 부문 탈탄소화 및 디지털화 가속
- ◆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마련 등 사이버안전 활동 강화에 대한 요구 증대

□ (사고발생) 다각적 안전정책 추진성으로 해양사고 인명피해는 감소 추세이나, 안전사고, 어선 전복, 낚시어선 충돌 등에 따른 사망·실종 지속

- 최근 5년('18~'22)간 14,222건의 해양사고로 사망·실종 538명 발생, 해양사고는 연평균 0.3% 증가, 사망·실종은 연평균 2.5% 감소*

* ('17) 145명→('18) 102명→('19) 98명→('20) 126명→('21) 120명→('22) 92명(잠정)

□ (해양 이용객) 낚시어선·레저선박을 이용한 국민의 해양레저 활동 증가

- 낚시어선·레저선박(모터보트, 동력요트 등)의 이용객* 및 등록척수** 지속 증가

* (낚시인구) 최근 10년간('12~'21) 연평균 25% 증가, 종전대비('12~'16, 평균 2,513천명) '22년(5,189천명) 106.4% 증가

** (레저선박 등록척수) '18년 27,515척 → '22년 35,794척(30% ↑)

□ (교통환경) 육상입지 대체, 해양관광 활성화 등으로 어선·여객선·화물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안선박의 해상교통여건 변화 예상

- 해상풍력*·마리나 개발**, 레저선박 증가 등으로 선박통항 밀집도가 높은 연안해역에 집약적 해역이용여건 조성 및 수역확보 경쟁 첨예

* 서울면적 4배의 12GW 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예정(약 70개소 개발예정, 130개소 타당성 검토) / ** (마리나항) '20년 8개 → '29년 78개로 지속 확대 예정

□ (안전관리) 해사안전 및 중대재해에 대한 관심과 정책수요의 증대

- 세월호사고, 포항지진, 코로나-19, 이태원사고 등 대형사고·재난 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대국민 관심 및 국가책무 강화 요구 증대
-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관공선, 항만공사현장 등 공공분야(소관 대상) 536개소 및 어선 등 민간분야(지원대상) 62,552개소 식별

* (공공) 우리부에서 지배·운영·관리 중인 사업장, (민간) 우리부에서 인허가 감독권한을 가진 사업장

□ (환경규제) AI 등 미래기술 발전 및 국제사회 중심의 환경규제 강화

- 해양분야 디지털 적용 본격화, 자율운항선박 시대 도래에 따른 AI,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사이버안전 등 디지털 신기술 수요 증가
- 현존선박 에너지효율(EEXI/CII) ^{에너지효율지수 탄소집약도} 규제 시행('23.1~), IMO의 탄소중립 목표 상향('50년까지, 50%→100%) 등 탈탄소 국제규제 이행 가속화
- 기후변화 대응 가속화에 따른 친환경선박 전환·보급 정책 및 녹색기술 개발 확대,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수요 증가 전망

*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목표 : ('20년) 20% → ('25년) 40% → ('30년) 70%

□ (디지털화) 스마트·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국제 해양디지털 항로 구축('23~'28) 및 VDES 기술개발('23~'26) 등 해양분야 디지털화 전망

-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자율운항선박(MASS) 규정 개발 논의 착수* 및 국제동향에 발맞추어 국내 규정 제정**

* 제105차 해사안전위원회('22.4)에서 '자율운항선박 규정개발'을하기로 결정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법」 제정안 마련(상반기) → 국회제출(하반기)

- 디지털 기술 활용 확대 추세로 사이버안전 강화를 위해 제도기반 마련, 심사 강제화 등 사이버안전 정책 지속 확대 추진

IV. 기본 방향

비전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 실현

제3차
기본계획
목표

해양사고 30% 저감
(‘20년) 3,156건 → (‘26년) 2,209건

인명피해(사망·실종) 30% 저감
(‘20년) 126명 → (‘26년) 88명

‘23년
목표

해양사고 2,700건 이내

인명피해(사망·실종) 100명 이내

추진
전략

1.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1 - 1 국민 해상안전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
- 1 - 2 해상안전 사각지대 관리 고도화
- 1 - 3 데이터기반 해양사고 예방체계 혁신
- 1 - 4 미래 해상안전관리체계 구축
- 1 - 5 맞춤형 해양사고 안전관리 강화

2. 탈탄소·디지털화 촉진으로 해양모빌리티산업 선도

- 2 - 1 해양모빌리티산업 선도국가 실현
- 2 - 2 친환경 기술 개발
- 2 - 3 미래형 선박 전환 지원 확대
- 2 - 4 자율운항선박의 안전기술 개발

3.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 3 - 1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진화
- 3 - 2 新 해상교통환경 대응체계 구축
- 3 - 3 해상교통 정보서비스 운영 활성화
- 3 - 4 스마트 교통환경 인프라 확충

4. 실생활 중심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 4 - 1 환경 다변화에 맞춘 해양안전 교육 인프라 확대
- 4 - 2 생활 속 해양안전 실천문화 확산
- 4 - 3 맞춤형 해양안전교육 강화
- 4 - 4 국민 참여형 해양안전문화 홍보 강화

5. 국제 해상분야 위상 확립

- 5 - 1 국제해사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5 - 2 국제표준화 주도
- 5 - 3 IMO 전문 대응체계 고도화
- 5 - 4 글로벌 해사전문인력 양성 확대

V. 2023년 중점추진과제

1 주요 해양사고 집중관리

◇ 주요 해양사고별 인명피해 발생요인*에 대해 안전관리 집중

* 안전사고 : 해상추락, 양망기끼임 / 전복충돌 : 기상악화, 어구과다적재 / 화재폭발 : 위험작업

□ 안전사고(어선)

- (처벌강화) 「어선안전조업법」 등 개정을 통해 ①고의 또는 중과실, ②빈번한 인명사고 시 어업허가·면허 등 정지·취소제도 도입

* 처분방법, 판단기준 및 국내외 사례 검토('23)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24~)

- (안전사고예방) 양망기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원격제어장치* 개발·시범사업('23) 및 어업작업용** 스마트안전모 실증('23)·보급 추진('24~'27)

* 원격 조정으로 양망기 근접이 필요 없어 사고원인 근본적 제거는 물론, 불필요한 갑판 상 이동을 줄여 미끄러짐, 낙상, 추락 등 기타사고 예방효과도 기대

** 어선원 작업 중 신체가격 사망·실종 35명(화물선·예인선 등 11명) 발생('17~'22.10)

- (안전기준강화) 무리한 조업에 따른 전복사고 예방을 위한 조업제한* 기준 마련('23) 및 승선인원 소규모 어선 구명조끼 상시착용 의무화**

* 풍랑주의보 시 15톤 미만 어선 출항제한+조업제한(「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개정)

** 기상예에 상관없이 승선인원 2인 이하(예정) 어선 상시착용, 장기적으로 해외사례, 인명피해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여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단계적 확대 검토·추진

□ 안전사고(비어선)

- (안전사고 관리)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추락·질식·계류줄 사고 등 선내 작업관리 분야에 대한 인증심사 강화

* 최근 5년('17~'21) 일반선박 인명피해(사망·실종) 74명 중 추락(44명), 질식(9명), 계류줄 사고(11명) 등 3대 안전사고에서 전체 피해의 85% 발생

-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른 작업절차의 적정성, 선내 작업 안전관리 절차의 준수·이행 여부, 안전장비 관리실태 등 중점심사

* 작업전 안전점검표 작성 여부, 가스탐지기·안전모·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관리 등

□ 전복 · 충돌사고

- (바다내비) 낚시어선 충돌 예방 위험경보 등 항행안전 필수 서비스 정확도 향상* 및 서비스 이용 확대·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 개발**·보급

* 충돌·좌초경보, 항로검증 및 최적항로 생성 정확도 향상 R&D 추진(~'25, KRISO)

** 어군탐지·항해장비와 바다내비 단말기 연계·통합(조타실 시야·공간 확보) 구현 추진

- (어망용 레이더 반사기) 부유물 감김*으로 인한 전복 등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운항자가 어망을 쉽게 탐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최근 5년('17~'21) 해양사고 14,100건 중 부유물 감김사고 1,629건(11.6%) 발생

- 안강망 등 항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어로행위 종사자(어업인) 대상으로 레이더 반사기 기능이 탑재된 어망부이 보급*('24~)

* 추진기 감김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어망 설치 어선(전체 어선 65,744척 중 약 5.7만척) 운항자 대상으로 순차 보급(연간 1만척 보급, 매년 5억원 소요 예상)

□ 화재 · 폭발사고

- (고위험선박) 사고우려가 높은 내항화물선 및 위험물 운반선 대상으로 집중 점검 지속 시행(점검주기 단축 : 일반선박 2~3년 → 고위험 선박 6~12개월)

- 위험물운반선 화물탱크 진입 전 안전수칙 이행, 탐지장치·방폭장비 등 비치·착용 실태*, 소화장치의 주기적 관리 여부 확인

* 산소농도 측정기, 자장식 호흡구, 상호 통신장비, 응급조치 및 구조장비 등

- (어선·카페리) 취약부위(배전반 등)를 중심으로 화재발생 시 불꽃을 억제하는 부착형 고체에어로졸 등 어선 화재 차단기술 개발('23~)

- 전기차량 배터리 화재*에 대비, 카페리선박 내 배터리 충전금지, 차량구역 열화상 CCTV·카메라 배치 등 「선박설비기준」 개정('23)

* 열폭주 관리기술 등 전기차량 배터리 화재 특성에 맞는 전용 소방설비 개발('24~)

◇ 해양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점검 및 캠페인 실시

□ 해양사고 예방 안전 주제어 확산 및 홍보 전개

- (안전 실천 캠페인) 해양안전실천본부*를 중심으로 ‘해양안전의 날’ 및 ‘어선안전의 날’(매월 1일) 계기 지역별 안전문화 진흥운동 전개('23~)
- * 전국 12개 본부, 해수부·해경청·지자체·수협·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수산업단체 등 참여
- (안전 홍보)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 개최, 해양안전 엑스포, 안전 산업박람회, 지역축제 등 대외 행사와 연계하여 안전 문화 홍보
 - 디자인, 영상 글 등 국민 참여형 온·오프라인 콘텐츠 공모전 실시, 해양안전실천 캠페인 전개 및 가상현실(VR) 체험 등 실시

□ 체험·참여 중심 대국민 해양안전 콘텐츠 개발 및 교육 강화

- (안전 콘텐츠) 해양 안전 취약자 대상 안전 콘텐츠 및 해양 안전 주제 체험형·놀이형 VR 교육프로그램 개발(2종 이상) 지속*
 - 외국인 선원 및 장애인을 위한 영어·제2외국어 내레이션·자막, 수어 통역사 안전 영상 제작
 -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해양안전 VR콘텐츠 제작 중(약 10종)
- (안전교육) 학생 대상 체험형 해양안전 교육(구명조끼 착용법, VR 교육 등) 및 해양안전체험시설의 상시 운영체계 전환 추진
 -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4개소) 중 1개소 대상 상시 시범 운영, 지역 기반 공공 체육시설 내 해양안전체험시설 시범 운영·검토
 - * (기존) 7~9월(하계휴가철) 한시적 운영 → (계획) '23.3~11월 상시 운영(1개소)

- ◇ 해상교통망의 구축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해사안전법 및 관련 제도 정비
-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해양 디지털 교통안전 정보서비스 강화

□ 해사안전정책 기반 강화

- (법제정비) 해사안전정책 기반 강화를 위해 「해사안전법」을 분법* 하고, 해상풍력단지 등 대규모 해양시설의 안전관리 법제화 방안 검토

*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해사안전기본법」과 안전 규제를 다루는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

- (안전제도) 해운분야 안전투자공시* 제도 도입, 음주운항 적용 대상 선박 확대** 등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선사의 선박에 대한 안전 투자 항목 및 비용 공개를 통한 국민 알권리 확대

**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시운전선박 등 제외) → 「해사안전기본법」에 따른 선박(모든 선박)

□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 (해역관리) 해양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여객선 통항해역 등에 대한 안전진단 대상 확대 등 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
- (출항통제기준) 기존 선박 출항통제기준('91. 도입)의 타당성 검토 등 안전한 선박운항환경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해양교통안전정보 서비스 제공

- (해양사고 예보) 現 해양기상·해양사고·항적 정보 기반 해역 단위 구획별 사고위험정보 서비스 제공
- (선박 안전 정보) 선박의 기본 정보, 검사 이력, 사고 이력, 운항 현황 등 선박 안전관리를 위한 선박 통합 정보서비스 제공

VI. 5대 전략별 시행계획

□ 총 괄

- 추진기관 : 4개 중앙행정기관(해수부, 산업부, 해경청, 기상청) 및 7개 공공기관(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과 제 : 21개 이행계획, 95개 세부과제
- 소요예산 : 총 399,565백만원

(단위 : 개, 백만원)

기본계획 5대 전략		이행 계획	세부 과제	소요예산
합 계		21	95	399,565
전략1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5	36	180,651
전략2	탈탄소·디지털화 촉진으로 해양모빌리티산업 선도	4	13	138,072
전략3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4	12	69,660
전략4	실생활 중심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4	17	7,842
전략5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4	17	3,340

□ 5대 전략별 이행계획

- (전략1) ① 국민 해사안전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 ② 해사안전 사각지대 관리 고도화, ③ 데이터기반 해양사고 예방체계 혁신, ④ 미래형 해사안전 관리 체계 준비, ⑤ 맞춤형 해양사고 안전관리 강화
- (전략2) ① 해양모빌리티산업 선도국가 실현, ② 친환경 기술 개발, ③ 미래형 선박 전환 지원 확대, ④ 자율운항선박의 안전기술 개발
- (전략3) ①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진화, ② 新 해상교통환경 대응체계 구축, ③ 해상교통 정보서비스 운영 활성화, ④ 스마트 교통환경 인프라 확충
- (전략4) ① 환경 다변화에 맞춘 해양안전 교육 인프라 확대, ② 생활 속 해양안전 실천문화 확산, ③ 맞춤형 해양안전교육 강화, ④ 국민 참여형 해양안전문화 홍보 강화
- (전략5) ① 국제해사 글로벌네트워크 강화, ② 국제표준화 주도, ③ IMO 전문 대응체계 고도화, ④ 글로벌 해사전문이력 양성 확대

전략 1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이행계획

□ 국민 해사안전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

- 「해사안전법」 분법*을 통해 해사안전 기본원칙 마련, '해양교통안전 정보 시스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해사안전기본법」과 안전 규제를 다루는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 추진
- ** 해양안전정보, 해양교통현황 등 12개기관 37개 데이터를 대국민 편의 서비스 제공

□ 해사안전 사각지대 관리 고도화

- 해양수산분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고도화, 어선원 선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 어선 안전기준 강화**
-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연근해어업 대상 위험성평가·매뉴얼제작 컨설팅
- ** 풍랑주의보 시 15톤 미만 어선 출항제한+조업제한(「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개정)

□ 데이터기반 해양사고 예방체계 혁신

-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통해 선내 안전·보건 의무 부과, 어선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및 어선원 사망·실종사고 발생 시 강력한 제재*** 도입 추진
- * 연근해 어선(58,000여척) 현장점검, 어선원 안전교육, 위해요소 발굴·개선 등 담당
- ** 「어선안전조업법」 개정(~'23.12) → 하위법령 개정 및 어선안전감독관 채용(~'25)
- *** 고의 또는 중과실, 빈번한 인명사고 시 어업허가·면허 등 정지·취소제도 도입

□ 미래 해사안전 관리체계 구축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시행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개최('23.10잠정), 국내 사이버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
- * 「해사안전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개정('23.1월)을 통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시험공고, 시험위원 임명·위촉, 자격시험 실시 등 업무위탁
- ** 「해사사이버안전 관리지침(안)」 / (조문구성) 총칙(정의 등), 정책(대책수립, 실태 평가 등), 관리(위험성 식별·보호·대응·복구 및 사고조사) 등 3개 분야 19개 조문

□ 맞춤형 해양사고 안전관리 강화

- 안전관리 부실, 편의치적선박 및 고선령(30년 이상) 선박 등 사고취약 내·외항선 우선점검 실시, 재난매뉴얼 운영·관리 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업 강화
- * '대응중심'의 조치내용 고도화·구체화 등 개선사항 매뉴얼 반영 추진

1-1 국민 해사안전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

1-1-1 국민의 해사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도 기반 조성

□ 배경 및 필요성

- (해사안전정책) 「해사안전법」은 해사안전정책을 다루는 기본법 성격의 법률이나, '정책 기본이념 설정 및 비전 제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법적 요건 미비
- (해사안전법 체계) 「해사안전법」은 제정 이후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28회의 개정을 통해 30여개의 제도를 수용하는 등 정책·규제·교통질서 규범의 혼재로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는데 한계 존재

계획 부문	수역안전 부문	해상안전 부문	안전관리 부문	안전문화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계획 ▲IMO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수역 ▲유조선통항 금지 ▲시운전 금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진단 ▲출항통제 ▲음주운항 ▲항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체제 ▲선박안전도정보 ▲우수사업자 ▲선박안전관리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현장 ▲안전의 날 ▲진흥시책 등

□ '23년 추진계획

◆ 「해사안전법」 분법을 통해 해사안전에 대한 기본원칙을 마련 하고 누구나 쉽게 법령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체계 개편

-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해사안전 기본법」과 안전규제를 다루는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 추진(~'23上)*

* 「해사안전법」 분법 법률안 이양수 의원실 대표 발의('22. 9.21.)

- 「해사안전법」 분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 제·개정 일정에 맞추어 하위법령안 적기 마련 및 대국민 홍보 추진('23.3~)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해사안전법」 분법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0	-

□ 배경 및 필요성

- 실효적 해양사고 예방정책 수립과 해양교통안전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해양안전 빅데이터 플랫폼(3년 연속사업) 구축 중
- ‘스마트 해양교통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2차 완료

* 총 47억/3년 사업 : '21년 20.20억, '22년 19.32억, '23년 7.84억

□ '23년 추진계획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37종 이상 데이터 연계, 12개 이상 해양교통안전 정보 서비스 제공

- (인프라 구축) 누적 서버 27대, S/W 25종 등 플랫폼 기반 구축
- (데이터 연계) 누적 12개 기관*, 37개 데이터 연계 수집
 - * 공단,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해사안전관리과, 항만운영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립해양조사원, 기상청, 해경, 수협, 전파진흥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
- (서비스 제공) 해양안전정보 1종, 해양교통안전계획 4종, 자기주도 안전관리 4종, 해양교통현황 3종 등 12개 서비스 제공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스마트 해양교통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안전실)	044-330-2337	784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항 해양안전 네트워크*를 통한 해사안전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기상정보, 해양사고 예방정보, 해사정책, 해양안전 교육자료 및 외국항기항지별 결함사례 등 해사안전정보 수시 제공 * 네이버 海드림밴드,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울산청 홈페이지 등 - 관련 법규 개정 및 정책 변경 사항에 대한 홍보 및 안내(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대책 홍보물(팸플릿, 포스터, 기념품 등) 제작·배부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해양종사자 등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해사안전정보 적기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별, 시기별 특성에 맞는 해양안전문구 및 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 예방정보, 통계, 사고사례 등 해양안전정보 공유 활성화 - 여객선운항현황, 선박등록 현황 행정정보공개, 최신 해사법령, 각종 행사·이벤트 알림 등 동해청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종사자 대상 계절별, 시기별 특성에 맞는 해사안전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av서비스 활용 및 SMS 문자발송을 통한 해사안전정보 제공 - 해상사격, 항행장애물, 기상정보 등 각종 항행경보 알림 제공 ○ 해사안전관련 행정정보공개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청 홈페이지-정보공개를 이용한 행정정보, 법령정보 및 공공데이터 개방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내항 여객, 화물운송사업 및 해운대리점업 등에 항행경보(상시) 및 해양사고 예방정보(매월) 홈페이지 게시

□ 배경 및 필요성

○ 「선박안전법」 제74조는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

*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1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연구용역을 통해 결함신고 대상이 되는 감항성의 개념에 대하여 국제협약 및 타 운송수단 사례를 조사하고, 구체화 방안에 대해 검토함

* 포스트코로나 선박검사제도 선진화 연구용역('22.3.~'22.11.)

□ '23년 추진계획

◆ '감항성' 개념의 명확화를 통해 결함신고 대상을 특정하고, 국민 참여 활성화 등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검토

○ 국제협약 및 「항공안전법」 등 유사 법령의 분석('22년 용역결과)을 통해 「선박안전법」 제74조 개정 방안 등 감항성 개념 구체화 추진(~'23.12)

* 법령 개정안 마련은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결과를 반영해 진행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포스트 코로나 선박검사제도 선진화 연구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3	100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수청 홈페이지 결함신고 이용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및 모바일을 통한 신속하고 간편한 신고제도 운영 ○ 결함신고에 따른 법령위반 선박에 대해 행정조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 사실 확인 시 고발, 과태료, 출항정지 등 행정처분 시행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실천본부 경남지역 본부 운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별·대상별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대국민 참여형 프로그램 시행(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명조끼 착용, 소화기 작동 체험, 응급조치(심폐소생술) 실습 등 ○ 해사안전 강화를 위한 공익제고 공익신고제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산청 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선박결함신고 등 공익신고 활성화 추진 및 관련 절차 홍보 등 국민참여 해사안전관리 시행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함선박) 감항성 및 안전설비 결함에 대한 신고사항 접수 ○ (교육) 해사분야 종사자 대상 해양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상황별 해사안전 관리 및 대응 안내 - 해양수산 종사자 대상 집합 안전교육 및 방선교육 실시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제고를 위한 해사안전 신고제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택청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박결함신고 등 국민참여 해사안전관리 - 선박결함 신고제도, 국민안전신문고 제도 등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확대 ○ 항만이용 불편 및 안전관련 민원 전담접수창구 운영

1-2 해사안전 사각지대 관리 고도화

1-2-1 해사분야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어선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전문성 부족 등으로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에 한계 발생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에서 어선원 선내 사고 예방 및 안전·보건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해수부로 관리 일원화 합의('21.11)

-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연근해어업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 시급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시행 예정('24.1.27), 50인 이상 사업장 (대형선망 19개 선단 해당)에는 기 시행 중('22.1.27) 관리조치

□ '23년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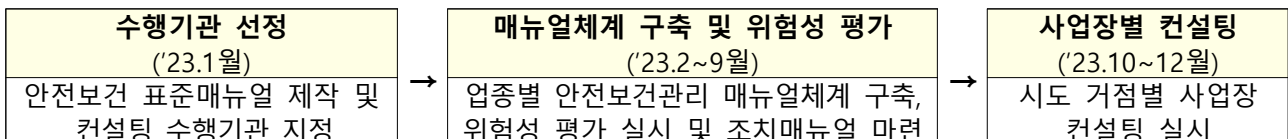
◆ 어선원 선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연근해 어업 업종별*(45개 업종) 안전·보건 표준매뉴얼 제작·보급을 지원

* 어선 4,979척, 어업인 38,906명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21.12.31 기준)

- 위험성 평가 및 매뉴얼 체계 구축 등 컨설팅 실시('23, 10억원)

< 컨설팅 지원 절차 >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선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44-200-6070	1,000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경영책임자등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중대재해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 법 시행 초기 해양수산분야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원활한 이행 및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의식 제고 등 현장 조기 정착 지원 필요

* 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③관계 법령에 따른 개선·시정 등 명령이행,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관리조치

□ '23년 추진계획

◆ 해양수산분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고도화

- (기반마련) 해양수산 분야에 특화된 안전·보건관리 법제 마련을 위해 산업안전 실태조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필요성 등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취약분야 및 정책 발굴 추진

* 기존 법률(「해사안전법」 등)에 해양수산 산업재해 관련 교육제도·안전기준 등 마련 검토(필요시 해양수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별도 법률 제정 추진)

- (정기점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현황 점검(정기, 수시)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관리

- (위험성평가) 관공선 등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통해 위험·유해요인 저감

- (교육·홍보) 중대재해 교육과정* 개설(해양수산인재개발원, 상반기) 및 해양수산분야 설명회 등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관리체계 정착 지원

* (대상) 해수부 담당자 등(교육효과·여건 등 고려하여 산하기관 등 확대 검토)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해양수산 중대재해 예방대책 수립·이행 지원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044-200-6074	400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1,800여건 발생하는 연근해 어선사고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최근 5년간('17~'21) 어선사고는 9,461건, 인명피해는 456명 발생

□ '23년 추진계획

◆ 어선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개정, 어선법 위반 행위 단속, 표준어선형 제도 운영

- (기상악화) 기상특보 발효 시 어선의 조업을 제한하는 기준을 추가하고, 승선하는 인원이 소규모(2인이하 예정)인 경우 구명조끼 착용의무 확대

* 「어선안전조업법」 제10조 기상특보 시 조업제한 근거 신설('22.10.18 공포·시행), 제24조 구명조끼 착용의무 확대('22.10.18 공포 / '25.10.19 시행)에 따라 위임조문(시행규칙) 개정

- (위치통지 등) 출입항신고서에 어선검사 유효기간을 추가하여 어선의 안전성 확보 및 위치통지 미이행 어선을 수색·구조기관으로 통보하는 규정 신설*

*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지체없이 수색·구조기관에 통보하고, 평상 시에는 어선 위치확인 및 단순착오 등을 고려하여 6시간 후 통보(「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 (어선법 위반행위 단속) 불법 증개축, 정기검사 미수검, 설비 규정 및 어선증개업 등에 관한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어업인 경각심 유도

*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도단속팀 구성·운영을 통해 매월 단속(「어선법」 제37조의2)

- (표준어선형 제도운영) 어선의 불법 증개축 요소를 차단하고, 어선원의 안전·복지 향상을 위한 '표준어선형' 제도 운영 및 등록 유도

*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제정·시행('20.12~)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개정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3	-
어선법 단속		044-200-5551	
표준어선형 제도 운영		044-200-5551	

□ 배경 및 필요성

- 우리 부 소유 대중교통수단인 국고여객선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 및 운항안전관리 강화

□ '23년 추진계획

◆ 국고여객선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안전 운항에 대한 본부-지방청 합동점검

- 지방청 해사안전감독관의 월별 지도·감독 계획에 따라 국고여객선 지도·감독 시 본부·지방청·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합동 점검 실시
 - (서면점검) 안전관련 매뉴얼·지침 등의 작성성 및 실질적 이행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확인
 - (현장점검) 승선정원 초과, 화물 과적 여부, 화물 고박기준 및 구명설비 기준 준수 여부 등 현장 안전관리 실태 확인
- (조치계획) 점검을 통해 확인된 지적사항은 현장 시정 또는 기한부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사후 관리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국고여객선 점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8	-

□ 배경 및 필요성

- 민간관리 구역에서의 지속적인 항만근로자 재해발생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요구 증대로 항만당국으로서의 역할 확대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 항만안전특별법 등 안전관련 법규 강화로 인한 리스크가 증대되어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보완

□ '23년 추진계획

- ◆ 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관계기관 협업 강화, 안전보건 물품지원, 안전점검·교육 등 집중실시 등으로 항만 내 무재해 달성 추진
- ◆ 관련법에 따른 항만시설물(취약시설, 노후시설) 안전점검 실시

- 하역사에서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수립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이행여부 확인으로 안전관리 강화(부산)
- 장기계류선박 감척, 계류시설 안전개선을 위한 시설보강(인천)
- 항만시설물(취약시설, 노후시설) 안전점검 실시(여수광양)
 - 드론을 활용한 안전 사각지대* 확인,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항만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정기점검 등) 실시

* 교량 하부시설, 지붕 등 육안으로 점검이 어려운 구조물 및 장소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항만 안전관리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	부산항만공사 (재난안전실)	051-999-8496	4,038백만원 (935백만원)
(수역시설 관리고도화)	인천항만공사 (항만운영실)	052-890-8244	(117백만원)
(항만 안전점검·진단 실시, 안전보건물품 지원, 안전교육 시행 등)	여수광양항만공사 (안전보안실, 항만건설부)	061-797-4482/441 2/4489 061-797-4524/4542	(2,986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및 조치의무 이행 홍보·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제3자 도급 및 위탁 종사자 안전 조치 의무 등을 지속적 홍보 및 안내 강화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안전법」에 따른 사업장 지도·감독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조 등의 의무이행 확인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안전점검관 주관 안전활동을 통한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안전협의체 합동안전점검(매월), 항만안전협의회(분기별), 항만안전캠페인* 시행(반기별)으로 안전위해요소 발굴 및 안전문화 정착 * ① 작업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② 작업장 내 차량/중장비 속도 준수, ③ 보행자 보행통로 이용, ④ 안전장비 착용, ⑤ 위험구역 접근 금지 등 ○ 해상교량 항로 통과에 따른 해상교통 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제2순환선 해상교량(가칭 '송화대교')* 건설 관련 경간계획 및 예비항로 축소변경 협의 등을 통한 통항 선박 안전 확보 * 총 길이 2.85km, 주경간장 300m, 예비항로 240m, '23년 下 착공, '30년 下 준공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사안전관리분야 안전보건지침 및 중대재해예방 대책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청·사업자 간 중대시민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반기·연 1회 이행사항 점검 및 업무수행 평가 ○ 소관 업무에 따른 위해요소 발굴 및 신속한 위해요소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객(중대시민재해) 및 종사자(중대산업재해) 대상 위해요소 발견시 신고·보고 절차 등 홍보 및 안내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터미널 내 전광판과 홍보TV, 배너를 활용하여 이용객 대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용 안전문구·영상 송출(수시) ○ 국제여객터미널의 안전확보를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소방점검 실시(매월 1회) ○ 여객선 이용객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국제여객선·연안여객선 사업자 지도·감독(반기별) ○ 관공선의 주기적 정비로 안전한 순찰업무를 지향하고 관내 사업장 및 시설물의 주기적 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 재해 예방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사안전관리분야 산업·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시설, 여객선사, 항만·어항·부두시설 건설 작업현장 등 소관 법령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 중대재해 소관대상 의무사항 이행점검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청 2023년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따른 사업장 의무사항 이행현황 점검, 안전교육 및 관련내용 홍보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선터미널, 여객선, 항만건설현장, 관공선, 등 해양수산 분야 중대재해 예방 차원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및 정보제공 등 지원 ○ 항만건설현장 등 해양수산 분야 중대재해 예방 차원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및 정보제공 등 지원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건설 현장, 항만 사업장, 관공선 등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 이행현황 점검 및 종합적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수립·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공사현장 등*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여부 등을 중점으로 안전 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여객부두·터미널 공사, 배수로 정비 및 표지시설 공사 등 - 해상(작업) 점검·정비 및 사다리 고소 작업시 작업자의 안전장비 착용 강화 등 관련법 이행사항 점검(상·하반기) - 출항 전 개인별 자가 건강진단 실시, 선내 기관실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및 승선원 맞춤형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자 정기교육 실시(분기별)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등 현장 안전보건 현상점검 강화를 위해 중소선사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관리 및 방선점검 실시 ○ 소형선박(어선 등) 현장점검·교육, 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전문외부기관(수협 등) 협업을 통해 현장 지도·감독 시행
제주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청 홈페이지,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를 통한 신고절차 안내 및 심사·지도감독·방선교육 시 관련사항 적극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 제주 입항선박의 안전운항 도모

□ 배경 및 필요성

- 일반국민의 여객선 이용 시 안전 취약요소를 발굴 및 관리를 강화하여 여객의 인명피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등 여객선 안전 제고 필요

□ '23년 추진계획

◆ 여객선 승선 시 안전 취약요소 지도·감독 강화 및 여객선 운항관리 규정 심사 절차 고도화를 통해 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 (안전 취약요소) 여객선 승·하선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 특히 대형선의 경우 승·하선 시설의 고도가 높아 안전망 부착 등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운항관리규정 심사)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운항관리규정 심사절차 고도화

-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심사를 위한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여 운항관리 규정 심사체계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8	-

□ 배경 및 필요성

- 항만건설에 사용되는 작업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작업자 등의 안전의식 강화 필요

□ '23년 추진계획

◆ 공사관계자 등의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 (항만건설작업선) 항만건설 작업에 항만건설작업선 등을 이용한 해상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 제고 교육 등 실시
 - 공사관계자(시공사, 감리사, 작업자 등)에 공사현장 투입 되는 선박의 검사필요 여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등 교육(상·하반기)
- * 항만 해상건설장비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3억원 / '23년)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항만건설작업선 안전관리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044-200-5957	300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미허가 용접작업) 단속 및 안전 취약구역(봉래동물량장, 대교동 호안) 계도 활동* 강화(월 2회) * 항내 불법 어로 행위 단속, 항행장애물 제거, 항로침범 유무 확인 등 - 가덕수로 등 선박교통 밀집 항로에 대해 유관기관 간 비상체제 유지와 협력 및 훈련을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적극 대응(반기별 2회) -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장기 정박·계류선박에 대한 사고 예방활동 강화(예·부선 규모, 장기 정박목적 등에 따라 유형별 관리)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계류, 소재불명 등 노후·방치된 선박, 장기 선박검사 미수검 대상선박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 위해요소 해소 및 사고 방지 ○ 장기 계류선박 현황의 정기적 모니터링 및 항만시설사용·승낙 일제 정비, 방치선박 등 장애물 제거 * 방치선박 및 무단 장기계류 선박 현황 전수조사 및 이동제거('22년 계류선박 527척) ○ 항로 저수심 구간 유지준설로 선박 입출항 및 통항 안전성 강화 * 제1항로 북측, 내항, 신항 관리부두 등 3개 구간 유지준설('22.12~'23년)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급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하여 선박검사 미수검 선박 대상 현행화 ○ 미수검선박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 이행 - 선박 미운영시 계류신청을 통한 선박 안전관리 도모화 ○ 내항 여객선 및 화물선에 대한 감독 강화, 방선 시 선체·기관·주요설비 집중 점검 및 안전관리매뉴얼에 따른 관리 이행 확인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사고 예방 및 비상상황 대비를 위한 항내 불법행위 근절 및 취약구역 순찰·계도 등 무역항 질서 단속 활동 강화 ○ 장기계류, 소재 불명 등 노후·방치 선박, 미수검 대상선박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 위해요소 해소 및 사고 방지 ○ 마산항 정박지 부근(마산 돌섬)에 설치된 안전관리용 고해상도 CCTV를 통한 마산항 내 전체 정박지 안전관리 강화 ○ 기상악화 대비 항만 건설현장, 노후 항만시설 및 안전 취약지대의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항만기능 유지에 필요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부선, 소형선박 및 위험물운반선 등 취약선 대상 항내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및 누락된 선박 관리 - 위험물 하역 자체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선내 기초안전수칙 준수여부 점검 ○ 장기계류, 소재불명 등 노후·방치된 선박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선박검사 사전안내 강화를 통해 안전 위해요소 해소 및 사고방지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항 내 공사작업에 투입되는 해양사고 취약선종인 예·부선 및 소형선박 등 내항선 대상 항내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 유류돌핀부두 및 황산저장시설 등 위험물 하역·저장시설과 LNG 벙커링 및 위험물 이송작업 등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강화(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선내 기초안전수칙 준수여부 점검 및 시설관리자 자체 안전점검 실시여부 관리·감독(위험물 양·하역 시) ○ 위험물운송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업·단체 간담회 개최 및 관계기관 합동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운영(반기 1회)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령 20년 이상 내항화물선의 취약분야 중점점검 시행(해사안전감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구역 화재사고, 기관 등 결함 발생률이 높은 주요설비, 선체 피로도 등에 대한 중점점검 실시 ○ 항내 운항 소형선박 점검강화 및 안전관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내 운항중인 소형 급수선, 통선, 예선, 기타선 등에 대한 해사안전감독관 정기 지도·감독 추진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수검선박 대상 추적·관리 시행 및 현장 지도·감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계류, 소재불명 등 노후·방치된 선박, 장기 선박검사 미수검 대상선박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 위해요소 해소 및 사고 방지 - 해양사고 취약선종을 대상으로 장기 현장점검 대상에서 누락된 선박의 현장 지도·감독 관리 강화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및 오염 방지를 위한 미수검선박 지속관리(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계류, 소재불명 등 노후·방치된 선박, 장기 미수검선박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 위해요소 해소 및 사고 방지 - 매달 미수검선박 명단 목록 관리 철저 및 사고 방지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작업선 현장투입 전 선박검사 여부 및 종사자 자격 확인 ○ 내항 화물선 대상 해사안전감독관 지도·감독 등 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부선 등 안전규제 완화·면제 선박*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 무인부선의 불법 승선, 계선선박의 불법 운항(유류 화물 적재·이송) 등 - 항만 내 운항중인 통선, 유도선, 예선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 해사안전감독관 현장 지도·감독 실시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공백 등 선박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의 검사유도 등 일제정리 ○ 해양사고 취약선종(부선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대상에서 장기간 누락된 선박의 현장 지도·감독 관리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해 연근해어선 소유자의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재해 어선의 신속한 복구 추진 중('04~)

* 순보험료(톤급별 차등지원) 10톤 미만 70%, 20톤 미만 60% / 부가보험료 75%

- 어선 안전사고 예방 유인책의 일환으로 선내작업 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제도 확대 필요

* (당연가입) 3톤이상 어선(원양어선 제외), (임의가입) 3톤미만 어선, 양식장관리선 등

□ '23년 추진계획

◆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 보장 강화

- 안전사고 피해 저감 및 안전설비 설치 유도를 위해 재해보험 적용 대상,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확대

- 어선원의 추진기 이물질 제거작업 중 발생하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전문잠수사 투입 비용에 대한 보험지원** 추진

* 어선 잠수작업 중 질식, 부딪힘 등으로 사망·실종 19명 발생('17~'21)

** 1백만원 한도로 어선보험 잠수비용 특약 시범사업 추진('23.1~)

- 자동차보험 사례와 같이 안전장비 설치 유도 및 보급 촉진을 위해 어선원 재해보험료의 할인* 적용 대상 확대** 추진('24~)

* 어선별 최근 3년간 사고율에 따라 보험료 최대 50% 할인 또는 할증 적용

** (현재) 구멍뚫목, 바다내비 단말기 등 → (확대안) 현재 + 양망기 원격제어장치 등

- 어업인의 자율적 안전관리 도모를 위해 어선 양망기 긴급정지장치 설치 어선을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 적용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8	133,843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어선원 재해보험 할인*(1~7%) 제도 홍보를 통한 재난보험 활성화** 목표 달성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재해보험 할인 안전설비에 포함 **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전략 1-3 자기책임 강화를 위한 재난보험 활성화 ○ (영세업자)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주요 선박(예인선·수상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 및 현장교육 확대·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출항전 안전점검 등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책임의식 고취

1-3 데이터기반 해양사고 예방체계 혁신

1-3-1 해양사고 위험관리체계 고도화

□ 배경 및 필요성

- 행정·공공기관의 업무지원을 위해 바다 내비게이션 플랫폼을 통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중('21.1~)
- (어업관리단) 어업관리단 지도선(40척) 고유업무인 불법조업 단속 등에 바다내비 플랫폼을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22.8)
- (관세청) 해상 밀수입 예방 및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지원을 위해 바다내비 통합플랫폼을 관세청과 연계

* 우리부-관세청 / 「해양안전·관세국경감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22.7.20)

□ '23년 추진계획

◆ 범부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공유 및 서비스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가 해양안전 통합플랫폼으로서의 활용성 제고

- (밀수입 예방) 전국 항만세관 세관정(26척)에 바다내비 단말기를 설치하여 해상밀수 의심선박을 감시·식별하고 현장 대응에 활용
- (서비스 안정화) 재난 등 비상시*에도 대국민·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제2운영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추진
 - (모의훈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운영센터 장애발생 시 제2운영센터로의 원활한 시스템 전환을 위한 재해복구 모의훈련 실시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해양안전 통합플랫폼 운영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044-200-6030	378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효과적인 해양안전 정책수립 및 해양사고 예방업무에 활용을 위해 해양사고 통계자료의 효과적인 관리·분석·제공 필요
- 내항선사(종사자)의 준해양사고 통보제도* 참여 확대 및 활성화를 통해 내항선 안전운항 및 종사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 필요

* 2011년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안전관리 인력과 역량을 갖춘 외항선사 위주로 참여 중

□ '23년 추진계획

◆ 해양사고 통계관련 정보를 해양사고 위험요인 분석에 활용 가능하도록 맞춤형 제공 및 준해양사고 통보제도 활성화

- (통계정보 제공) 통계의 정책 활용성 제고를 위해 선박 용도별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정책부서*에 맞춤형 해양사고 통계 제공
 - '수상레저기구'를 '비어선' 사고에서 분리하고, '선박등록척수 대비 해양사고 발생척수'로 통합**하여 '22년 「해양사고 현황」 확정 공표
- * (어선) 어업자원정책관, (비어선) 해사안전국, (수상레저기구) 해양정책관
- ** (기존) ①선박등록척수대비 해양사고 발생척수 및 건수현황 ②선박등록현황 공표
- (준해양사고 통보제도 활성화) 준해양사고 사례 공모전 개최 및 내항선·외항선 분야 구분 시상을 통해 맞춤형 교훈사례 발굴 추진
 - 공모전 수상작은 '준해양사고 교훈사례집' 제작·배포를 통해 선사·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계도활동 지원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해양사고통계 개선	중앙해양안전심판원	044-200-6126	22백만원
준해양사고 통보제도 운용	중앙해양안전심판원	044-200-6128	43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수산 분야 재난 예방 및 대응 지원을 위한 정보서비스 운영
 - 선박사고, 해양오염 등 해양수산 재난 중심의 효율적 대비·대응을 위한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구축·운영 중('16~현재)

□ '23년 추진계획

◆ 해양수산 재난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확보

-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운영
 - 연안여객선 안전점검, 해양오염 예방, 해양재난취약시설 등 해양수산 재난정보 및 웹 GIS 기반 재난대응 상황관리 기능 제공
 - 위험물 취급부두 CCTV 연계를 통한 위험물 재난 초동대응 지원
 - 연안 AIS 범위 이외 해역관리(선박사고 예방 등)를 위한 위성 AIS 서비스 등 광역 선박모니터링체계 운영 지원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운영 및 기능개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53	787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기후변화·산업기술의 고도화, 국가기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연간 부산항 내 다양한 재난 및 해양사고 발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재난관리 5 단계(예방·대비·대응·복구)에 대한 신속·정확 대응체계 구축 필요

□ '23년 추진계획

◆ 사고 시 행동매뉴얼 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해양사고 대응 역량 제고 및 안전한 항만 실현

- (재난관리자원 운영) 부산항 재난관리자원 비축 및 관리를 통하여 상시 비상대응·복구체제 유지
 - 재난관리자원 점검 및 현행화 관리, 신규자원(내알콜폼) 및 해상 무인감시정 추가 도입 추진
 - * 오일펜스 1,060m(북항 500m, 신항 400m, 감천항 160m) 유흡착제 1,160kg(신항 1,000kg, 감천항 160kg), 미니소방차 5대(북항 2대, 감천항 2대, 신항 1대), 해상드론(신항 1대)
- (행동매뉴얼 관리)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한 기관 보유 행동매뉴얼 8종* 부산항 특성에 맞게 수시 현행화 관리
 - * 해양선박사고, 해양오염사고, 방사능누출, 육상화물, 감염병, 풍수해, 지진·지진해일, 조수재난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재난안전관련 매뉴얼 및 경비보안 방호계획	부산항만공사 (재난안전실)	051-999-8493	13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피해 저감 대책 수립 및 점검을 통한 예방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발하는 선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책임자 간담회 실시 ○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 유형별 범부처 협력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연수원, 해경, 검사기관 등 범부처 비대면 영상회의 및 교육 실시 ○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사망·실종)가 1명 이상 발생한 선박 및 사업장(필요시)에 대한 수시인증심사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정부의 다양한 해양사고 예방·저감 정책 수립 등을 통한 어선안전 예방활동 강화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 등 어선사고는 지속 발생

* 사고(인명) : ('19) 1,951(79명) → ('20) 2,100(99명) → ('21) 1,786(89명) → ('22) 1,623(78명)

- 어선사고의 발생원인은 안전관리 미준수 등 운항과실*이 대부분, 어선 사고의 효과적인 예방·대처를 위한 선박 안전점검 등 필요

* 어선 해양사고 원인 : 운항과실(76.9%), 취급불량 및 결함(12.7%), 기타(10.4%)

□ '23년 추진계획

◆ 어선사고 인명피해 예방대책 지속 추진으로 어업인의 생명·재산 보호

- (어선안전감독관)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통해 어선 소유주에 대한 선내 안전·보건 조치 의무 부과 및 어선안전감독관** 채용(199명***)·배치

* 「어선안전조업법」 개정(~'23.12) → 하위법령 개정 및 어선안전감독관 채용(~'25)

** 연근해 어선(58,000여척) 현장점검, 어선원 안전교육, 위험요소 발굴·개선 등 담당

*** 지방청별로 1인당 연평균 300척 점검(1일 점검 선박수를 톤급별로 차등화하여 230일(근무일) 동안 2인 1조로 연 1~2회/척 점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

- (출어선 관리) 연근해어선 및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EEZ 출어선에 대한 해상교통통제 등 안전관리 연중 추진

- (안전장비)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에 필요한 법정 어선설비*를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지속 보급·지원

* 연근해어선 대상, 「어선법」 및 「낚시법」에 따른 법정 어선설비 보급 지원(국비 30, 지방비30, 자부담40) 및 양망기 긴급정지장치, 화재 경보장치 무상 보급

- (안전점검) 어선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연2회/3~5월, 10~12월)

* 대상(사·도별 연근해어선 100척 이상) / 점검반(해수부, 지자체, 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

- (처벌강화) 現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추가하여 어선원 사망·실종사고 발생 시 강력한 제재 도입 추진

* ①출입항신고 위반, ②출항제한 위반, ③조업구역 이탈 시 단계별 처분(경고→정지→취소)

- 「어선안전조업법」 및 수산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①고의 또는 중과실, ②빈번한 인명사고 시 어업허가·면허 등 정지·취소제도 도입
- 행정처분의 방법, 고의·중과실·피해정도 등에 대한 판단기준 및 국내외 유사업종* 사례 검토('23)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24~)

* 철도, 항공, 여객·화물자동차, 연안여객운송업, 원양어선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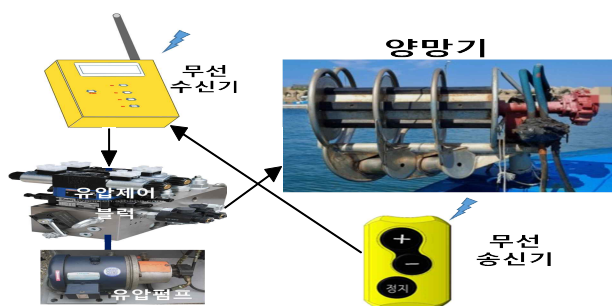
- (양망기 원격제어장치) 기존 긴급정지장치에 무선원격 조정기능을 추가한 원격제어장치*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23)

* 원격 조정으로 양망기 근접이 필요 없어 사고원인 근본적 제거는 물론, 불필요한 갑판 상 이동을 줄여 미끄러짐, 낙상, 추락 등 기타 사고 예방효과도 기대

- 현장점검·실증, 시범사업 및 어업인 의견수렴(설문조사 등)을 거쳐 원격제어장치 홍보, 구입 지원 등 보급 확대* 추진

* 실족·전도 사고 예방을 위한 어구보관함 설치 및 어구적재 매뉴얼 개발연구 병행

< 양망기 원격제어장치 작동원리 >



- (구성) 무선 송신기(정지용·재작동용) → 무선 수신기 → 제어기(제어장치)
- (작동) 작업자가 양망기 근처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양망기의 회전방향, 회전 속도, 긴급정지 기능을 하나의 무선 송신기에 구현

- (어선위치확인시스템) 원거리(100km ↑) 조업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3년까지 근해어선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 의무설치·보급*

* 연안 100km 이상 조업 근해업종(19개) 1,945척 대상, 설치의무화(「어선설비기준」)에 따라 정책 수용성 제고 및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장비값(400만원) 국고보조(70%)

- 위치발신장치 수신율 향상을 위해 어업 지도선에 전용수신기 추가 설치(동·서·남해어업 관리단 각 2척) 및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에 AI를 도입해 조업패턴(항행속도, 조업시간 등) 분석으로 사고예측 등 관리 강화



【 장거리 위치발신장치 】

- (어선원 위치발신장치) 해상추락 또는 탈출 시 신속 구조를 위해 어선원 조난위치발신장치 성능 고도화 및 인프라 구축 추진
 - 기존 개발된 장치의 성능 한계*, 통신비용 발생 등 문제점 개선 및 조업 시 착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소형화·휴대성 제고
 - * ①짧은 통신거리(육지↔해상), ②위치발신 주기 및 작동시간, ③조업 시 휴대 불편 / 100km 이내 LTE-M 통신망, 100km 이상 D-MF/HF 통신망을 활용해 조난위치 송신
 - 실해역검증 및 시범운영('23~'24)을 통해 미비점 보완 후 어선원 위치발신장치 홍보 및 보급사업 실시('25~)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어선안전조업지원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6	19,721백만원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어선안전장비지원)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6	697백만원
어선안전 관계기관 합동점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3	-
인명사고 처벌강화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3	-
양망기 원격제어장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6	250백만원
어선위치확인시스템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3	3,270백만원
어선원 위치발신장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3	250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5년간('17~'21) 선박·해양시설 등 해양오염 사고는 연 평균 271건 발생, 오염물질 342.4kl가 해양으로 유출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건수	271	288	296	254	247
유출량(kl)	229.9	250.9	147.9	770.3	312.8

* 사고원인 : 부주의 35.8% > 해난 30.9% > 파손 24.8% > 고의 6.4% > 미상 2.1%

-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선박·해양시설에 대한 효율적 해양오염예방 지도점검 필요

□ '23년 추진계획

◆ 선박·해양시설을 대상으로 점검·단속 및 교육·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해양오염 사고 예방

- 선박·해양시설 오염물질 배출지도 및 방지설비·시설의 적정운영, 오염물질 수거처리 등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사항 점검

- 유조선, 기름 저장시설 등 고위험 선박·시설 중점점검, 장기계류 선박 기름수거 등 사고예방 조치

* '23년 선박·해양시설 해양오염예방 지도점검 목표 3,820회

-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중유 3.5 → 0.5%), 미세먼지계절 관리제 시행 등에 따라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점검목표 확대

* ('22년) 600척 → ('23년) 800척 → ('24년) 1,000척 → ('25년) 1,200척

- 부주의에 의한 오염사고 저감을 위해 기름이송 작업 안전 수칙 이행 점검 및 교육·홍보 강화

- 오염방지관리인 현장 입회, 타 작업 병행 금지, 이송 전 상갑판 배수구 봉쇄 및 이송호스 상태 확인, 기름받이 설치 등 점검
- 어선, 예·부선 등 영세선박 대상 컨설팅 및 오염물질 적법처리 캠페인 등 해양종사자 대상 해양오염예방 홍보활동 전개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도 예산
선박·해양시설 해양오염예방지도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과)	032-835-2398	286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5년간('18~'22) 해양사고 인명피해(사망·실종) 총 538명 중 선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59.4%(320명) 차지
- 사고 취약선박 대상 인명·빈발사고 예방 및 집중관리 추진 필요

□ '23년추진계획

◆ 안전사고 이력 조사 기반 재사고율이 높은 사고 취약어선 170척 대상으로 집중관리 확대 추진('22년 150척→'23년 170척)

- (안전물품 보급) 안전모, 안전벨트(커터포함), 각반, 손끼임 방지 장갑 등 안전물품 보급을 통한 해상근로자 안전작업 환경 지원
 - * 어구감김, 실족 등으로 인한 해상추락(119명, 38%)이 가장 많고, 나홀로 조업 중 실종(41명, 13%), 어구·구조물 등에 맞음(38명, 12%) 順
- (종사자 교육) 선박 용도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교재 제작·배포 활용을 통해 선박검사·안전점검 시 종사자 현장교육 추진
 - * 수협 어선원 안전조업 교육 시 공단 교육자료 지원 추진
- (교육 프로그램) 지자체 및 수협 등 타 유관 기관에서 시행중인 어선원 대상 집체교육 수단을 활용한 선내 안전사고 예방교육 지원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도 예산
해상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안전실)	044-330-2447	56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예방선의 공적역할 수행을 통한 공공성 강화 및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해양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체계(시스템) 구축 필요

□ '23년추진계획

◆ 해양사고 긴급 대응을 위한 항만예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구난 체계 유지 및 인프라 확보

- 해양사고 구조·구난 적극 대응
 - 8개 해역(해양환경공단 8개 지사)에 예방선을 상시 배치하여 24시간 긴급출동 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유지
- 체계적 구난시스템 및 복합 재난 해양사고 대응체계 구축
 - 해양사고 구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교육과정 개발 등)
 - 해양사고 발생 다중시기 집중 대응전략 마련(예방순찰 방식 및 구조·구난 대응체계 구축 등), 해역·선박용도별 해양사고 대응 매뉴얼 개발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도 예산
해양사고 구조 및 구난	해양환경공단	02-3498-8623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선 특별수송 등 대비 인명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추석 연휴, 봄 행락철, 여름 휴가철, 겨울철 등 여객의 증가에 따른 과승 및 화물 과적의 방지(합동 특별점검 연 5회 시행) ○ 카페리 화물선 승객 및 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계절별 특별점검 시행(12회) ○ 위험물운반선의 화재폭발 방지 및 일반화물선의 하역안전 확보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연중 시행) 시 적극 대응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선종·해역·시기·유형별 집중대책 수립 ○ 정비 부족으로 인한 기관고장, 페로프·어망에 의한 부유물 감김사고 등 단순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교육·홍보 강화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 강화 ○ 선종·시기·사고유형별 맞춤형 해양안전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 및 선박종사자의 해양안전의식 고취 (선박점검 및 ISM 심사시 병행) ○ 카페리화물선 계절별 특별점검 시행(12회), 위험물운반선의 화재폭발 방지 및 일반화물선의 하역작업 사고 방지를 위한 집중 지도감독 강화(연중 시행)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 위험물운반선 우선 점검,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상태 확인 및 점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화물 특성과 취급요령 숙지, PV밸브 작동여부 확인, 선박·육상 간 안전 점검표 작성 및 통신수단 확보, 비상정지 절차 확인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종·계절별 해양종사자 대상 방선 안전 교육 및 안전설비시연 등 맞춤형 현장교육 추진(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종별) 위험물운반선, 여객선, 공사작업선 대상 선상 안전작업 수칙, 인명 안전설비 등 선종별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교육 추진 - (계절별)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을 통한 계절별 사고취약요소 예방 홍보 및 해양종사자 대상 구명소화설비 안전설비 시연 개최 ○ 동해항 수상구역 내 항행안전수역 확보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반 편성 및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기간' 운영(반기별)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피해 저감 대책 수립 및 점검을 통한 예방대책 수립 ○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 유형별 범부처 협력체계 강화 ○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사망·실종)가 1명 이상 발생한 선박 및 사업장 (필요시)에 대한 수시인증심사 추진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에 따른 경북해역 해양안전 강화방안 수립 및 관계기관별 이행상태 확인 ○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기관 협력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화재, 위험물사고 등 해양사고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교류 확대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에 취약한 선박 및 다중이용선박 종사자 대상으로 안전물품 보급 ○ 선내 안전사고 인명피해 저감대책 지속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점검 및 ISM심사 시 선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 절차 마련·이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여 미흡사항 시정조치 요구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선종·시기·유형별 집중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종별(위험물운반선/산적화물운반선), 시기별(가을철/여름철), 유형별(선내 안전사고 등) 집중 관리대상 선박 선정 및 중점관리 강화 ○ 선박화재, 위험물사고, 유류오염, 해상조난사고 등 해양사고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선박 점검 시 방선교육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국내)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도 증대 및 해양사고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내항선 지도·감독 강화를 통한 해양사고 예방 필요

* ('17) 145명→('18) 102명→('19) 98명→('20) 126명→('21) 120명→('22) 92명

- (국외) 해운경기가 불투명*한 가운데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기준미달선 운항증가 우려로 외국적선에 대한 점검 강화 필요

* '23년 해운시황 전망(제41회 KMI 세계해운전망 세미나 자료, '22.11.10)

□ '23년 추진계획

◆ 국적선박의 안전 개선을 통한 인명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 부실 외국적선박에 대한 고강도점검을 통해 시장 퇴출 유도

- (국적외항선박) 3년간 출항정지, 고선령·위험선종, 장기간 PSC 미수검선박은 매분기(약 100척) 특별점검 대상선박 지정·점검 시행

- 아울러, 외국항만에서 출항정지된 선박은 과태료부과, 사업장 수시 인증심사, 회사 CEO 면담* 등을 통해 안전개선 조치

* 안전경영 및 안전투자의 중요성, 회사의 안전시스템 개선·보완, 업계 간 연대의식 제고 등

- (내항선박) 사고우려가 높은 고위험선박에 대한 우선점검 시행 및 중대결함 선박 정보 공표 추진을 통한 안전관리 부실선박 퇴출 유도

- 아울러, 선종별·계절별 위험요소에 따른 취약분야 집중점검을 실시 함으로써 대형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

* (여객선) 계절별 특성을 반영한 민관합동점검, (화물선) 분기별 선종구분 집중점검 등

- (외국적선박) 안전관리 부실선박(HRS: High Risk Ship) 위주로 점검하되, 편의치적선박 및 고선령(30년 이상) 선박 우선점검 실시
 - 아울러,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배출규제(0.5%, 배출규제해역 0.1%) 지속 점검 및 현존선박 에너지효율규제* 시행('23.1) 관련 증서·서류 점검 시행
- * 대기오염방지증서(IAPP) 및 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SEEMP)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국적선박 및 기준미달 외국적선박 안전점검 강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2 044-200-5815	584백만원 328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정부의 다양한 해양사고 예방·저감 정책 수립 등을 통한 어선안전 예방활동 강화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 등 어선사고는 지속 발생

* 사고(인명) : ('19) 1,951(79명) → ('20) 2,100(99명) → ('21) 1,786(89명) → ('22) 1,623(78명)

- 등록어선 중 노후화된 어선(선령 15년 이상)에 대한 화재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해 어선 대체건조가 필요

* 2021년 등록어선(65,531척) 중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은 34,329척(52.3%)

□ '23년 추진계획

◆ 화재에 약한 노후화된 어선(선령 15년이상)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하기 위한 건조비 지원

- (어선현대화) 화재·폭발에 취약한 노후어선을 신조선으로 대체 지원하여 연근해어선의 화재·폭발 사고 저감 추진

* 선령 15년 이상 연근해어선을 신조선으로 대체할 경우, 이차보전(용자 90%, 자담 10%)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6	1,830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단일선체 노후소형유조선 해양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유류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해 이중선저 구조 전환 촉진·지원 필요

* '20년부터 선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중선저 구조 의무화 적용(단일선체 유조선 운항불가)

□ '23년 추진계획

◆ 노후소형유조선 이중선저 전환 촉진을 위한 융자 지원사업 추진

- (융자 지원) 영세한 유조선 사업자의 이중선저 대체 건조 또는 개조 촉진·독려를 위한 건조·개조비 융자 지원*

* 신조 또는 개조비의 70% 융자, 고정금리 3.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5년 거치 10년 상환)

- (사업 홍보) 지원 독려를 위해 수시 사업 설명회 개최, 사업 홍보 업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등 추진
- (단속 강화)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해경 등과 협의하여 단일선체유조선 불법운항 단속 강화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5	1,125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전복, 해상추락 등으로 인한 어선 인명사고의 근본 원인을 차단할 위해서는 관련 안전기준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 인명피해 다발선박, 나홀로선박 등 고위험·안전취약선박에 대한 사고 예방 현장교육, 예방점검 등 맞춤형 중점관리 필요

□ 추진계획

◆ 선박안전도 평가 기반, 고위험선박 전담관리 확대('22년 500척→'23년 600척)

- (고위험선박 중점관리) 취약선박(어선·예인선), 인명피해(2회 이상) 다발선박 등 고위험선박 대상 1:1 전담관리*(Care Ship 프로그램) 강화**

* 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원·연구원 등이 연 2회 방선안전교육, 예방점검 등 실시

** '22년 500척 → '23년 600척 → '25년 700척 → '27년 800척으로 대상선박 확대

- (집중관리·지원 강화) 소형선박 대상 원스톱·정밀검사* 및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인천·목포) 건립·운영('23)

* 선박 및 선박용물건 시험장비 구축, 열화상카메라·내시경 등을 활용한 설비 점검

** 서비스수요, 정책성과 등을 감안, 남해·동해권역(3개소)으로 건립 확대 추진('24~)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도 예산
안전관리지수 기반 고위험선박 안전도 향상 추진 (고위험 선박 대상 1:1 전담관리 및 안전물품 보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안전실)	044-330-2447	289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국통제) 기준미달선 등 안전관리 부실선박 중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주요 출항정지 결함항목에 대한 고강도 상세점검 시행(연중) - 항만 내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화물고박장치 등 하역설비, 화재설비 등 취약분야 반기별 집중점검 ○ 내항 화물선 고위험 선박 관리대상* 선정 및 집중 안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종, 선령, 해양사고 발생 이력, 선박안전관리 활동 결과,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제, 최고경영자의 의지, 선원의 안전관리 교육 수준, 주요 장비 관리 상태 등 ○ 산적액체 위험물운반선 집중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정유사 관리선박(연 1회), 비관리선박(연 2회) 지도·감독 시행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운항여건, 규제 사각지대 등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 선박군 추적 및 집중 지도·감독 시행 ○ 무역항 해상안전 중점관리 지침에 따라 항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 단속기간 운영으로 사고 재발방지 및 법준수 의식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반기 각 1회, 설날·추석 명절 특송기간 등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폭발사고 위험성이 높은 유조선 작업 절차 준수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창 세정절차 준수 . 방폭 장비 사용 여부 점검 - 기초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현장 지도 점검 강화 ○ 위험물운반선 종사자 대상 해양안전교육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운반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해양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선박에서의 위험물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역량 강화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고위험 및 안전취약 등 중점관리 특별점검 대상선박* 에 대한 강화된 기국통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이내 외국항 출항정지된 선박, 선령 15년 초과 위험물 및 산적화물선, T-MOU 고위험선박 중 1년간 2회 미만 수검 선박으로 본부에서 지정·고시(분기) ○ 외국적선박 선박점검체계 구축 및 안전점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선령(30년이상), 고위험등급 선박 및 안전관리 부실 기국·선급 선박을 최우선 점검 대상으로 집중점검 실시 예정 - 결함 지적률이 높은 4대 취약분야(화재, 항해안전, 구명설비, 비상기기)에 대한 분기별 자체 집중점검 시행하고 하반기 STCW 협약 이행 여부 집중점검 실시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령, 지도·감독 이력 등 데이터 기반 고위험 및 안전취약선박 대상 집중 점검 및 지도·감독 시행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해사안전 지도·감독 계획에 따른 안전관리 지속 추진 및 선박점검 강화 (선박 150척, 사업장 30곳)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출항정지·점검 이력, 선령, 규정 위반율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위험군 안전취약선박 선별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점검 실시 - (국적외항선) 특별점검대상선박 등 안전취약 선박 대상 집중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점검(기국통제) 강화 - (내항선) 화물선, 여객선, 공사작업 예부선 대상 연간 지도·감독 계획 수립을 통해 해양·인명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관리 지속 추진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미달 외국적선박 항만국통제 안전점검 강화 - 고선령(30년 이상), 아·태지역 고위험등급 선박 및 안전관리 부실 기국·선급 소속 선박에 대한 중점관리(초기점검 및 국제공조 강화 등)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국, 선급 및 점검이력 등을 감안, 고위험선박 중점점검 - 선령 30년 이상, 최근 2년 이내 출항정지 이력, Tokyo MOU 공표 Black list에 해당하는 국가 및 非IACS 등록선박은 우선점검 및 상세점검 시행 - Tokyo MOU 공표 기준미달선박은 입항시 마다 우선·상세점검 시행 및 주요 결함 출항전 시정 원칙으로 처분 ○ 국적선 중점관리 대상선박 지정에 따른 기국통제 강화 - 최근 3년 내 출항정지선박 및 국제기준에 따른 고위험선박(HRS)의 중점관리 대상선박 지정·공표에 따른 특별점검 및 교육 시행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국통제시 아·태 협의체(Tokyo MOU) 불량국가 및 고선령(30년 이상) 선박 우선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부실선박 중점관리 ○ 해사안전감독관 지도·감독 대상 선정 시, 선령 20년 이상 노후선과 위험화물 운반선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선박 우선점검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국통제) 고위험선박(HRS) 등 안전부실 선박에 대한 우선점검 ○ (기국통제) 국적선 출항정지 예방을 위해 국내항 입항 시 특별점검 시행 ○ (내항선) 출항정지 이력 발생 선종(일반화물선, 예·부선) 대상 지도·감독 강화 - 출항정지 이력 선종 및 관리선박(10척) 대상 집중관리하고 결함지적률*이 높은 3대 취약 분야에 대한 면밀한 현장 확인 시행 * 구명·소화설비, 선체구조, 기관설비가 전체 결함의 약 70% 차지(총 147건 중 102건)
제주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국, 선급 및 점검이력 등을 감안, 고위험 선박 우선·집중점검 - (우선점검) 안전관리 부실선박(HRS: High Risk Ship) 위주로 점검하되, 불량 국가(Black List), 고선령(30년 이상) 선박 우선점검 실시 - (집중점검) 결함지적률이 높은 4대 취약분야에 대한 분기별 집중점검(D-CIC), 외국적선 사고 예방을 통한 관할항만·해역 안전성 확보 ○ 유사사고 발생, 지도감독·인증심사 시 개선사항 및 부적합사항 다수발생(동일 지적 지속발생 포함) 방지를 위한 점검·지원 강화 ○ 선박의 결함신고내용에 따른 현장 확인 및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결함 신고방법 적극안내·안전설비 관리의 효과적 이행 유도

1-4 미래 해사안전관리체계 구축

1-4-1 해사안전관리 전문 자격제도 도입 및 역량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선박의 대형화·침단화 추세에 따라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해사 안전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안전관리자의 역량·책임 강화 필요
 - 해사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원활한 시행과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 추진

□ '23년 추진계획

◆ 선박안전관리사 제도의 원활한 안착 및 안전관리자 역량 강화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 하고,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개최('23.10, 잠정)
 - * 「해사안전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개정('23.1월)을 통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전문 기관으로 지정하고, 시험공고, 시험위원 임명·위촉, 자격시험 실시 등 업무위탁
- (역량·책임 강화)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체계 마련*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업무 이행명령** 제도 신설('23.1월 시행)

* 기존 : 최초 선임 시 교육수료(재교육 없음) → 강화 : 매 2년마다 정기교육 이수

** 안전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설하여 책임 강화(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및 변경선임 요구 가능)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운영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18	750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제도 도입 취지, 업무수행 범위, 선박안전관리사 등급·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등 포함 세부 안내문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대행업 등록 및 내항선 사업장·선박 안전관리체제 심사 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안내문 배포 ○ 선박소유자 및 안전관리대행업자(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포함) 대상 선박 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설명회 개최(하반기)
제주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항선 사업장·선박 안전관리체제 심사 시 자격제도 적극 홍보하여 선사 안전관리능력 제고 등 선사 주도의 관리체제 확산

□ 배경 및 필요성

- 해사 사이버안전에 대한 국제적 관심 확대 및 자율운항 등 해사 분야 Digitalization에 따른 사이버 안전 위협* 증가

* 해킹 등으로 선박 운항통제력을 상실하는 경우 경제적·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

- IMO* 및 관련 산업계는 자체 사이버 안전관리 지침·규정 도입 중

* '21.1.1. 이후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심사부터 사이버 위험관리 고려 권고(IMO, '17.6)

□ '23년 추진계획

◆ 국내 사이버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사이버 안전 관련 인프라·전문인력·기술개발·협업강화 등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 (제도기반) 「해사안전기본법」에 사이버안전 관련 선언적 규정(정의 등) 명시 및 권고 성격의 행정규칙* 제정(~'23.3)

* 「해사사이버안전 관리지침(안)」 / (조문구성) 총칙(정의 등), 정책(대책수립, 실태평가 등), 관리(위험성 식별·보호·대응·복구 및 사고조사) 등 3개 분야 19개 조문

- (사이버안전 대책) 사고 대응체계 및 정보공유센터 구축 등 사이버 위협·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안전 종합대책* 마련('23.上)

- 사이버안전 진단·실태조사·컨설팅, 종사자 교육·훈련, 제로 트러스트* 등을 적용한 보안기술 연구개발(R&D), 전문인력 양성 등 추진

* '무신뢰' 전제의 사이버 보안 모델로 내·외부 인증절차강화와 접속권한 최소화

- (산·학·연 협업) 국내외 동향을 지속 공유하고, 정책 추진방향 논의, 정책제언 및 기관간 협업 강화 등을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23.下)

* 해운협회, 한국·목포해대, 정보보호학회, KMI, KRISO, 한국선급,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사이버보안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18	-

□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기술수준과 경험 분석 등을 통해 원격 선박검사 및 첨단장비를 활용한 검사기준마련 및 국제기구의 논의 주도 필요

* 코로나19로 인해 원격검사의 필요성이 인정('21.10)되고,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기술기준 등 국제적인 논의가 개시(IMO 104차 MSC)

- 원격검사의 경제성 및 신속성을 높이고, 검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국제기준 제시를 통해 해운산업 지원 및 선박안전성 향상 필요

□ '23년 추진계획

◆ 원격선박검사의 경제성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해 검사기준에 관한 국제논의를 주도하고, 국내 원격검사 지침 개정안 마련 추진

- (국제논의) '원격선박검사'의 범위를 정립하고, 원격검사 장비(RITs)의 정의와 검사절차에 대한 기준을 제안하여 국제논의* 주도('23.4)

* 국제해사기구(IMO)의 협약이행전문위원회(III) 의제제출 및 논의대응

- (국내기준) 원격검사 장비·인력 기준, 검사절차 등 원격선박 검사 제도 개선을 위한 지침 개정안* 마련 및 시행(~'23.12)

* 「원격검사장비를 활용한 선박검사지침」 (한국선급)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선박검사 및 심사체계 첨단화 (포스트 코로나 선박검사제도 선진화 연구)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3	100백만원
원격검사 기준마련	한국선급 (기관규칙개발팀)	070-8799-8792	-
심사품질 제고	한국선급 (협약심사팀)	070-8799-8342	-

□ 배경 및 필요성

○ 선박 건조기술 발전 및 친환경선박 수요증가 등 외부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박검사원 전문기술 교육 필요

- 선박검사원 전문기술력 확보를 통한 선박 검사기술 고도화

* 「친환경선박법」 시행(’21.1.1)에 따라 친환경·고효율 선박검사업무 증가 추세

□ '23년 추진계획

◆ 선박검사 품질향상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추진

○ 선박검사원 기술력 향상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 검사원 전공 분야 및 업무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전문교육 실시

* 친환경선박(LNG, 전기, 하이브리드 추진선박), 설계, 구조해석, 국제협약 등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선박검사원 교육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관리실)	044-330-2263	35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국통제 실시 후 식별된 기한부 시정을 요구하는 결함사항은 선박의 요청에 따라 항만국통제관이 원격으로 확인점검 시행 - 아시아·태평양 협의회 항만국통제 점검 절차에 따라 결함 시정을 증빙하는 전자적 증거를 제공받은 경우 선박에 재방문 없이 시정여부를 검증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원스톱 선박검사·심사 및 관리체계 선진화 - 원격검사, 비대면 디지털 항만국통제 및 인증심사 추진 ○ 첨단장비를 활용한 선박검사 및 심사체계 고도화 - 드론, 무인로봇 등을 이용한 밀폐구역 및 사각지대 검사 추진
제주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의 원격화를 적극 도입하여 코로나19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심사지연 발생 최소화(필요시) - 영상회의, 동영상 촬영, 전자문서 활용하여 원격심사 시행하고 사후 선박방문 및 현장확인을 전제로 안전관리증서 교부 ○ 이전 심사 및 지도·감독이력, 사고발생 유무 확인하여 부적합사항 내역·사고 이력의 경중에 따라 선택적 심사 진행 - 원격심사 확대하되, 실시간 영상, 전자문서 등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현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원격심사 취소 후 현장점검으로 전환

1-5 맞춤형 해양사고 안전관리 강화

1-5-1 사고취약분야 안전관리 고도화

□ 배경 및 필요성

- AIoT 기반 선내 무인침수 모니터링 설비와 연계, 선박 설비결함 예측 기능 고도화를 통한 해양사고 사전인지·대응 강화 필요

□ '23년 추진계획

◆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기반 사고 위험도 평가 정보가 유관기관 등에 연계될 수 있는 AIoT CBM(Condition Based Monitoring) 시스템 개발

- (장비개발) 既 개발된 선내 무인침수 모니터링 설비('22년) 기반, 엔진 냉각수·윤활유 온도 감지 센서 등 추가 반영하여 설비 고도화 → 실시간 사고 위험도 평가 → 위험 감지 시 유관기관 정보공유
 - 기관실 침수사고(빌지레벨 감지), 화재·폭발(온·습도 감지), 기관손상사고(냉각수·윤활유 온도 감지), 운항불능상태(연료유 감지) 예방 기능 구현
- (안전성 확보) 개발한 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제품 대상 테스트* 추진

* 온도시험, 내전압시험, 절연저항시험, 전압변동시험, 진동시험, 전자파 적합성 시험, 염수분무 시험 등 추진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AIoT CBM 시스템 개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안전실)	044-330-2331	100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위험화물 취급 부두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및 관리체계의 고도화 이행

□ '23년 추진계획

- ◆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한 항만이용자와의 협력 체계 강화
-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시설물(크레인 속도제어장치) 교체

- 항만 이용자*의 안전관리 협의체 연계를 통한 안전관리체계 고도화
 - '항만 소유자(항만공사) - 이용자(운영사)' 간 안전관리 실적 및 개선 방안 등 공유

* 여수산단 위험안전관리자협의회 : 여수산단지역 부두를 이용하는 8개 화주사

- 컨테이너크레인 안전장치 교체 실시
 - 컨테이너크레인의 속도 제어장치(드라이브, 6기) 적기 교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사고취약분야 안전관리 고도화	울산항만공사 (재난안전실) (항만시설부)	061-797-4483 061-797-4541	3,181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컨테이너 점검) 관세청에 위험물 품목신고 되었으나 부산청에는 미신고된 의심 위험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및 상시점검 실시 ○ (장기적치 컨테이너 점검) 부산항 내 장기적치 컨테이너 불시 점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테이너 소유자의 자체 안전점검 방법에 대한 연간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 해당 소유자(HMM 등 16개사)의 부산항 내 장기적치 컨테이너에 대한 주기적 불시점검 및 안전관리 여부 점검 실시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 위험물컨테이너 안전점검(CIP) 확대(수입 → 수입+수출 위험물컨테이너) 및 미신고 위험물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으로 관리강화 ○ 안전관리가 미흡한 편의치적선 등 고위험 선박을 선별하여 소화·구명·오염 방지 설비 등 중점 점검으로 기준미달선 근절 ○ 위험물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확인 등 위험물 하역현장의 안전 확보, 하역사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점검강화 추진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하역 시 안전조치 이행현황 점검(수시, 집중안전점검 시), 위험물 하역시설 안전관리자 간담회 실시 ○ 합동 안전점검(해양경찰서, 해양환경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및 소유자(운영자 포함) 자체 안전점검 실시(정기, 수시)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테이너 소유자의 자체안전점검방법에 대한 연간 지도·감독 강화 ○ 관할 항만 내 장기적치 컨테이너에 대한 불시점검(반기별 1회) 및 안전관리 여부 지속 모니터링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및 플랫폼 컨테이너 등 종류별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청에 신고하였으나 우리부에는 위험물 신고(PORT-MIS)를 하지 않은 의심 위험화물 대상 집중점검 실시(7월, 11월) - 항만 내 적재되어 있는 접이식 플랫폼 컨테이너 및 현장 여건에 따른 탱크 컨테이너 등 종류별 집중점검 실시(6월, 10월) ○ 임시항해검사로 시운전선박 안전운항 저해요소 식별 및 항행안전 확보, 시운전 금지해역 준수 여부 확인 ○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3대 선내 안전사고(추락, 예인줄, 질식)에 대한 연중 중점심사 및 인명사고 발생 선박·사업장에 대한 수시심사 추진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테이너 안전관리 사업자(‘컨’소유자) 지도·감독 및 불량 컨테이너 사용금지 처분 등 「선박안전법」 및 국제협약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취급 업·단체 대상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 철저 당부 ○ 군산항 내 취급되는 위험물의 현황 및 종류별 특성과 위험도, 취급방법에 따른 안전작업요령 등을 조사 후 데이터 구축 ○ 위험물 반입 신고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반입신고 누락 현황 및 반입제한(화약류, 독물류, 방사성물질 등) 위험물 등의 반입 여부 확인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수검선박 대상 추적·관리 시행 및 현장 지도·감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계류, 소재불명 등 노후·방치된 선박, 장기 선박검사 미수검 대상선박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 위해요소 해소 및 사고 방지 - 해양사고 취약선종을 대상으로 장기 현장점검 대상에서 누락된 선박의 현장 지도·감독 관리 강화 ○ 불개항장 기항 외국적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지속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도, 해남, 신안군 등 불개항장 기항 외국적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를 통해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부적격 선박 출항통제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화물(인화성, 부식성 등) 컨테이너를 우선점검하여 점검 효율성 제고 ○ 표찰부착 및 화물 고박상태 등 주요 식별사항에 대한 집중점검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컨') 화재·폭발사고 위험이 있는 수·출입 컨테이너 점검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 위험물 컨테이너 대상 외관·개방점검을 통한 적합여부 점검 - 관세청에 위험물로 신고되었으나, 평택청(Port-MIS)에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수입위험물 컨테이너 대상 특별점검실시 ○ (플랫랙 '컨') 항만에 적치되어 있는 플랫랙 '컨' 대상 연 2회(상·하반기) 집중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미널운영사 및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과 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 적합여부 점검실시 ○ (항만국통제) 선박점검 시 결함지적률이 높은 4대 취약분야(화재안전, 항해 안전, 구명설비, 비상기기) 집중점검

□ 배경 및 필요성

- 명절 연휴, 봄 행락철, 하계 휴가철 등 여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대비해 연안여객선 특별점검을 통하여 해양사고 사전 예방 필요

□ '23년 추진계획

◆ 연안여객선과 이용객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개연성 사전 차단

- 설날·하계·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 및 봄 행락철(5월 1일 기준), 겨울철(12월 1일 기준)을 대비하여 여객선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 (관련근거)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제4조(운항관리자 점검) 3. 특별점검

- (점검반) 지방해양수산청(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센터(운항관리자), 해경서, 지자체, 검사기관(KOMSA, KR), 국민안전감독관 등
- (조치계획) 점검결과 결함의 경중에 따라 현지시정 또는 기한부시정 조치하고 중대결함 지적선박은 출항정지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연안여객선 특별점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8	-

□ 배경 및 필요성

- 바다에서의 여가선호, MZ세대를 중심으로 소규모·체험위주 레저 추구 경향에 따라, 맞춤형 해양레저 서비스업 제도 시행 중
 - 「마리나항만법」에 따른 마리나선박(2톤 이상) 대여업('15~), 「수중레저법」에 따른 수중레저사업('17~) 제도 도입·관리
 - * (마리나선박 대여업) 201개사, 259척, (수중레저 운송업) 280개사 378척('21년말 기준)
- 요트투어·수중레저활동은 대체로 연안에서 이뤄지고 단기항해 위주이나, 비교적 용이한 창업·등록*에 따른 사고취약 우려 상존
 - * (마리나선박 대여업) 2톤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또는 선박 및 계류시설 확보 (수중레저사업 운송업) 동력수상레저기구 또는 선박(톤수제한 없음)

□ '23년 추진계획

◆ 레저산업 활성화 기반 다짐을 위한 마리나업·수중레저사업 안전 규정 정비 및 안전의식 제고 노력 지속

- (마리나업) 행락철 운항증가 대비 지방청-선박검사기관 사업자 합동 안전점검(연 1회 이상), 대여업 사업자 안전규정 강화 추진
 - 출항 전 안전점검·공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기상악화·해역밀집 등 사고 우려 시 운항제한 근거규정 마련 등 법령개정 노력 지속
 - * 「마리나항만법」 일부개정안 발의('22.6), 국회·관계기관 입법안 검토·논의 예정('23년)
- (수중레저사업) 제2차('23~'27)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인프라·제도개선 세부전략 마련, 정기·수시 사업자 안점점검 추진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마리나업·수중레저사업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57	-

□ 배경 및 필요성

- 여객선의 안전과 출항부터 입항(24h 365일 운항)까지 종합적 안전관리 및 운항 상황 모니터링 개소 확대 필요

*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

□ '23년 추진계획

◆ 지능형 CCTV 설치 확대를 통한 여객선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 '23년도 남해지역(통영, 여수) 지능형CCTV 관측개소(거점지, 주요도서)에 대한 CCTV 확대 설치
 - 운항관리자 미배치지역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의 출항부터 입항까지 종합적 안전관리 및 운항 상황 모니터링
 - '25년까지 거점지 지역별 통제소 구축 완료 후 '26년 현장 CCTV 설치 장소 확대

구분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26년도*	합계
거점지	2 (인천, 목포)	2 (완도, 전북)	2 (통영, 여수)	2 (고흥, 제주)	1 (보령)	-	9
미배치지역 (도서기항지)	2	3	4	4	3	10	26*
합계	4개	5개	6개	6개	4개	10개	35개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지능형 CCTV 설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상황센터)	044-330-2671	495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양선사 사업장 안전관리) 정기적 지도감독 실시(20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의 이행 실태 및 준수 여부 확인 ○ (원양어선 안전관리) 출항 전 승선원 지도·감독·교육 실시(130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항 전 안전점검결과표, 입출항점검표, 항해계획점검표 등 작성확인 및 선원교육 독려 ○ 연안 여객선 및 사업장 지도·감독 및 점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점검(항로별 승선 점검 반기별 1회 이상) - 계절별 및 태풍철 대비 등 맞춤형 집중점검 4회, 휴가철 등 특별수송 시기에 맞는 합동 특별점검 실시(5회) - 운항관리자 정기점검(연 4회, 분기별)을 통한 출항전 안전점검, 노후선 특별 점검 등의 점검실태 확인 강화 ○ 국제 여객선, 사업장 지도·감독 및 크루즈선 안전운항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취항 예정 국제여객선 ('23.예상, 고속선 퀴비틀호 및 쓰시마링크)의 안전한 여객수송을 위한 감항성 확보 필요 - (특별점검) 한일항로 국제여객선(퀴비틀호 및 쓰시마링크호) 신규취항 전 협약 기준에 따른 선박설비 비치·작동 여부 등 안전점검 실시('23.상)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여객선 항로 등 수시 점검으로 안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별 특성을 반영하여 중점 점검항목 등 맞춤형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선박별 특성에 부합하도록 점검반 편성 - 선박안전 및 코로나 19 방역 분야를 중점 점검하고, 이용객의견수렴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항로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개선 * 여객선사 8개사/연안여객선 22척 및 운항관리자 16명 ○ 사고취약 내항화물선박 집중관리체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령 20년 이상 및 사고다발 예·부선, 통선 등 항내 운항선박에 대한 지속적 지도감독 추진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취약선박(노후선박·모래운반선·압항예부선 등)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인증 심사 및 지도·감독 강화로 해양사고 예방 ○ 연안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이용객(중대시민재해) 및 종사자(중대산업재해) 대상 위해요소 발견시 신고·보고 절차 등 안내 ○ 시운전선박 자체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및 잠재 결함요소 발굴을 위한 선박검사관 동승점검 추진(반기별 1회)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항만 내 운항중인 급수선·통선·예선·기타선 등의 소형선박 현황 파악 후 해사안전감독관 정기 지도·감독 시행 ○ 소형선박·위험물운반선(1분기), 우리해역 운항 위험물운반선(2분기), 예·부선(3분기), 기타선박(4분기) 안전관리상태 등 중점점검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련, 공중교통수단 국제·연안 여객선에 대한 점검·감독 강화로 대형 인명·해양사고 예방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여객선) 여객안전 관련 구명·소화설비에 대한 집중 특별점검 및 선원·안전관리사 대상 방선 안전교육 시행 - (크루즈선) 항만국통제절차에 따라 화재·구명설비 상태 및 비상훈련 여부, 항해·기관설비의 주기적 정비여부 등 선박안전점검 실시 - (연안여객선) 선원·선사 대상 운항관리규정 숙지여부, 안전관리 이행실태 등 해사안전감독관에 의한 지도·감독 ○ 선종의 다양화와 업무 노하우 공유 등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지방청간 업무교류 추진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종류 및 운항 형태별 맞춤형 지도·감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별, 선종별(차도선, 쾌속선, 카페리), 명절 및 휴가철 대비 특별점검을 통한 해양선박사고 사전 예방 - 여객선 안전설비시연 및 비상대응 훈련·교육을 연7회 이상 실시함으로써 해양종사자 안전관리능력 향상을 통한 인명사고 예방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선) 한·중 국제여객선 정기점검 및 비상대응훈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점검 및 비상대응훈련(상·하반기) / 자옥란 등 총 5척 ○ (위험물운반선) 평택·당진항에 입출항하는 위험물 운반선을 대상선박설비, 화물관리 및 선원자격 등 집중점검을 통한 대형사고 예방 ○ (내항선) 내항 예·부선 대상으로 지도·감독 및 안전관리체제 심사 강화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선) 승무원과 이용객 대상으로 캠페인 등 해양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통해 안전의식 강화 및 계도 ○ (위험물운반선) 유조선 등 위험물운반선 우선점검을 통해 화재·폭발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점검 ○ (산적화물운반선) 특성을 고려한 화물창·개구부 등 선체구조 상태 및 복원성 계산·자료 숙지 여부 등 선박복원성 분야 중점점검
제주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항여객선 및 내항화물선의 선박, 사업장 및 운항관리자 지도·감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확인을 통한 선사별 자체이행능력 제고, 소화·퇴선훈련 교육 및 소화·구명설비 작동시연 등 선원·종사자 대상 선상 비상대응능력 향상 도모 - 안전관리체제 매뉴얼에 따른 회사, 선장, 안전관리책임자의 책임, 선박의 정비, 비상대응, 안전관리체제 이행도 확인, 선박소유자의 관심도 유도 및 부실관리

□ 배경 및 필요성

- 복합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해양수산분야 재난에 대해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통합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필요

□ '23년 추진계획

◆ 재난매뉴얼 운영·관리 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해양수산 재난관리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체계적 해양사고 대응 및 피해 최소화 도모

- (재난매뉴얼) 재난 매뉴얼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연간계획 수립 및 매뉴얼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한 전면개정 추진

- 재난매뉴얼 개선계획*에 따라 마련된 매뉴얼 상호 연계성 강화, '대응중심'의 조치내용 고도화·구체화 등 개선사항 매뉴얼 반영 추진

* 행안부 주관 매뉴얼 개선 콘텐츠 처리기준('22.3.), 종합개편계획('22.11, 잠정)

- (상황관리역량 강화) 해양선박사고 등 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한 상황전파 지원시스템 강화, 상황전파 훈련 및 관계기관 네트워크 강화

- 선박위치정보의 안정적인 수신·연계를 위해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유지보수,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기능개선 등 추진

- 해양사고 대응역량 제고를 해양수산부(종합상황실)-소속·유관기관(19개) 합동 재난상황보고훈련(분기별) 및 주기적인 상황요원 교육·현장방문 실시

* 지방청(11개),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과학원, 항만공사(4개), KOMSA, KOEM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해양수산 재난관리체계 운영지원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56	200백만원
GICOMS 기능개선, AIS 기능개선·유지보수		044-200-5893	3,506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및 통합 연계훈련 추진으로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비한 부산항 재난대응체계 확립
- 항만 이해관계집단 간 체계적인 정책·사업 추진 및 유사시 신속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필요

□ '23년 추진계획

- ◆ 울산항 유사시 신속한 초동 조치 및 진화를 위해 울산항 이해관계 집단(18개 기관 및 업·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
- ◆ 부산항 재난사고 대비 도상 및 현장 적합형 훈련(안전한국훈련) 실시
- ◆ 관계기관(해경, 경찰, 소방서, KOEM) 협업 훈련 정례화

- 포용적 항만 안전망 구축 및 해상 화학사고 대응체계 완비
 - 민·관·공 정기 합동훈련으로 유관기관 간 유사시 대비태세 점검
 - 재난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8종 개정 추진
 - 임직원 재난대응 역량강화 교육 및 위험물 종사자 순회교육 실시
 - 재난관리자원 보관소(2개소) 운영 및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 정례협의회(기관장, 반기별), 실무협의회(실무자, 분기별) 개최
 - 해양안전벨트 운영계획 공유, 유사 시 대비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
- 각 재난별 대응기관 합동 훈련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훈련역량 강화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재난대응현장훈련 추진	울산항만공사 (재난안전실)	051-999-8493	41백만원
울산항 해양안전벨트	울산항만공사 (재난안전실)	052-228-5435	3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체계적 재난발생 대응을 위한 유형별 상위 매뉴얼(표준·실무) 개정에 따른 소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및 재난대응 수칙 개선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및 조수 대비 위험물 취급업체, 유관기관 및 어촌계 등과 신속한 전파체계(문자 전송서비스) 구축·운영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역량 강화 ○ 항만보안 취약요인 발굴·개선, 항만시설 특별점검 및 교육 강화 ○ 사고 정보의 신속한 공유 및 사고 수습의 효율적인 지원 등을 위한 재난관리 활동의 정기적 통합 점검체계 및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마련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사고매뉴얼 주기적 점검 ○ 자체 매뉴얼 점검을 통한 사고대응 적절성 확인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유형별 상위 매뉴얼(표준·실무) 개정에 따른 소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 여름철(태풍, 호우 등), 겨울철(폭설, 한파 등) 재난예방 비상대책반 구성·운영 및 계절별(해빙기·여름·겨울철) 재해위험시설 등 사전점검 ○ 해양수산부 주관 재난에 관하여 토론·현장 훈련 시행 및 재난안전담당자 대상 재난안전 전문교육, 신규자 및 전입 공무원 대상 신규자 교육 등 시행 ○ 항내 해상교통 질서유지를 위한 해상순찰 강화(연중) 및 항만 내 불법행위(불법어로, 선박 미허가 수리 등) 집중 단속·계도 시행(연2회)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훈련) 선박 화재, 표류 등 각종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훈련 실시 - 과별 임무 및 역할 숙달 훈련을 통한 실전대응 역량 강화(반기별) ○ (매뉴얼) 사고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사고대응 매뉴얼 개정(1회) - 매뉴얼 점검(반기별) 및 훈련 실시 등을 통해 개선 필요사항 도출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 간 공조협력체계 확립, 기관·개인 대응수칙 현행화 및 시의적절한 매뉴얼 개정(표준·실무매뉴얼 개정반영, 비상연락망 등) 등으로 상시 상황대응력 확보 ○ 교통·수송 분야 국가핵심기반 시설(동해·묵호항)의 인적·물적 기능체계 유지를 위한 보호계획(항만방호계획 포함) 수립·이행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항만 내 해상교통 질서유지를 위한 해상순찰 강화(연중) 및 불법행위(불법어로, 선박 미허가 수리 등) 집중 단속·계도 시행(연2회) ○ '동해항 신항만 공사사업' 관련 입·출항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안전협의체 운영 정례화(반기별, 긴급 시 수시)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중요성 등 인식 제고 및 업체 간 정보 교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협조체계 구축 등 ○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서(5개소) 일제점검(연1회)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사고 전주기 매뉴얼 관리상태 확인 및 최신화 유지(연중) ○ 자연재난(태풍, 지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실태점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시설·건설현장, 다중이용시설 및 해양시설 등 사전 예방점검 * 해빙기, 우기대비, 동절기 연 3회 및 하자점검 연 2회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대응절차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매뉴얼 프로그램화 ○ 사고정보의 신속한 공유 및 사고수습의 효율적인 지원 등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전반의 안전수준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모든 안전관리 주체가 참여하는 대한민국 안전대 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 ○ 대형재난 대응절차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프로그램화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산청 해양사고 예방 협의회」를 통해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2차사고 등 사전 예방체계 구축 ○ 충남권역 해양 선박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충남권역 해양 선박사고 예방 연구회」 실시

전략 2

탈탄소 · 디지털화 촉진으로
해양모빌리티산업 선도

□ 해양모빌리티산업 선도국가 실현

- 친환경선박 증서 발급 및 민간 지원사업* 연계, 인증대상 확대 및 지능형 해상 교통정보서비스 추가개발, LTE-M 통신망 개선 등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고도화**

*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21~) : 142.5억원 / 7척 / 선가 최대 30% 지원

** 디지털 통신장비(단말기·앱) 보급, 안전·복지격차 해소, 해상안보 지원 및 저변확대 추진

□ 친환경 기술 개발

- 저탄소(암모니아, LNG)·무탄소(수소) 핵심기술 개발*, 기준마련·제도개선** 및 「국제 해운 탈탄소화 대응전략」 수립, 선박평형수처리설비(BWMS) 기술연구 및 주요부품 국산화

* 암모니아·LNG·하이브리드 등('22~'31, 2,540억원), 액화수소선박('23~'24 예타, 800억원)

** 수소연료전지선박 잠정기준, 전기추진선박 통합기준, 암모니아 배출처리시스템 기준 / 친환경 신기술을 적용한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규제 간소화 등

□ 미래형 선박전환 지원 확대

-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등 신기술 관공선 우선 적용, 친환경선박(LNG, 하이브리드 등) 건조 사업자에 보조금 지원(최대 선가 30%), 주요항만에 LNG 벙커링 단계적 구축

* 울산항 LNG벙커링 설치사업 건설 및 부산항 LNG벙커링, 인천항, 평택·당진항, 광양항 벙커링 셔틀용 접안시설 민자 유치 추진

□ 자율운항선박의 안전기술 개발

-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23, 울산), 인·허가 특례*, 인증 간소화** 등 규제혁신으로 상용화 촉진

* 신기술 선박 시험운항시 특례적용으로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 면제

** 설비인증시 정부의 4단계 절차를 민간의 1단계로 간소화(상용화 기간 1년 단축)

2-1 해양모빌리티산업 선도국가 실현

2-1-1 친환경선박·기자재산업 지원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국제 해양환경규제 강화로 조선·해운산업이 친환경선박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 중 → 신기술 상용화 등을 통한 미래시장 선점 필수
 - 친환경선박·기자재의 품질제고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해 ‘인증제도’* 고도화 및 친환경 신기술 성능검증·실적확보 지원체계 마련 필요
- *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친환경선박 및 기자재의 환경적 개선 효과, 기술적 난이도, 국산화 비율 등의 기준으로 심사하여 (예비)인증서를 통한 친환경등급 부여

□ '23년 추진계획

◆ 국산 친환경 신기술의 상용화 및 시장선점 지원을 통해 친환경 선박·기자재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 (인증제도) 인증서 발급 및 민간 지원사업*과 연계를 계속 추진하고, 인증대상 확대(선박→기자재 포함)를 위한 법제도** 및 포털시스템 개선
 - *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21~) : 142.5억원 / 7척 / 선가 최대 30% 지원
 -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 (상용화) 퇴역 관공선을 친환경 신기술 실증 선박으로 활용하여 성능·안전성 검증을 위한 해상 실증 및 실적 확보 등 상용화 지원
 - * 친환경 신기술 해상 실증을 위한 퇴역관공선 운영, '22~'23, 20억원, 6개 기술 선정·실증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친환경선박·기자재산업 지원체계 구축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8	180백만원
퇴역관공선 활용 친환경 신기술 실증 선박 운영			1,000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제15조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 및 해상교통 효율 증진을 위해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21.1.~)

* 해양사고 예방서비스(실시간 전자해도, 충돌좌초 예방, 해양안전정보 등), 해양안전 편의지원 서비스(통합통신(UC), 어선 자동 입출항신고, 긴급 구조신호(SOS) 발신, 관제구역 안내 등)

- 초고속 해상 무선통신망(기지국 263개소, 송수신장비 621식) 및 전국 서비스 제공을 위한 9개 센터(중앙1·권역6·통신망2) 구축 운영 중

□ '23년 추진계획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추가개발, LTE-M 통신망 개선 등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개선 및 해상안전 증진

- (바다내비) '23년 2.2만척(누적)을 목표로 ①디지털 통신장비(단말기·앱) 보급, ②안전·복지격차 해소, ③해상안보 지원 및 ④저변확대 추진

정책과제	주요내용
단말기 보급	■ 단말기 구입 가격의 50%(최대 154만원) 보조
안전·복지격차해소	■ 맞춤형 교통정보, 응급의료지원, 단말기-모바일 앱 문자 서비스
해상안보 지원	■ 소형선 북방한계선 진·출입 실시간 경보 제공(합참·해경·세관)
저변확대	■ 단말기 다변화(10인치→13.15인치, WiFi 이용), 어탐장치 연계 기능 등

- (서비스 고도화) 바다내비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고 신규 서비스를 발굴·개발하여 서비스 활용성 및 선박 안전운항 강화

- (서비스 개선) 충돌·좌초 등 위험경보 최적화, 사고속보 등 제공 정보 다양화, 해양기상정보 확대제공 등 서비스 효율성 제고
- (서비스 확대) 항행장애물 신고·공유 기능, 유조선 통항금지구역 진입알람, 내항선 응급조치지원* 등 보다 폭넓은 서비스 제공

* 내항선박 응급환자 발생 시 선장 등이 육상 의료인의 지도를 받아 구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원격 응급조치 지원 추진(LTE-M 활용 내항선 응급조치지원 시범사업, '23~)

- **(통신망 고도화)**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의 타기관 연계체계 구축, 데이터 백업장비 도입 및 통신품질 고도화 등을 통한 통신품질 개선
 - 바다내비 운영시스템과 독립된 LTE-M 데이터 연계체계(DMZ망) 구축 및 백업장비 도입을 통한 재해·장애 등 위기대응 강화
 - 실향역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품질 취약해역 식별 및 기지국 신설, 장비보강 등을 통해 LTE-M 통신품질 제고 추진
- **(태블릿형 표시장치)** Wi-Fi를 통해 LTE-M망에 접속*하는 태블릿형 표시장치 보급으로 소형선박 바다내비 서비스 이용활성화 추진
 - * LTE-M망 인증체계 강화 및 LTE-M 송수신기 기능개선 등 Wi-Fi 접속환경 구축
- **(표시장치 다변화)** 서비스 이용환경 및 다양한 이용자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단말기 표시장치 화면 크기 확대
 - * 목포(22.4.20) 및 울산(22.5.3) 현장 설명회 시 이용자 및 전문가들의 화면 크기 확대 요청
- **(소형송수신기 보급)** 소형선박의 바다내비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발한 소형송수신기 무선국(휴대용 송수신기) 지정 및 선박 단말기 보급 추진
- **(이용자 확대)** 바다내비 서비스 확산 및 이용자 저변확대를 위해 바다내비 선박단말기 보급사업(23년 1,445척) 지속 추진*('19~)
 - * (보급목표) : 전체 15,500척, 단말기 구매비용의 일부지원(정액 50%, 최대 154만원)
 - 서비스 및 단말기·앱 기능 안내를 위한 전국 어항 순회설명회 개최, 안내 우편·문자 발송 및 동영상 제작·배포 등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운영·유지보수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044-200-6030	24,470백만원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안정화·고도화		044-200-6233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운영·고도화		044-200-6239	
바다 내비게이션 선박 단말기 보급		044-200-6030	2,425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안정화 및 지속적 서비스 개선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중앙센터와의 업무협의 실시 - 통신품질 취약구역 지속 감시로 LTE-M 통신망 안정성 개선 ○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전략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이용자 밀착형 대면 홍보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이용자 불편 사항 식별 및 통신품질 확인을 위한 실효역 승선 점검 실시, 개선사항 발굴 등 서비스 품질향상 추진 ○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시스템·네트워크 상태 등 상시 모니터링, 관할 기지국(29개소) 합동점검(권역센터·운영사업자) 실시 ○ 단말기 의무설치 대상 선박 현황 조사(반기)를 실시, 설치의무 안내 등 법령 위반 발생을 방지하고 시행 초기 제도정착 도모 ○ 합동(권역센터·보급사업자) 현장홍보 및 안전조업교육 어업인 대상 사용법 교육 등 홍보활동 강화로 단말기 보급 확대 추진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시스템 운영의 고품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 서비스) 바다 내비게이션 시스템 및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한 관할 해역 구조신호 대응 및 상황전파 등을 통해 고품질의 정밀 서비스 제공 ○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활성화) 최신 해양정보 및 최적 안전항로 안내, 서비스 이용 선박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신뢰성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용 활성화 도모 - (이용자 확대) 수협, KOMSA와의 협업을 통해 선주, 선장(선원) 등 서비스 이용 직군 대상으로 서비스 홍보 및 단말기 보급사업 지속 실시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 해양사고 예방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상시 근무체제 유지를 통한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조치 - 사고취약 선박 및 위험물 운반선 등 대규모 오염 발생이 우려되는 선종에 대한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 - e-Nav서비스 이용정보 분석을 통한 품질 개선 - 권역센터 네트워크장비 및 해상무선통신망(LTE-M) 기지국 점검(20개소)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민, 선사, 지자체 대상 단말기 보급사업 현장 및 비대면 홍보를 통한 서비스 이용자 확대(분기별) ○ 해상무선통신망 기지국 현장점검을 통한 통신품질 제고(분기별)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체계 운영 및 안정적인 e-Nav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조난신호 접수 시 사고정보 전파 등 비상대응체계 구축 - e-Nav 운영시스템·설비에 대한 장애복구체계 구축 등 관리·점검 및 해상무선 통신망 기지국 현장점검 등을 통한 시스템 안정화 유지 ○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종사자 집합교육 및 현장캠페인 시 단말기 보급사업 홍보·교육 지속 추진 및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단말기 보급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현장홍보·교육 지속 실시 - 서비스 이용 선박에 대한 실효역 승선점검 등 품질 개선사항 지속 발굴, 현장 의견 수렴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 환류체계 운영
-----	--

□ 배경 및 필요성

- 위성항법시스템(美GPS)의 PNT* 정보는 경제·사회·국방 등 국가의 모든 기반시설에 활용 중이며, 관련 산업시장의 성장·형성 견인

* Positioning(위치), Navigation(항법), Timing(시각)

- 해양분야 또한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 자율운항선박 개발, 전파교란 증가 등으로 고정밀·고신뢰 PNT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 중

□ '23년 추진계획

◆ 선박의 안전항해와 자율운항 등 해양분야 4차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 해양 PNT 기술을 확보하고 산업화 지원

- (서비스 제공)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핵심기술을 적용해 시범 서비스 중이며, 이용범위 확대를 위해 신규 송신국(2개소) 구축(12월)
 - GPS 오차를 센티미터급(<5cm)으로 개선할 수 있는 초기 기술개발* 성과를 지상기반(LTE 등)으로 시범서비스(대산항) 제공(12월~)
- (산업화 지원) eLoran 시범운영('23.1~'24.6)을 거쳐 서비스 품질 확보 및 이용자 확대를 위한 분야별 설명회·간담회 개최 추진(연중)
 - 해양 센티미터급 서비스가 다양한 4차 산업과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을 5cm 이내로 개선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해양측위정보산업 신시장 창출 (eLoran 신규송신국 구축) (해양 PNT 고도화 기술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044-200-5876	40,927백만원 (800백만원) (3,289백만원) (36,838백만원)

2-2 친환경 기술 개발

2-2-1 친환경선박·기자재 안전기준 마련

가. 국내 안전성 시험·검사기준 마련

□ 배경 및 필요성

- (친환경선박) 국제규제 강화로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신기술의 선박 적용을 위한 국가 제도기반은 미흡

- 신기술의 선박 적용과 상용화에 필수인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국산 친환경선박·기자재의 조속한 상용화 지원 필요

* 「친환경선박법」에 따른 '친환경선박 기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수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함(동법 제2조)

□ '23년 추진계획

◆ 국산 친환경 신기술의 조속한 선박 적용 및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국내 안전성 시험·검사기준 조기 확보

- 친환경 신기술의 선박 적용을 위한 핵심기술 국내 기준마련 및 선도기술의 조속한 상용화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수소연료전지 선박 잠정기준, 전기추진선박 통합기준, 암모니아 배출처리시스템 기준 등

** 친환경 신기술을 적용한 선박용물건의 정부 형식승인 규제 간소화 등 제도개선

나. 국제해운 탈탄소화 대응전략 수립

□ 배경 및 필요성

- IMO, 유럽·미국 등 주도의 국제해운 분야 탄소중립 규제*를 활용한 해운·조선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주도 기반 마련 필요

* 미·유럽은 "2050년까지 50% 감축에서 탄소중립"으로 규제 강화 주도

□ '23년 추진계획

◆ 해운(선화주)·조선 상생을 위한 금융·기술개발 지원으로 국제 탈탄소 규제*의 선도적 이행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해운 지원 Package) 친환경 선박 기술 연구개발(조선), 건조·보급(선주), 친환경 선박 이용 화물운송 지원*(화주)을 통한 전환 촉진

* 친환경 선박 용선 화주 대상 녹색금융혜택(저금리 대출 등) 포함 검토·추진 및 RE100 참여 등을 통한 화주의 자발적 친환경 전환 유도

○ (기술개발)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22~'31, 2,540억원) 지속 추진, 액화수소 운송선 건조·실증 등 신규과제* 추진

* 액화수소운송선 건조실증('23~'24 예타, 약 3천억), 대체연료 시험인증('24~'28, 290억원) 등

○ (보급지원) 공공·민간분야 친환경선박 전환('30년까지 528척 : 공공 388, 민간 140) 목표 달성을 위한 보조금, 금융·세제 등 지원

○ (녹색항로) 한-미 녹색항로*('22~'31) 및 EU·아시아 간 녹색항로 구축, 미래연료 생산·공급망 확대** 추진

* 韓부산항-美타코마항 간 녹색항로 협력을 COP27에서 발표('22.11, 이집트)

** (현행) 바이오선박유 실증·도입('23~'25) → (확대) e메탄올, 바이오LNG, 암모니아 등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친환경선박 상용화 기반구축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43	100백만원
국제해운 탈탄소화 대응전략 수립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43	-

□ 배경 및 필요성

○ 해사산업의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고, 항만·선박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이행을 위해 선박 배출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 필요

* 국제해사기구(해사기구)는 '08년 대비 '50년 온실가스 50% 저감을 목표로 초기전략 수립('18)

- 현재 상용화된 저탄소선박 기술(LNG 추진선 등)만으로는 미래 온실가스규제 대응*이 어려워 무탄소선박 기술(수소·암모니아 등) 개발 필수

* 저탄소선박은 온실가스 약 15% 저감 → 무탄소선박 개발로 온실가스 50% 저감 필요

□ '23년 추진계획

◆ 저탄소·무탄소 연료 사용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 (전주기 기술개발) 미래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도할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육·해상 실증을 통해 최종 상용화 달성 추진

* (총기간/연구비) '22~'31년 / 2,540억원(해수부 712억원, 산업부 1,223억원 민간 605억원)

- (해수부) 친환경 선박 활용기술(폐열발전, 림구동 추진기술 등)의 상세 설계, 시제품 제작 및 핵심기술(전기추진) 시험평가 기반 마련(약 113억원)

- (산업부) 중대형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 핵심기술(4행정 엔진, 연료공급 시스템) 및 선박 고전압(직류배전, 드라이버, 컨버터) 기술개발(약 181억원)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43	11,291백만원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044-203-4334	12,845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전지·배터리 등 친환경 선박 추진기술 실증을 위한 시험선박 구축 및 운영데이터 확보를 통한 친환경 연료기술의 상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친환경 연료추진연구본부 등 설립(목포, 남항) ○ 전기추진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을 통한 친환경 선박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수 전기추진차도선(K1호) 건조완료('22년) 및 상용화 예정('23년)

□ 배경 및 필요성

- 선체부착생물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글로벌 신산업 선도* 및 제거작업자 안전확보 등을 위해 관련 기술·제도 등 개발 필요

* IMO는 'GloFouling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착수('19)하여 선체부착 생물(Biofouling)을 차기 해양환경 규제 분야로 본격 논의 중

□ '23년 추진계획

◆ 글로벌 신산업 선도 및 선체부착생물 제거산업 조기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제도도입 및 기술·제도의 국제표준화 등 추진

- (기술개발) R&D('21~'25, 281억원)를 통해 선체부착생물 위험성 평가·관리기술 및 로봇 등을 통한 제거·포집·수송·처리기술* 개발

* (처리절차) 무인로봇을 통한 부착생물 제거 → 제거작업 중 발생한 부산물 흡입 → 후처리시스템으로 부산물 수송 → 수송된 제거부산물 분리/살균 → 폐기물 배출

- (제도도입) 선체부착생물 제거기준·방법 및 제거업을 법제화(고시 제정 등)하여 관련 기술 등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강화

- (국제기준 선도) IMO회의체(PPR, MEPC)의 선체부착생물관련 기준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기술의 국제기준화 유도 및 선점 기회 마련

- 'GloFouling 파트너십 프로젝트' 활동에 국내 연구기관 및 우리 기업의 참여 확대*하여 기술 홍보 및 우호 기반 마련

* 기술동향 논의, 전시·홍보를 위해 IMO Glofouling 3차 (학술)포럼('24.10월경) 유치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선체부착생물 제거·수거·처리의 무인기술 확산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44	4,973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선박평형수 처리기술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세계시장 지배력 강화 및 우리나라 기술에 대한 대외 신뢰성 확보

□ '23년 추진계획

◆ 선박평형수처리설비(BWMS)의 기술력·가격경쟁력·브랜드파워 제고를 위해 기술연구, 주요부품 국산화 및 국제포럼 개최 등 추진

- (기술연구)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기술적 한계를 선도·주도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선박평형수 표본 검사를 시행하고,
 - 설비 개선사항 및 국제협약 개정사항 등을 업계와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 민·관·학 협의체를 구축·운영
- (부품 국산화) '21년 국산화한 핵심부품 8종 중 4종*의 상용화를 신속히 추진하고 추가 부품 국산화**를 통해 제조단가 절감을 유도
 - * 전극 촉매, 솔레노이드밸브, TRO센서(방폭) 및 퍼징유닛(방폭) 개발 등
 - ** 우리부 해양수산 기자재 산업육성 방안에 포함하고 '23년 신규 R&D 기획연구 추진
- (국제포럼 개최) 국제기준에 대한 국내업계의 빠른 적응을 유도하고 국산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친환경선박 포럼 개최(6월)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선박평형수 처리기술 고도화 (선박평형수 표본 검사 및 국제포럼 개최)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44	250백만원

2-3 미래형 선박 전환 지원 확대

2-3-1 공공부문 선박의 선제적 기술 도입

□ 배경 및 필요성

- 공공부문에 친환경선박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관련기술 상용화 및 운영기반 구축 등 민간보급을 위한 마중물 역할 수행 필요
 - 현재는 해수부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친환경 전환 중이나, 타부처, 지자체 등에 대한 지원강화*로 국가 전체로 확산 추진

* 관련 기술·경험·예산 부족 및 기관별 관공선 자체건조·운영으로 어려움 호소

□ '23년 추진계획

◆ 미래 신기술을 공공부문 선박에 우선 도입하여 민간부문 확산 및 기술 상용화를 위한 발판 마련

- (개조지원) 선령이 낮아 대체건조 계획이 없는 기존 관공선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DPF)*를 장착하여 친환경전환 추진

*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 선박 배기가스 내 입자상물질을 필터로 거른 후 제거

- (건조지원) 노후 선박의 대체건조 여부를 객관적·체계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선체 및 기관·특수장비 등에 대한 상태평가 지원

- (설계지원) 체계적·효율적인 친환경 전환을 위해 최적의 표준설계* 및 주요장비 데이터 제공 등 기술 지원용 플랫폼 구축**

* 운항조건(추진방식, 속력 등) 입력시 표준선형을 자동으로 변경 설계하여 제공

** R&D 사업을 통해 대표선종에 대한 설계 알고리즘 개발 완료(~'21) → 시스템 보안성 확보 및 고도화 후 공공선박 건조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운영('22~)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공공선박 친환경 개조 및 상태평가 지원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8	4,360백만원
공공선박 지원 플랫폼 구축			1,100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순찰선 푸르미1호(강화플라스틱선) 대체건조('22.5~'23.12) - 하이브리드(배터리+경유) 또는 배기가스저감장치(DPF) 탑재 주기관 중 선박 톤수 및 선형 등을 고려·선정하고 건조 추진 * (설계) '22.1~'22.7 → (주요장비 발주) '22.4 → (건조) '22.8~'23.12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 청항선 제조·구매 사업 추진('23.10 준공 예정) -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건조하여, 장거리 운항 시 경유를 사용하고 항내 및 부유물 수거 작업 등 저속 운항 시 전기를 연료로 사용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건조 기본방침 결정에 따른 1월 실시설계용역 발주, 10월 건조 추진 - 40톤급 알루미늄 재질의 워터제트 추진방식, 하이브리드 선박 ○ 선박건조 준공 : '23.12 예정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관공선 및 국고여객선 도입 - 선박용 DPF장비* 설치 및 수소, 암모니아, LNG등 친환경연료를 사용한 선박 도입을 통해 선박·항만 미세먼지 저감 * 배출저감설비: 배기가스내 미세먼지 등 입자상 물질을 필터로 걸러 제거하는 설비 - 낙도보조항로 국고여객선 선령 20년 도래에 따른 섬사랑5호(22~23년) 및 섬사랑6호(23~24년) 대체 건조시 친환경 설비(DPF) 도입 추진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순찰선(한우리호) 노후화 및 내구연한('97년 건조)으로 인해 대체선박 추진, '22.10 건조하여 '23.10 준공예정 - 선령 '25년을 대체 기준으로 친환경 관공선으로 단계적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환경규제 강화로 조선·해운시장 패러다임이 친환경선박으로 전환* 중이며, 現시점이 미래시장 판도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

* '25년 기준, 전 세계 신규건조 선박 중 LNG 추진선 51% 차지 전망(출처: Clarkson)

- 한국형 친환경선박(Green Ship-K) 기본계획('20.12) 이행 및 국적선사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으로 탄소중립 실천

* 2050년까지 국제해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 감축 등

- 국내 선사는 가격상승(30%↑), 연료공급 시설부족 등으로 친환경선박 전환에 소극적이므로 정부지원을 통한 자발적 전환 유인 필요

□ '23년 추진계획

◆ 친환경선박 건조·개조 비용 지원 및 세제 혜택을 통해 국적선사의 원활한 미래형 선박 전환 촉진

- (내항선박) 국가에서 인증하는 친환경선박(LNG, 하이브리드 등)을 건조하는 사업자에 선박 건조가격의 최대 30% 보조금 지원 추진

* ('23년 계획) 142.5억원, 7척 / (실적) '21년 3척, '22년 5척

** 해운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선박의 순톤수와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대체

- 선박금융 관련 신규 세제특례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 예타 대응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민간부문 친환경선박 도입을 위한 금융지원(내항선박)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43	14,250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친환경 설비와 디지털 기술을 갖춘 항만 인프라 구축

- 친환경선박의 안정적인 운항 지원을 위해 LNG 등 친환경 연료 벙커링 시설 및 선박 확충 등 공급망 구축

* LNG벙커링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 시설 항만기본계획 반영('20.12, 5개 항만)

□ '23년 추진계획

◆ LNG 선박 보급 확대 등에 대비하여 주요항만에 LNG 벙커링 단계적 구축

○ 울산항 LNG벙커링 설치사업* 건설 및 부산항 LNG벙커링**, 인천항, 평택·당진항, 광양항 벙커링 셔틀용 접안시설 민자 유치 추진

* 울산항 LNG벙커링 터미널('24.3 준공)

** 부산항 LNG벙커링 터미널 민자 유치 추진(~하반기)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044-200-5918 044-200-5919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운항선박-스마트항만-자율주행트럭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 및 항만이용자* 간 항만의 실시간 상황 및 화물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 물류연계망 구축 * 화물흐름 : 선박(선사) ↔ 터미널 운영사 ↔ 세관·검역기관 ↔ 운송업체 ↔ 화주 - 정보화·지능화된 항만시스템을 각 주체별(자율운항선박, 자율주행트럭, 스마트 항만 등) 운송수단과 연계하여 스마트 해상물류체계 마련 - 친환경선박의 안정적 운항 지원을 위한 LNG, 수소 등 친환경 연료 벙커링 시설 등 공급망 구축

2-4 자율운항선박의 안전기술 개발

2-4-1 인공지능기반 항해시스템 개발

□ 배경 및 필요성

- 차세대 무인운항기술의 해상도입 연구촉진 및 선제적 대응 추진

□ '23년 추진계획

◆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개발 추진 및 글로벌 기술 확보

-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23, 울산), 인·허가 특례*, 인증 간소화** 등 규제혁신으로 상용화 촉진

* 신기술 선박 시험운항시 특례적용으로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 면제

** 설비인증시 정부의 4단계 절차를 민간의 1단계로 간소화(상용화 기간 1년 단축)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	044-200-6202	10,090백만원

전략 3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이행계획

□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진화

- 디지털 해상교통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여객선 통항해역을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해역으로 확대하고, 안전진단 기술인력 기준 개선
 - * 「해상교통안전법」(가칭) 제정을 통해 해상교통망의 법적 정의, 해상교통망 구축·관리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 등
 - ** (현행) “길이 100미터 이상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에서의 해양개발행위 등 (개선안)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또는 길이 100미터 이상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에서의 해양개발행위 등

□ 新 해상교통환경 대응체계 구축

- 해상풍력발전단지 등 대규모 해양시설 부근에서의 선박통항 기준 및 안전관리체계* 마련, 자율운항선박 법령 체계** 마련
 - * 보호수역 설정 근거, 통항안전관리체제 수립·심사, 안전점검, 전담기관 지정 등
 - ** 자율운항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실증, 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선 등의 체계적 지원등 포함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법」 제정 ('23.8)

□ 해상교통 정보서비스 운영 활성화

- 제주·동해권 광역 VTS 구축*, VTS 레이더 확충**, 해양기상정보 정확도 제고를 위한 기상관측망(서해남부 해상***) 확충
 - * 통항량 ↑, 사고위험도 ↑ 제주·서귀포해역(~'23), 동해·포항해역('23 착공)
 - ** 새만금 신항만 및 부산 기장해역 관제공백 해소를 위해 레이더 추가 설치('23~'26)
 - *** 위치정보 오차감소(10m급→5cm급, '22~'32, 2,540억원) 초정밀 위성항법기술

□ 스마트 교통환경 인프라 확충

- 차세대 해양 PNT(위치·항법·시각) 기술개발* 추진, 디지털 해상교통 플랫폼 구축**, 해양디지털 항로 실증***
 - * 위치정보 오차감소(10m급→5cm급, '22~'32, 2,540억원) 초정밀 위성항법기술
 - ** 실시간 선박운항 실태, 해양기상, 비상대응, 폐어망 등 항행장애물 현황, 해상풍력단지 등 통항간섭 유발 시설물 운영실태 등 해상교통공간 디지털 통합관리
 - *** 선박항해통합장비 시험규격 설계, 통신연계기술 분석 및 신기술 적용을 위한 통합 플랫폼 설계 등 연구개발

3-1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진화

3-1-1

연안수역 해상교통 안전관리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 증대*, 해양관광 활성화로 여객선·어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안선박의 운항해역에 개발행위 집중

* '30년까지 서울면적 4배의 12GW 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예정

- 운항빈도가 높은 해역을 해상교통로로 지정하고 법정항로·특정해역 등과 연계하는 등 안전운항 공간 확보를 위한 해상교통망* 구축 추진

*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해상교통로 지정)

□ '23년 추진계획

◆ 해상교통로 지정 등 디지털 해상교통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통항밀집도정보 공표 추진

- (법·제도정비) 해상교통망의 법적 정의, 해상교통망 구축·관리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는 등 해상교통망 정책 추진기반* 마련

* 해사안전법 분법(전부개정 : 해사안전기본법 + 제정 : 해상교통안전법) 추진

- (교통현황 조사·공표) 어선·여객선 등 연안선박의 운항실태를 분석하여 해운물류 기능 유지 및 어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해역정보 식별

- 교통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항밀집해역 정보를 디지털 지도 형식으로 공표하여 어민·해상풍력사업자 등 해역이용자와 공유*

* (기대효과) 통항밀집해역 식별로 해상교통·조업안전에 필요한 해역(공간) 확보, 해양개발 사업 시 사업계획단계에서 해상교통을 고려한 입지선정 등 기대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연안수역 해상교통 안전관리체계 구축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0	960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육상*은 교통이 이루어지는 구역을 분리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는 방식의 도로망 관리체계 구축, 해상은 관련 체계 부재

* 도로법,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계규칙 등

- 안전성 평가 결과 정박지가 확대 등 교통환경 개선이 확인되므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평가체제로 전환 필요

□ '23년 추진계획

◆ 연안수역 해상교통관리체계 선진화 및 선박통항로 안전성 확보

- (법 정비) 「해사안전법」 전부 개정을 통한 교통환경 평가체계 도입 등 효율적 해상교통관리 근거 마련(~3월)
- (교통망 관리) 국가 교통망계획 수립, 안전성 평가, 해상교통로 지정 및 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통망법」 신설 추진(3월~)
 - 교통망 지정·운영을 위한 타당성, 운영비 등 기획연구 추진, 해상교통로 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 마련 및 1차 평가 추진(~11월)
- (해상교통환경 평가) 전 연안 수역을 5개 해역으로 구획하고, 10년 주기 해역 및 해당 해역 소재 항만 인근 수역 교통환경 평가 추진(3월~)
 - * 서해중부, 서해남부, 남해서부, 남해동부, 동해 등 5개 해역으로 구분하여 순차 평가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연안수역 해상교통 안전관리체계 구축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교통정책실)	044-330-2310	200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 위험물 취급항만, 좁은 연안수로에 대한 선박통항로 안전성 위해요소 평가('16년)에 따른 개선사항 지속 이행		
	추진 과제	주요 내용	
	동명부두 안전관리 방안	○ (장기) 1부두 용도변경 및 3부두 위치 이전 검토 ○ 3부두 사용기준 마련	
	남외항 정박지 급유 관리방안	○ 남외항 정박지 급유 허용 조건 협의('22.상반기)	
	5부두 및 봉래동 물양장 이전방안	○ (장기) 봉래동 물양장 대체지 선정 및 5부두 물양장 대체지 개발	
	삼한안벽 관리 방안 마련	○ (장기) 일반부두 화물 수요에 따라 확장계획 재검토	
	부산항 부두시설 확충방안	○ (중기) 부산항 부두식별 등화 확충	
마산청	○ '해상안전협의체' 상시 운영을 통한 마산항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으로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 조성 및 선박통항 안전성 확보		
	○ 우리부 「국내 주요항만 선박통항로 안전성 평가 용역」관련 마산청 관내 항만(통영항, 하동항, 옥포항) 의 위해요소 식별 및 개선사항 파악		
	○ 원활한 해상교통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관할 해역 중점안전관리 시행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기간 설정·운영 - 항내 부유폐기물 및 항행장애물 수거를 통한 선박운항 위해요소 제거(연중)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바다 내비게이션)를 활용한 해상교통 안전관리 시행		
동해청	○ 우리 부에서 안전한 해상교통여건을 위한 '국내 주요항만 선박통항로 안전성 평가 관련 위해요소 개선 이행		
	주관	주요 내용	추진계획 및 실적
	항만 건설과	(장기)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공사 완료	'22년 하반기 방파호안(2공구) 공사 추진('22년 3분기) * '22년 4분기 방파호안(2공구) 외곽시설 준공
	항만 물류과	(단기) 묵호항 진입 항로 개선 및 해도 고시	장애물을 제외한 실제 항로 이용 안내(국립해양조사원에 항행 통보 의뢰)('22.12)
		(단기) 항만기본계획 접안능력 준수 및 제한	수심확보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통보('22.10)
		(단기) 항만기본계획 변경 추진	별도 용역 실시 예정('23~'24)
(단기) 항만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별도 평가 수행		-	

	<table border="1"> <tr> <td>(중·장기) 동해항 항로 및 신규 부두 현황을 고려한 부두 운영 방안 검토</td><td>동해항 3단계 공사 추진 경과에 따라 추후 부두 운영 방안 검토 예정 * 선석회의를 통해 선박 입출항 우선순위에 의거 통항(검토 중)</td></tr> <tr> <td>(단기) 동해·묵호항에 대하여 고시된 정박지 등 수정</td><td>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개정('22.12)</td></tr> <tr> <td>(단기) 국외 해도정보 수정 요청</td><td>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개정 후 정보 수정 요청 예정</td></tr> </table>	(중·장기) 동해항 항로 및 신규 부두 현황을 고려한 부두 운영 방안 검토	동해항 3단계 공사 추진 경과에 따라 추후 부두 운영 방안 검토 예정 * 선석회의를 통해 선박 입출항 우선순위에 의거 통항(검토 중)	(단기) 동해·묵호항에 대하여 고시된 정박지 등 수정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개정('22.12)	(단기) 국외 해도정보 수정 요청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개정 후 정보 수정 요청 예정
(중·장기) 동해항 항로 및 신규 부두 현황을 고려한 부두 운영 방안 검토	동해항 3단계 공사 추진 경과에 따라 추후 부두 운영 방안 검토 예정 * 선석회의를 통해 선박 입출항 우선순위에 의거 통항(검토 중)						
(단기) 동해·묵호항에 대하여 고시된 정박지 등 수정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개정('22.12)						
(단기) 국외 해도정보 수정 요청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개정 후 정보 수정 요청 예정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선 출항통제기준 검토 및 개선에 따른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 교통환경 변화 및 선박 기술 발달에 따른 현행 출항통제 제도 재검토·개선에 따른 홍보·이행 ○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통항로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찰선(해양11호)의 해상순찰 활동(연중)으로 불법어로행위 및 질서위반 선박 단속을 통한 무역항 질서 유지 - 침몰선박 관리, 항행장애물 제거를 통한 안전한 통항로 확보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로표지 확충 및 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행 위해요소 저감을 위해 유무인표지 대수선, 방파제 등대 신설1기, 강사 2리항 북방파제등대)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찰선 등을 통한 항만 내 질서위반 선박 계도·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 내 불법어로 행위, 위험물 취급 안전조치 위반 및 미신고·미허가 선박 수리 등 항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사전예방 활동 ○ 내항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해양사고 사례, 기상 악화시 대피요령 등 교육·홍보 실시 및 해양안전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 네트워크*, 해역안전협의회 SNS(카카오톡) 등을 활용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해상교통망 구축 추진 및 해상교통 현황도 분석을 통한 밀집해역 식별 및 해역 안전관리 이행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등 해상교통안전정보의 활발한 공유체계 확립을 통한 밀집해역 안전성 증대 						

□ 배경 및 필요성

- (출항통제) 해상교통환경 변화, 선박안전기술 발달 등을 고려하여 현행 화물선 출항통제 기준('91.도입)에 대한 적합여부 검토 필요
- (해역관리) 해상교통로 지정 등 연안해역에 대한 공간적 안전관리 체계 도입에 따라 국가의 관리책임 범위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

□ '23년 추진계획

◆ 통항정보 분석 및 디지털 트윈기반의 관리체계 구축

- (출항통제기준) 기존 선박 출항통제기준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실선 실증 테스트 실시* 및 자율운항 등 신기술 보급에 따른 출항통제기준 개선방안 검토(~'23상)

* 「화물선 출항통제기준 검토 연구(2차)」('22.4.23~'23.4.22)

- (디지털 트윈)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해상교통관리, 기상·안전 정보 분석·제공 등 디지털 트윈* 기반의 관리체계 구축

* 실시간 선박운항 실태, 해양기상, 비상대응, 페어망 등 항행장애물 현황, 해상풍력 단지 등 통항간섭 유발 시설물 운영실태 등 해상교통공간 디지털 통합관리 추진

※ 해상교통망 관리체계 구축 총사업비(약 2천억원 내외) 산출 등 **타당성 용역**(~'23.12, 2억원)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디지털 해상교통망 구축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0	200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화물선 출항통제 기준 도입('91년) 이래 국내 교통환경의 변화에도 현행 기준 유지 중
 - 연안해역 내 선박 특성, 선박 통항량 등 해상교통환경 변화 및 해양사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기준 재검증 필요
- 현행 음주 운항 규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운전 선박, 수상 호텔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현행 음주 운항 기준 정비 필요

□ '23년 추진계획

◆ 현행 해사안전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고도화·정상화하여 선박 운항 안전 확보

- (출항통제) 항내 운항선 출항통제 기준 신설, 일반화물선의 출항통제 대상 항만 범위 확대(무역항→연안항) 검토(하반기) 및 현행 규정 실증(~'23.3)
- (음주 운항) 다른 교통수단과의 음주운항 단속의 형평성 및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대상 선박 확대** 등 개선 추진('22.3~)

* 도로교통법 → 자동차, 원동기,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 항공안전법 →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항공기(행글라이더, 기구, 무인비행장치 등)

** (기존) 선박안전법 및 어선법에 따른 어선 → (개선) 모든 선박(시운전 선박 포함)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통항로 선박안전운항 여건 개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교통정책실)	044-330-2310	-

□ 배경 및 필요성

- 침몰선박 현장 실태조사, 잔존유 제거작업 등을 통해 해양사고로 침몰된 선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양오염사고 예방

* 사업추진 절차 : ① 현장 실태조사 대상선박 선정 → ② 현장실태조사 → ③ 잔존유 확인(1단계) → ④ 잔존유 회수(2단계)

- 해양사고에 기인한 선박 및 표류물(원목, 컨테이너 등)을 방치할 경우 2차사고(오염, 양식장 피해 등) 피해가 크므로 신속한 수거·처리 필요

* '20년부터 해양수산부 용역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해양환경공단에서 용역수행 중

□ '23년 추진계획

- ◆ 해양환경 위협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침몰선박 현장 실태 조사 및 상세 위해도 평가(5척), 잔존유 제거사업(2척)을 추진

* 잔존유 확인작업을 통해 실제 잔존유 유무를 확인하고 잔존유 유량 계측 및 샘플 분석 등을 실시하고 효과적인 회수방안 도출

- ◆ 해양사고 발생으로 파생되는 2차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행장애물 발생 시 긴급 대응기반 구축(정립) 및 예방활동 인프라 구축(확충)

- 침몰선박 현장 실태조사 및 상세 위해도 평가(5척) : 침몰선박 현장 영상탐사 및 환경조사, 위해도 평가 관련 정밀 문헌조사 등

- 잔존유 제거사업(2척) : 현장조사 및 위해도 평가 결과에 따라 침몰 선박의 연료유 수거 위해도 저감 대책 실시

- 항행장애물 제거 및 예방활동

- 어선 통항로, 여객선 항로 등 부유물 감김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해역에 대한 집중 예방활동 및 어업인 인식증진 활동 강화

- 항행장애물 제거사업 DB등 활용 인프라 확대
 - 바다내비 APP外 수협 조업정보알리미 APP에 관련 DB정보 구현
 - * 해양환경공단과 수협 간 관련업무 추진에 대한 검토 협의 중
- 민·관·공 협업 활성화 및 복합재난 대비 공동 대응역량 강화
 - 해수청, 지자체,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등 항행장애물 제거 관련 유관기관 협업 강화
 - * 사고발생 가정, 유관기관 협업 복합재난 공동 대응훈련 시행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항행장애물 제거사업	해양환경공단	02-3498-8623	1,135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항 입·출항 선박의 항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조도 방파제등대(2기) 개량 예정 * 표체 개량(철거 후 신설) 및 증고(동·서단 6.0m→12.0m) 추진 ○ 무인표지 도장, 등부표 인양정비, 낙동강 등주 정비,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 및 선박수리 용역 등 기능 강화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통항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과제 발굴 및 용역 적극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수 해역 통항로 안전성 개선과제 관련 선박 운항 데이터 활용 - 해상풍력단지 조성 관련 사전 선박 항로 안전 등 적정성 검토 ○ 여수·광양항 중점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 내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 강화, 선박수리 및 공사작업 허가조건 확인 철저, 불법 어로행위 단속, 장애물 제거 등 ○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사업 추진 및 침적폐기물 수거·처리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항선(해양환경공단 위탁) 및 항만순찰선을 통해 해상부유물을 확인·수거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전문업체가 운반·처리 ○ 유관기관, 지역사업체 및 지역주민과 합동 정화활동 실시, 타 정화활동에도 인력·장비 등 적극적 지원 추진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환경정화 활동으로 항행 장애물과 바다쓰레기 제거를 통한 해양환경 보전 및 통항안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합동 해양정화활동 : 월1회 취약지역(방파제, 바닷가 등) 수거활동 시행 ** 1사 1연안 가꾸기: 연안지역 업·단체(44개사)의 자율적 해안 정화활동 지원 ○ 침물선박 및 방치폐선 관리강화 등 주기적 순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 분류, 소유자 확인, 제거지시 및 미확인 선박 행정대집행 처분(분기별 1회/수시 점검실시) ○ 항만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개항 질서위반 사범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항 해상안전 중점관리 지침에 의거 자체 계획 수립·운영 - 선박통항에 지장을 미치는 어업 시설 즉시 강제 제거, 일출·일몰시간 주말 등 취약시간대 순찰 실시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선석 방충재 교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충재 타입 교체 및 유지·보수를 통한 선박 이·접안 사고예방 ○ 불법어로 합동단속 및 계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별 불법조업 지도·단속 실시를 통한 해상교통안전 질서 확립 ○ 순찰선 운용을 통한 무역항 수상구역 내 질서위반사범 계도·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어로행위 등에 대한 단속 추진 및 항만순찰선 순찰 강화 ○ 군산·장항항내 순찰 및 무역항 특별단속(반기1회) 시 여객선 항로 중심으로 불법어구 등을 수거하여 사전예방 실시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공선, 청항선(해양환경공단)을 통해 해상부유물 상시 확인 및 수거실시 ○ 외국적선박 불개항장 기항을 위한 허가조건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적 선원의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육상감시원 상시배치 및 방역지침 철저이행 조건부 기항 허가 ○ 부유쓰레기 및 불법양식시설 등 통항안전 위해요소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찰선 및 청항선(2척)을 통하여 해상부유물 상시 확인 및 수거 실시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통항로 확보를 위한 기준 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항 선박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선박통항 최고속력에 대한 지속적 홍보 추진(수협,조선소,예선업체 등) 및 단속방안 검토 ○ 적극적 해상교통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무역항 중점관리 지침 마련·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합동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기간 설정·운영 - 항내 부유폐기물 및 항행장애물 수거를 통해 선박운항 위해요소 제거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개발 계획, 입출항 선박 및 물동량 증가 추이 조사, 어업세력 분석 등 추진을 통한 장기과제 지속 추진 타당성 확인 ○ 확장된 항계 밖 정박지 변경사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반영·고시 ○ 주항로 일부구간 및 동·서부두 인근 저수심구간 준설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친환경 에너지 확대 정책, 해양관광 활성화로 여객선·어선 등 연안선박의 운항이 빈번한 해역에 대한 개발행위 증가
 - * 해상풍력 9개소('22) → 229개소(타당성 조사중), 마리나 8개소('22) → 79개소('29 예정)
- 해상풍력단지 등 일부 해양 인프라의 입지 예정지가 여객선 항로에 위치하는 등 해양개발로 인한 연안선박의 안전운항 환경 저해 우려

□ '23년 추진계획

◆ 여객선 통항해역을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해역으로 확대하고, 안전진단 기술인력 기준 개선을 통한 안전진단 대행업체 경쟁력 강화

- (안전진단대상확대) 해양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여객선 통항수역 등에 대한 진단대상 확대 검토(3월~)
 - * (현행) "길이 100미터 이상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에서의 해양개발행위 등
(개선안)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또는 길이 100미터 이상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에서의 해양개발행위 등
- (진단대행업)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체 공정성·경쟁력 강화를 위해 등록요건 완화* 및 감독·교육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1월)
 - * 유사경력 인정, 일정기간 보조급 종사자의 선임급 승급조건 및 책임급 대체자격 신설
 - **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적정 수행 여부를 점검(진단서 기준 미달 시 수시 지도·감독)하고, 신규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마련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 강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0	-

□ 배경 및 필요성

- 해상풍력단지, 마리나 항만 조성 등 신규 해양개발 추진에 따른 항행장애물 증가로 연안수역 내 해양사고 위험성이 가중
- 신규 해양개발로 인한 해상교통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고자 현행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소 주기 관리체계 강화 필요

□ '23년 추진계획

◆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 사업 확대, 안전진단 기술 인력 관리체계 개선 등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 강화

- (제도 관리) 안전진단 사전 컨설팅, 본 진단, 진단 후 개선대책 이행 확인 등 사후관리를 모두 포함한 전문기관의 소 주기 관리(지속)
- (진단 대상 확대) 해상교통 영향 정도가 높은 소규모 해양개발 사업 등에 대하여 안전진단 대상 확대 및 진단 재시행 근거 마련(~9월)
 - * 여객선에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및 안전진단 재시행 근거 마련 등
- (진단대행업)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행업 등록요건 완화* 및 업체 감독·교육 강화** 등 제도개선(~9월)

* 유사경력 인정, 일정기간 보조급 종사자의 선임급 승급조건 및 책임급 대체자격 신설

** 정기 지도·감독 수행, 신규업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마련 등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 강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교통정책실)	044-330-2310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상교통안전진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저케이블, 해상풍력단지, 플로팅도크 등 대상 사업진행 중 중대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 - 해상교통, 안전, 해양환경 및 주변 어민들의 생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해상교통안전진단 협의 진행

3-2 新 해상교통환경 대응체계 구축

3-2-1 해상풍력발전단지 교통안전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보 정책으로 전국 해상에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급격하게 증가* 예상

* 16.5GW 규모의 풍력단지가 연안에 조성 시 8MW 발전기 2,000개 이상 설치 예정

- 해상풍력단지 등 대규모 해양시설 조성이 해상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한 해역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23년 추진계획

◆ 해상풍력발전단지 등 대규모 해양시설 부근에서의 선박통행 기준 및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해상교통 안전확보

- (풍력단지)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에 따라 풍력단지 조성 시 입지적정성에 대한 국내외 기준*을 고려하도록 안전진단제도 운영(계속)

* 입지조건, 항로와의 이격거리 등은 선박의 조정성 및 인명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과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PIANC)에서 제시한 기준 등 고려

- (제도기반 마련) 보호수역 설정 근거, 통항안전관리체제 수립·심사, 안전점검, 전담기관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양시설 안전관리법」 안의 타당성 검토(~8월) 및 입법 추진('23下~)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해상풍력발전단지 교통안전 강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0	100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내 해상풍력발전단지 고려항목 추가(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관내 풍황계측기 허가 18개소 중 9개소 설치완료 (EEZ 8, 영해 1) ○ 해상풍력 등 대규모 해양시설로 발생할 수 있는 해양교통안전성 저해 예방 및 단지 내부·인근에서의 통항관리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황계측을 위한 부표 설치(공유수면 점사용) 단계부터 부근해역 선박 통항량, 해상교통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가하고,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되는 경우 철저한 해상교통안전진단 수행 ○ 해상교량 건설 시 해상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철저한 통항 안전성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지도록 유도(제3연륙교, 송화대교)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해상풍력발전단지 주변 대체항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풍력발전단지 위치 선정시 선박통항안전, 경제성, 해양환경 등의 요소를 고려한 해상교통안전평가 진행 - 기존항로와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 안전운항을 위한 대체항로 개척 ○ 대규모 해양시설 및 부근해역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유관기관 및 업·단체와의 충분한 업무협의를 통한 해상풍력발전단지 안전관리체계 구축 * 해당 지자체, 해상교통안전진단기관, 해경 VTS, 목포청, 여객선사, 어촌계, 수협 등

□ 배경 및 필요성

-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위한 국내법 정비 및 자율운항선박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

□ '23년 추진계획

◆ 자율운항선박 국내법 체계 마련

- 자율운항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실증, 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선 등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 제정 추진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법」 제정 ('23.8)

【 법령 제정안 주요 내용 】

- ▶ 자율운항선박, 자율운항 지능화 시스템, 원격운항센터 및 원격운항자 등 정의
- ▶ 시범운항 해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법 제정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	044-200-6202	-

□ 배경 및 필요성

- 항만과 선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원천 차단을 위한 감시활동 고도화 및 시설물 개선사업 이행

□ 추진계획

- ◆ 유해위험요인 유입 차단을 위한 감시활동 고도화
- ◆ 항만보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안장비(CCTV) 개선

- 유해위험요인 유입 차단을 위한 감시활동 고도화
 - 광양항 보안감시센터 확대 이전, 드론을 활용한 지능형 감시체계* 구현
 - * 드론을 활용하여 보안 사각지대 및 위험구역에 대한 감시활동 이행
- 항만보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후 및 저화질 CCTV 교체(20대)
 - * CCTV 기능 개선(130만 화소 → 200만 화소)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스마트 항만 운영 활성화	여수광양항만공사 (재난안전실) (항만시설부)	061-797-4487 061-797-4543	2,291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시설·장비 지속 확충 및 보강 - 경비초소 및 보안울타리 보수, 노후된 보안·방호 장비 교체, 보안 가로등 정비 등으로 보안시설·장비 상시 가동태세 철저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보안 및 사이버 대응 강화 - 항만 내 통제·제한구역의 지정 및 시설물 출입통제 강화 - 국가핵심 기반시설의 안전점검, 항만방호 계획 및 복구대책 등 주요 시설 보호계획 수립 - 대테러 대상시설 합동점검 실시(하반기) - 항만보안 시설·장비(종합감시시스템, 차단기 등) 유지보수 집행계획 수립

3-3 해상교통 정보서비스 운영 활성화

3-3-1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안정화

□ 배경 및 필요성

○ 국제 해양분야의 디지털화 추세에 따라, 세계 최초로 시행 중인 바다내비 서비스(21.1~)의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핵심기술 개발 추진

- 국가·지역별로 개발된 디지털 해사서비스의 국제규모 공동실증 및 초단파 대역 데이터 교환시스템(VDES*)의 국가 차원 원천기술개발 필요

* (VDES, VHF Data Exchange System) 초단파 데이터교환 시스템으로 자동식별장치(AIS), 해상메시지(Application Specific Message, ASM), VHF통신(VHF Data Exchange, VDE)으로 구성

□ '23년 추진계획

◆ 우리나라 해양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국제 해양디지털 항로 실증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 VDES 장비 국산화, VDES 기반 제공 서비스 개발 및 시험검증 환경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 선박항해통합장비 시험규격 설계, 통신연계기술 분석 및 신기술 적용을 위한 통합플랫폼 설계 등 연구개발사업 추진

* 해상디지털 항로 실증 기술개발(R&D, '23~'28, 119억원)

○ VDES 기반 서비스 현황 및 단말기 구현을 위한 기술기준 분석, 핵심 부품 설계, 선박·육상·위성 간 통신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사업 추진

* 국제표준기반 지상파-위성 통합 VDES 체계 기술개발(R&D, '23~'26, 200억원)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해양디지털 항로 실증 기술개발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044-200-6245	1,190백만원
차세대 해양디지털통신(VDES) 기술개발		044-200-6239	1,300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안정화 및 지속적 서비스 개선방안 모색<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품질 취약구역 지속 감시로 LTE-M 통신망 안정성 개선 등 통신품질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으로 취약구역을 식별·개선하는 환류체계 구축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이용자 불편사항 식별 및 통신품질 확인을 위한 승선점검 실시 개선사항 발굴 등 서비스 품질 향상 추진○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 시스템·네트워크 상태 등 상시 모니터링, 관할 기지국(29개소) 합동점검(권역센터·운영사업자) 실시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안정화<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화) 통신망·기지국 설비의 현장점검을 통한 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요원의 교육·훈련 등을 통한 역량 강화로 서비스 전문화 도모<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지국 점검) 관내 강릉, 동해 등 26개소 전수점검(반기별)** (전문교육) 본부 운영요원 교육계획 및 자체 직무교육에 따른 교육·훈련 실시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차세대 해양디지털 통신기술 확보 및 고도화<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형 e-Nav 구축사업을 통해 디지털 교통정보 빅 데이터 확보 및 디지털 해양교통정보서비스 핵심기술을 지속 개선○ 최적의 디지털 바다내비 서비스 제공<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운항자에게 사고, 기상 등 실시간 안전정보 제공으로 해양사고 예방 <table><tr><th>구분</th><th colspan="2">서비스 종류</th></tr><tr><td rowspan="2">해양사고 예방 지원</td><td>① 실시간 전자해도 제공</td><td>③ 실시간 해양안전정보</td></tr><tr><td>② 충돌·좌초 예방 지원</td><td>④ 항로안내 지원</td></tr><tr><td rowspan="4">해양안전·편의 지원</td><td colspan="2">① 문자·음성·영상 통합통신 (선박↔선박, 선박↔센터 간)</td></tr><tr><td colspan="2">② 자동 입·출항신고(어선)</td></tr><tr><td colspan="2">③ 긴급구조(SOS) 요청 기능</td></tr><tr><td colspan="2">④ 관제구역 안내</td></tr></table>	구분	서비스 종류		해양사고 예방 지원	① 실시간 전자해도 제공	③ 실시간 해양안전정보	② 충돌·좌초 예방 지원	④ 항로안내 지원	해양안전·편의 지원	① 문자·음성·영상 통합통신 (선박↔선박, 선박↔센터 간)		② 자동 입·출항신고(어선)		③ 긴급구조(SOS) 요청 기능		④ 관제구역 안내	
구분	서비스 종류																	
해양사고 예방 지원	① 실시간 전자해도 제공	③ 실시간 해양안전정보																
	② 충돌·좌초 예방 지원	④ 항로안내 지원																
해양안전·편의 지원	① 문자·음성·영상 통합통신 (선박↔선박, 선박↔센터 간)																	
	② 자동 입·출항신고(어선)																	
	③ 긴급구조(SOS) 요청 기능																	
	④ 관제구역 안내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 의견수렴, 보고 등 지속적인 환류○ 안정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망의 지속적인 점검 및 확인○ 단말기 보급사업 홍보와 동시에 바다 내비게이션 설치, 사용법 안내 병행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조난신호 접수 시 사고정보 전파 등 비상대응체계 구축<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다내비 운영시스템·설비에 대한 장애복구체계 구축 등 관리·점검 및 해상 무선통신망 기지국 현장점검 등을 통한 시스템 안정화 유지○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배경 및 필요성

- 항만에서 연안으로 이어지는 광역 선박교통관제체계 구축으로 출항에서 입항까지 전 운항과정에 대한 연속적 안전관리 체계 마련

□ '23년 추진계획

◆ '26년까지 제주(제주·서귀포)·동해(동해·포항) 연안 및 군산 새만금, 부산 기장해역에 선박교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VTS 설치 추진

○ 연속적 해상교통관리를 위한 제주·동해권 광역VTS 구축

- 선박통항량 많고 사고위험이 높은 제주권(제주·서귀포), 동해권(동해·포항) 해역에 광역VTS 구축(제주권 23년 구축완료, 동해권 23년 착공)

* 제주권 구축설계('20) → 설치공사('21~'23), 동해권 구축설계('21~'22) → 설치공사('23~'25)

○ 촘촘한 관제망 구축을 위한 VTS 레이더 확충

- 군산 새만금 신항만과 부산 기장해역의 관제공백 해소를 통한 해양사고 예방기능 강화를 위해 레이더(2개소)를 추가 설치

* 구축설계('23~'24) → 설치공사('25~'26) → 관제운영('26년 末)

【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해상교통관제서비스 고도화 (광역 VTS 구축) (고성능 레이더 설치)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032-835-2285	8,294백만원 (8,178백만원) (116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해상활동 증가로 해양기상정보에 대한 국민요구 증가 및 레저정보 등 맞춤형 해양기상정보에 대한 수요 증가

* 레저선박(척): ('19)23,639→('21)24,932/여객수송실적(천명): ('19)14,585→('21)11,464

- (필요성) 해양종사자 및 관계기관의 해양위험기상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선제적·정확도가 높은 기상정보 제공 필요

□ '23년 추진계획

◆ 해양위험기상 감시 및 안전한 해상활동 지원을 위해 맞춤형 해양기상정보 확대 및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 (정보 제공) 사용자 편의 강화를 위해 GIS 기반의 (신)해양기상정보포털 운영 및 해상·해안 여행객 맞춤형 해양기상서비스 확대

- 섬, 해상국립공원, 등대 등 여행지 대상 맞춤형 '여행' 서비스 추가(11월)

- (관측망 확충) 해상 안전 지원과 위험기상 감시를 위한 해양기상부이(10m 1대, 3m 1대) 설치 및 서해남부해상에 제3 해양기상기지* 구축

* ('05) 제1기지(북격렬비열도) → ('21) 제2기지(덕적도) → ('23) 제3기지(안마도)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해양기상종합정보시스템 운영	기상청 (해양기상과)	042-481-7413	994백만원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기상청 (관측정책과)	042-481-7342	14,173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해역 해양기상 악화(풍랑주의보, 풍랑경보 등) 시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관내선사 등 기상악화에 따른 안전관리 철저 요청 ○ 유관기관(대구지방기상청 등) 협업을 통한 선제적 기상정보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특보(강풍·풍랑 주의보, 경보 등) 정보 수신 시 기상정보 전파

3-4 스마트 교통환경 인프라 확충

3-4-1 차세대 항법 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독자 항법시스템이 없어 산업 전반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PNT* 정보를 해외 GNSS(위성항법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

* Positioning(위치), Navigation(항법), Timing(시각)

- 국제기구(IMO, IALA)의 GNSS 의존도 증가와 취약성 경감을 위한 보조항법(<10m)과 자율운항 등에 필요한 고정밀 측위성능(<10cm) 요구

□ '23년 추진계획

◆ 국제기구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차세대 해양 PNT 기술을 개발하고 고정밀·고신뢰 항법체계 구축

- (해양 PNT 고도화) 현재 미터급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을 고정밀(5cm 이내)로 개선하여 자율운항선박, 해양측량 분야에 제공
 - 위성항법 수신환경 품질개선을 위한 위성기준국(48개소) 정밀좌표 산출 및 통신망 보강 등 추진('23.1~)
- (위성항법시스템) KPS 전용 주파수·메시지 채널 확보* 및 전세계 전파 항법시스템 항해장비로 인정받기 위해 IMO 승인 추진
 - * 해상서비스를 위한 무선 기술위원회: 주파수 및 메시지 채널 확보 의제 제출·협의
- (고신뢰PNT 인프라 확대)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의 이용범위 확대를 위해 신규 송신국(2개소) 개량(12월)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해양측위정보산업 신시장 창출 (eLoran 시스템 개량) (해양 PNT 고도화 기술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044-200-5876	25,441백만원 (800백만원) (3,289백만원) (36,838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미래 해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인 움직임에 따라 해양 광역 인프라인 항로표지에 대한 디지털·표준화 기술개발 추진
- 해양분야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기존 아날로그 체계에서 디지털 항로표지 역할변화 및 확대 필요

□ '23년 추진계획

◆ 해양정보 수집·제공을 위해 확장이 용이한 다목적 해양 플랫폼 및 항로표지 정보를 표준화 시스템 개발

- (시설 고도화) 해양정보 수집·제공을 위해 확장이 용이한 다목적 해양 플랫폼 개발, 다양한 해상통신 인프라를 활용한 다중모드 통신체계 구축
 - * 확장성 모듈, 전용 전원관리기술 및 다목적 대형 등부표 개발(22억원)
 - ** 다중 통신모듈(AIS, LTE-M, NB-IoT), 지능형 플랫폼, 실해역 검증기술 등 개발(25억원)

- (정보체계 표준화) 기존 분산된 항로표지 정보를 표준화 및 디지털화된 통합형 정보협력시스템으로 재정비

- 수집된 정보를 빅데이터화하여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개발

* 품질관리기술, 정보협력시스템, 정보표준(S-201) 개발 등(22억원), 해상 정보를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해양 기초정보 서비스 개발(5.5억원)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스마트 항로표지 개발 (현장시설 고도화) (디지털항로표지 정보협력시스템)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044-200-5879	7,450백만원 (4,700백만원) (2,750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량) 부산항 입·출항 선박의 항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조도 방파제등대(2기, 1,100백만원) 개량 예정 * 표체 개량(철거 후 신설) 및 증고(동·서단 6.0m→12.0m) 추진 ○ (정비) 무인표지 도장, 등부표 인양정비, 낙동강 등주 정비, 항로표지 관리 운영시스템 및 선박수리 용역 등 기능 강화(1,760백만원)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통신 환경을 고려한 탈착 가능한 항로표지용 이동통신 모듈과 통신 연동 기술 개발, 송·수신 정보를 분석하여 항로표지의 체계적인 관리 추진 ○ 스마트 항로표지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정보를 빅데이터화하여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개발 및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항로표지시설 실시설계 및 안전진단, 항로표지 신설 및 개량을 위한 시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표지 운영효율 극대화를 위한 주기적인 점검·정비 - 남해권역(여수청, 목포청, 진도소, 마산청, 제주단) 노후 부표류 적기 교체 ○ 광양항을 입·출항하는 대형 선박의 안전 강화를 위한 등부표 시인성 개선(2차) 추진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로표지 기본계획'에 따른 항로표지 확충 및 실시설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충) 풍여등표(남해), 곡룡포항방파제등대(통영) - (설계) '24년도 신설 등표 (3기) 및 대병대도등표 태풍 피해 복구(1기) ○ 항로표지 시설물 구조 안전확보 및 기능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에 따른 저도등표 개량 및 홍도등대 정비 - 노후화된 항로표지 대수선 및 관리운영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등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중방파제(주전항) 시인성 강화 및 선박안전을 위해 등표 설치 ○ 정밀안전진단(온산항남방파제등대 등 4개소) 실시, 교체 시기(2~3년) 도래한 부표(7기)의 정기교체 추진, 원격감시·관리운영시스템의 전문업체 위탁용역 추진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지시설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 종사자대상 중대재해협의체 운영 및 항로표지 확충, 개량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된 항로표지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해상교통 안전확보 * 수산항 등대, 수산항 북방파제 등대 총 2개소 - 해풍·해무 등으로 주간표지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에 대한 정비 및 노후 장비 개량 등 항로표지 기능개선 추진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로표지(등표 1기)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소요예산: 무녀도동단등표 설치공사('23. 2 ~ 8(6개월)) ○ 노후 항로표지시설 정밀안전점검용역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소요예산: 소항경도등대 등 5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23.2 ~ 6.(4개월)) - 사업내용: 콘크리트 품질시험, 구조물 상태 및 안정성 확인, 보수·보강공법 제시 등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용역 시행(등대 8기) ○ 등표(4기, 28.5억) 및 무인등대(3기, 10억) 등 수중암초 및 항행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항로표지 신설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행 위해요소 저감을 위해 유무인표지 대수선, 방파제 등대 신설, 동고등대 리모델링 등 항로표지 확충 및 개량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체형 등명기를 활용한 점검·정비 효율 제고 및 표준 SW 적용 확대로 표준화·디지털화된 통합형 정보 협력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관리 항로표지) '21년 64기 → '22년 76기 → '23년 87기(예정)
제주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로표지 기능(등질, 위치 등) 및 시설물 기초상태 확인, 항로표지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소화 및 전원설비 등 ○ 무인표지, 항로표지관리실(3개소), 항로표지선(1척) 안전점검 실시

□ 배경 및 필요성

- 세계 최초 e-Nav 상용화('21.1)를 통한 국제 사회의 입지를 바탕으로 해양디지털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위한 국제협력 여건 조성
- 국가·지역별로 개발된 디지털 해사서비스의 국제규모 공동 실증 필요

□ '23년 추진계획

◆ 연구개발 사업 추진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해양디지털 항로 실증 및 해양디지털 국제표준화 공감대 형성

- (연구개발) 선박항해통합장비 시험규격 설계, 통신연계기술 분석 및 신기술 적용을 위한 통합플랫폼 설계 등 연구개발사업 추진

* 해양디지털 항로 실증기술 개발('23~'28, 119억원)

- (컨퍼런스 개최) 아·태지역 해양디지털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해양디지털 신기술 국제표준화 공감대 형성 등 국제협력 기반마련

* 제7회 해양 디지털 국제컨퍼런스 / '23.9 / 세종(잠정)

【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해양디지털항로 실증 기술개발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044-200-6245	1,190백만원
컨퍼런스 개최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044-200-6245	300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VTS에서 생성되는 정보에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 토대 마련*

* (VTS 빅데이터 기술개발) 빅데이터 표준 플랫폼 및 응용 시스템 개발('19~'23)
(클라우드 VTS 기술개발) 관제 데이터를 통합하여 공유 가능한 표준 플랫폼 개발('21~'23)

□ '23년 추진계획

◆ VTS 빅데이터 기반 미래 예측기술 및 전국 관제정보를 공유하는 통합 클라우드 플랫폼 등 디지털 해상교통안전 기술 개발

- 해상교통관제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미래 예측 기술개발
 - VTS에서 생산·수집되는 데이터(레이더, VHF 등)를 저장·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관제지원* 기술개발 및 시범운영
 - * 위험상황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반 주의선박 식별·혼잡시간·정박 대기시간 예측 기술
- 분산된 관제정보를 중앙에서 통합·공유하는 클라우드VTS 개발
 - 전국 VTS가 수집한 각종 해상정보(레이더, CCTV, AIS 등)를 중앙 서버에 수집·가공·처리하는 클라우드 개발 및 시범운영
 - * 클라우드 센터 설치 및 관제데이터 수집 검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디지털 해상교통망 구축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032-835-2337	4,042백만원

전략 4

실생활 중심 해양안전
교육 · 문화 정착

□ 환경 다변화에 맞춘 해양안전 교육 인프라 확대

- 해양안전 체험시설 운영 확대*,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 운영** 및 해양안전 이러닝 활성화***

* 해양안전체험관(안산): 선박탈출, 선박경사체험 등 20여종 프로그램 운영
국민해양안전관(진도): 해양생존체험, 해양직업체험 등 13종 프로그램 운영

** 여객선 화재발생시 비상탈출, 구명뗏목 작동 및 탑승 방법 등 가상현실(VR) 체험

*** (e-Learning) 생존기술, 구명뗏목 사용법 등 온라인 교육 콘텐츠·과정 개발 및 웹사이트 운영

□ 생활 속 해양안전 실천문화 확산

-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체제 유지·감독의무 부과, 노후선 교체 및 선박 유지관리 등 안전투자내역 공시제도* 도입, 구명조끼 무상보급**·착용 캠페인 중점추진

* 여객선사, 위험물운송선사 대상 시범운영(2년간 시행유예), 성과분석 등을 거쳐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해사안전법」 전부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 마련, '23.上)

** 1인 조업어선(706척, ~'23)→1·2인 일반선박(313척, ~'24)→2인 조업어선(14,167척, '25~)

□ 맞춤형 해양안전교육 강화

- 이론중심에서 사례·실습중심*으로 개편, 자문단**을 구성해 취약선박(어선·낚시어선 등) 안전교육 내실화 방안 마련

* 어로작업 기본수칙, 사고사례, 시뮬레이터·VR장비 활용, 구명뗏목 작동·탑승 등

** 조업안전·선박안전·인적과실 등 해양수산업분야 안전 전문가 8인으로 구성

□ 국민 참여형 해양안전문화 홍보 강화

- '해양안전의 날'·'어선안전의 날'(매월 1일) 계기 안전문화 진흥운동* 전개, 기관 공식 SNS 운영 활성화 및 맞춤형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제공 추진

* 해양안전실천본부(전국 12개) 중심, 해수부·해경·지자체·수협·해양수산업단체 등 참여

** 분기별 안전주제어 공모 이벤트, "해양안전실천서약" 이벤트 등

4-1 환경 다변화에 맞춘 해양안전 교육 인프라 확대

4-1-1 체험중심 교육시스템 개발 및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해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 체험시설 구축·운영 등 체험형 해양안전교육을 확대 시행할 필요

□ '23년 추진계획

◆ 대국민 해양안전체험 등을 위한 체험 인프라 전국적 확대

- (해양안전체험시설) 일반국민의 해양안전교육 및 비상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해양안전체험시설(①해양안전체험관(안산), ②국민해양안전관(진도), ③해양레저안전체험관(부산)) 구축·운영
 - 향후, 해양안전체험시설과 주변의 다양한 해양 관련 인프라를 연계하여 권역별 해양안전클러스터 구축 계획, 대국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종합적 해양안전문화 정착 기반 마련
-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 대상, 홈페이지 신청을 통한 차수별 해양안전교실 운영
 - 구명조끼 착용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의 내용으로 구성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해양안전체험시설 운영지원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9	3,518백만원
해양안전교육 및 해양안전문화인식조사			140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여수청	○ 해양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초·중·고등학생 대상 해양안전체험시설(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등)을 활용한 체험·맞춤형 교육실시('23.5~'23.11)			
마산청	○ 해양선박사고 대비 비상대응 훈련 시 구명·소화설비 작동 시연 및 체험으로 해상종사자 관심 제고 및 교육 실효성 향상 도모(연 3회) ○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항행안전 리플렛 및 안내서 제작·배포(수시)			
동해청	○ 항로표지관리소(등대)를 활용한 해양안전 의식 습득 - 청소년 대상 '등대해양학교', '찾아가는 등대교실' 해양안전문화 공간 마련 및 체험 기회 제공('23.4~11) * (대상/운영시설) 강원도 초·중학교 30개교 700명 / 묵호·주문진·속초 등대 ○ 해양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양문화 및 안전의식 함양 - 청소년의 해양의식 함양, 생존수영·선박탈출 등 안전 대응능력 제고 등을 위해 해상순례·탐사, 해양안전 가족캠프 운영 * (대상/장소) 청소년 300여명 / 강릉시 청소년해양수련원			
군산청	○ 전북권 초·중·고등학생 대상 해양안전 체험교육 실시 - 시·청각 자료, 안전설비 시연 실습으로 해양안전교육 효과 증대 * (대상/장소/내용) 전북권 초·중·고등학생 / 부안 해양안전체험관 / 선박모형 만들기, VR체험, 안전설비 시연 등 ** 세부계획 4-3-3(해양안전교육 협력 거버넌스 강화) 연계			
목포청	○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의 단계적 확대 - 여객선 터미널 내 구명뗏목 및 구명조끼 사용법 등 체험부스 상시운영 ○ 가상현실(VR)을 통한 해양사고 간접체험 및 비상대응요령 학습			
평택청	○ 종사자 집합교육 시 구명뗏목 작동방법과 시연, 화재 시 대응요령, 구명조끼 착용법 등 실습·체험 위주로 구성하여 진행			
대산청	○ 충청바다학교(계속)			
	운영 기간	'23.5~11월	접수 기간	'23.3월 중
	참여 대상	충청권역 초·중·고등학생 1,000여명	교육 횟수	총 20회
	운영 계획	참여 학교 선정 후 유관교육기관 협조운영	지원 사항	프로그램 교육비 및 교재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MZ세대 출현 등 스마트 시대에 대응하여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새로운 해양안전 교육환경 제공 필요
- VR·AR를 통해 현실에서 체험이 어려운 해양사고 및 재난사고를 체험하도록 하여 해양안전교육의 시·공간적 한계 해소

□ 추진계획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해양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교육·훈련 환경 조성

-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 스마트 해양안전교육 환경 조성
 - VR·AR 기술을 활용한 해양안전 콘텐츠* 개발·활용해 스마트 해양안전교육환경 조성에 기여
 - * 여객선 화재발생시 비상탈출, 구명뗏목 작동 및 탑승 방법 등 가상현실(VR) 체험
 - 교육기관 대상 VR장비 대여 시스템 등 새로운 해양안전 교육 환경 확산을 위한 방안 마련
- (해양안전교육) 해양안전 이러닝(e-Learning) 활성화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학습하는 해양안전 이러닝 교육 콘텐츠 및 커리큘럼 개발* 추진
 - * 해양안전 전반, 여객선 승선, 해양생존기술 등의 교육영상 및 온라인 해양안전교육 문제은행식 시험을 통한 학습 확인 등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해양안전교육 및 해양안전문화인식조사 (온라인교육프로그램 구축·운영)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9	432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시행에 따라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구축 및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21.1.30~)
- 내실있는 서비스 운영 및 제공을 위해 바다내비 중앙·권역센터 요원의 업무능력·리더십 등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필요

□ '23년 추진계획

◆ 운영요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본직무·직무보수 및 관리자교육 실시, 교육·훈련 영상 신규제작(8편)

- (직무교육) 운영요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①기본 직무교육, ②시스템 장애대응 등 보수교육, ③센터장 및 선임요원 대상 관리자교육 실시
- (영상제작) 비대면으로 실시되는 기본직무·직무보수교육 강의 교육 영상 신규 제작(전문 스튜디오 활용)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바다 내비게이션 전문가 양성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044-200-6142	47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대국민·종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경각심 제고 및 자발적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체험형 교육·홍보 콘텐츠 마련 필요
- 피해예방과 생존에 필수적 요소에 관한 반복적 학습이 가능하고 습관적 안전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활용 기회 확대 필요

□ '23년 추진계획

◆ 가상현실(VR) 콘텐츠 개발→활용→개선→반영의 환류 과정을 통해 콘텐츠 품질을 지속 개선 및 신규개발·환류·개선

- (콘텐츠 개발) 최근 5년간('18~'22) 해양사고 발생 주요원인 및 주요 해양레저 사고 인명피해 유형 사례에서 주제 선정으로 2종이상 개발
- (콘텐츠 활용) 해양안전교육포털 및 유관기관 요청 등에 따른 콘텐츠 상시 임대(제공) 및 해양관련 안전 박람회(엑스포) 등 협력을 통해 다수의 국민 체험 기회 확대 및 홍보 추진
- (콘텐츠 개선) 체험자·유관기관·지자체 등 설문조사·의견수렴을 통한 콘텐츠 개발 및 품질개선에 환류 반영
- (기준) 1:1 VR체험 교육, 3D그래픽영상 → (추진) 1:多(다중) VR 체험 교육, 실사기반 영상으로의 전환 추진
- * 체험객 불편사항(대기시간, 체험 중 어지러움) 및 그래픽 구현 한계점 개선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해양교통안전 가상현실(VR) 콘텐츠 개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교통정책실)	044-330-2581	90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해운물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신사업분야인 자율운항선박의 종사자 교육체계 마련 필요
 - 자율운항선박 분야 원격제어실무 및 기초실습 교육과정 등 개설·운영

□ '23년 추진계획

◆ 자율운항선박 추진시스템 등을 포함한 자율운항선박 인력 양성 교육과정 추진(교육인원 10 X 연간 4회 운영 = 총 40명 교육)

- 자율운항선박 2개 교육과정 운영
 - (원격제어 실무교육) 자율운항 및 원격제어 추진 시스템 실무, 배전시스템 이해 및 시뮬레이션 실습 등으로 구성
 - (원격제어 기초실습교육) DP(Dynamic positioning) 시스템 개요·구성·기능, 자율운항 친숙화훈련, 자율운항선박 최신동향 등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신기술(자율운항선박) 교육체계 마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미래해양교육혁신추진단)	051-650-5412	-

□ 배경 및 필요성

- 스마트 체험장비를 활용하는 새로운 해양안전 교육환경 제공 필요
 - VR기술을 통해 현실에서 체험이 어려운 해양사고 및 재난사고를 체험하도록 하여 해양안전교육의 시·공간적 한계 해소
 - 스마트 체험장비를 활용하는 새로운 해양안전 교육환경을 조성해 스마트 해양안전 시범학교 도입에 대비

□ '23년 추진계획

◆ 스마트 체험장비와 기술을 활용한 해양안전프로그램 개발 및 환경 조성

-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 스마트 해양안전교육 환경 조성
 - VR 체험장비와 해양안전교육 VR 콘텐츠를 구축·개발하여 스마트 해양안전교육에 활용
 - * ('22) 이안류 발생 시 대처방법, 밀폐구역 작업 안전수칙, 어선 줄 타격사고 예방 등
 - 체험시설(교육기관) 대상 VR장비 대여를 통해 스마트 해양안전 교육환경 확산 및 접근기회 확대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교통정책실)	044-330-2581	-

4-2 생활 속 해양안전 실천문화 확산

4-2-1

일/생활-학습 연계 해양안전의식 생활화

□ 배경 및 필요성

- 해상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인식 부족, 위험불감증 등으로 해상추락 등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지속 발생

*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369명) 중 해상추락(123명)이 가장 많이 발생(33%, 연평균 21명), 사망자 대부분(90% 이상)이 구명조끼 미착용

- 무상보급, 기술개발, 의무화, 대국민 캠페인·홍보* 등을 중점·지속 추진하여 구명조끼 착용을 해양안전문화로 정착 필요

* 도로교통분야 자동차 안전띠의 경우, 단계적 착용 의무화('81~'18) 추진 및 30년 이상 다각적 교육·캠페인·홍보·단속 등을 통해 착용률(앞좌석) 90% 수준 달성

□ '23년 추진계획

◆ 나홀로조업어선(총 350여척) 구명조끼 무상보급

- (무상보급) 해상추락 시 자력구조가 곤란한 나홀로조업선 팽창식 구명조끼 우선 보급(~'23) 후 기타 취약선박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 1인 조업어선(709척) → 1·2인 일반선박(313척) → 2인 조업어선(14,167척)

- 추락예방 및 자력승선 지원을 위한 안전물품(미끄럼방지매트, 구명줄·사다리 등) 병행 보급 및 유지보수(가스실린더 교체 등) 지원

- (성능개선) 상시착용이 가능토록 편의·기능성*이 향상된 제품 및 생산단가 절감·성능기준**이 완화된 보급형 구명조끼 개발·보급('23~)

* 디자인이 우수하고 착용하기 가볍고 편한 소재 및 형태의 구명조끼 개발

** 항해구역 등 감안, 국제기준보다 완화된 성능기준 적용 및 관련규정 개정

- (착용 의무화) 조업어선 대상 상시착용 의무화* 우선 시행 및 일반 선박(항해구역·시간, 승선인원 등 고려)으로 확대 검토·추진

* 승선원 소규모 어선 대상, 「어선안전조업법」 개정('22.10 공포, '25.10 시행)

- (문화확산) 단계적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전·후 착용여부에 대한 집중단속 및 지속적 계도활동 실시(해경청·지자체 협업)

-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사, 방송매체, SNS, 다중이용시설(지하철, 철도역사), 생활용품(킥홀더 등)을 활용한 다각적 캠페인 전개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My Lifejacket 프로젝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46	40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낙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에 따라 낙시어선업 최초 등록자에 대한 교육 법제화

* 낙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인명사고 지속적 발생

-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전문교육 개설 의뢰에 따라 2020년(10月)부터 연수원에서 낙시어선업 관련 대상자에 대한 전문 법정교육 시행 중

□ '23년 추진계획

◆ 2023년 「낙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시행 지속
(법정교육 : 낙시관리 및 육성법 근거, 한국어촌어항공단 소관)

- 교육대상 : 낙시어선업 신규자 및 영업정지 명령 후 재개하려는 자
- 교육시간/정원 : 3일(21시간)/20명
- '20~'22(10월말) 교육실적 : 50회 857명
- '23년 교육계획 : 24회, 480명 예정(세부일정 미정)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낙시어선 전문교육시행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기획실)	051-620-5532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국민 캠페인의 확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해양안전 종합홍보 등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각적 활동 추진 - (대국민) SNS,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창구를 활용한 비대면 홍보·안전교육 및 구명조끼 착용체험 등 국민 참여형 캠페인 추진 - (해양종사자) 비상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안전전문가 초빙 전문교육 및 어업인 대상 찾아가는 해양안전 교육·캠페인 추진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종사자 및 사업장 대상 해양안전문화 정착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직업현장 속 찾아가는 안전교육 캠페인 추진 - 선사, 협회, 교육·검사기관 등과 연계하여 해양종사자별 맞춤형 안전교육·직무훈련 프로그램 시행 추진 * 구명설비 작동 시연, 구명조끼 착용법 및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요령 교육 등

□ 배경 및 필요성

- 예·부선 등 소형 내항선박을 운항하는 영세 내항선사는 상대적으로 선박 안전관리에 취약하고,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도 부족
 - 해사안전컨설팅·교육을 통해 영세선사의 안전관리 역량강화 지원

□ '23년 추진계획

◆ 영세 내항선사 대상 해사안전컨설팅(퇴직공무원 활용) 사업 추진

- (해사안전컨설팅) 해사안전분야(선박검사, 해양사고 조사·심판 등)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을 해사안전 컨설턴트(6명)로 임명
 - 선박 안전관리 제고방안 등에 대한 무료컨설팅을 제공하고, 종사자 안전교육·의식개선 및 해사안전법령에 대한 안내·자문 등 실시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해사안전 컨설팅 사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18	90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22년 해양오염사고 중 건수는 부주의, 유출량은 해양사고 최다로 해양안전 의식 함양을 통해 해양안전·오염 사고 예방 추진
- 부주의 사고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유류 공·수급 등 기름이송 오염사고('20년 20건→'21년 38건)에 대한 적극 예방활동 강화

□ '23년 추진계획

◆ 유관기관 및 어촌계 협업을 통해 해양안전·오염사고 예방 체계 강화 및 해양오염사고 저감 추진

- 해경, KOMSA,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유관기관 해양오염 예방 협업
 - 「갑판 배출구 차단」, 「밸브·프스 안전문화 챌린지*」 확산 등 기관 합동 캠페인 전개를 통해 기름이송 부주의사고 예방 의식 강화
- * 유류이송 사고 원인 중 가장 취약한 밸브·플랜지·스위치의 집중 관리를 통해 사고 예방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부주의 해양오염사고 예방활동	해양환경공단 (예방·대응처)	023498-8596	-

□ 배경 및 필요성

- 다중이용선박, 연안선박 등 인명사고 취약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 반복적 사고 발생 선종 및 빈도가 높은 인적과실 해양사고 저감을 위한 선종별 전문 직무교육 강화

□ '23년 추진계획

◆ 다중이용선박, 연안선박 특성에 맞는 선종별 맞춤형 직무교육(법정 교육) 시행을 통한 해양종사자 직무능력 향상

- 고령화된 연안선박 종사자 특성을 반영하여 시뮬레이터, 실습장비 활용 등 실무체험 위주 교육내용으로 개선 운영 중
- '23년 교육계획

교육과정	일수	대상자	횟수	예상인원
여객선 직무교육	3일	연안여객선 승선 항해사	6회	70명
여객선 기초교육 여객선기초교육(재)	2일 1일	여객선 부원 승무자	15회 4회	300명 70명
여객선 상급교육 여객선상급교육(재)	4일 2일	여객선 선박직원 승무자	21회 22회	350명 440명
예인선직무교육(연안) 예인선직무교육(항내)	2일	예인선 승선 항해사 및 선장	14회 10회	168명 120명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맞춤형 직무교육 운영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기획실)	051-620-5532	-

□ 배경 및 필요성

- 민간 주도의 자발적 안전관리체계 전환 및 안전중심 경영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안전관리 전문성·책임성 강화 필요
- 해운선사의 자발적인 안전분야 투자를 유도하여 안전중심 경영문화 조성을 통한 해양사고 예방 도모 추진

□ '23년 추진계획

◆ 해운분야 안전관리체제 강화 및 안전투자내역 공시제도 도입 추진

- (안전중심경영) 안전분야 투자 확대를 통한 사고원인 제거 등을 위해 노후선 교체, 선박 유지관리, 종사자 교육·훈련 등 투자내역 공시*

* 「해사안전법」 전부개정(「해사안전기본법」)을 통해 도입 근거 마련('23.上) / 전세 버스('17), 철도('18), 항공('19) 분야는 안전투자내역 공시제도 기 도입

- 여객선사, 위험물운송선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2년간의 제도 시행 유예기간) 및 성과분석 등을 거쳐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추진

* 서해훼리호('93), 씨프린스호('95), 허베이스피리트호('07), 세월호('14) 등 최근 30년간 발생한 대형해양사고(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침) 선종을 고려하여 선정

- (경영진 책임강화)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체제 유지 및 지원·감독 의무 부과* 및 선장의 안전관리 강화조치 요구 권한 부여('23.1)

* 위반 시 선박소유자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안전관리체제 강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18	-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46	-

□ 배경 및 필요성

- 울산항은 국내 최대 액체화물(위험물질) 취급항만으로, 소규모 사고 발생으로도 연쇄 사고 발생 가능 및 막대한 피해 우려
- 위험물 종사자 및 사고발생 대비를 위한 구조대원 등 주체별 맞춤형 교육 필요

□ '23년 추진계획

◆ 위험물 관리 철저 및 사고 발생 시 적기 대응을 위한 자발적 참여 기반 주체별 맞춤형 위험물 안전교육 시행

- 위험물 종사자 현장 순회교육
 - 위험물 전문가 초청 위험물 터미널 내 안전교육 시행
 - 국제안전관리가이드(ISGOTT) 안내,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지원 등
- 구조대원(소방·해경) 대상 위험물 운반선 선박구조·소방설비 교육 시행
 - 신속한 화재 진압 및 선원·구조대원 안전확보 현장 실습 실시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재난대비 훈련 (안전한국훈련 등)	울산항만공사 (재난안전실)	052-228-5433	45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해사안전 지도·감독 및 선박보안 심사 시 해상 종사자 대상 현장 방선교육 실시(수시) ○ 민·관 업무공유 환경 조성을 통해 자발적 안전관리 의식향상, 선박관리 선진화 및 안전·보안사고 등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종사자(선원, 선주, 안전관리책임자 등) 및 선종별 특화된 체험학습(실습, 토론 등) 기반 교육 강화 * 가상현실(VR) 해양사고 체험, 구명·소화설비 사용법, 선상작업안전 교육 등 ○ 해양안전 네트워크를 통한 해양종사자 대상 특성에 따른 항행경보, 해양사고, 기상정보 등 맞춤형 해사안전정보 제공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교육) 해양종사자(선원, 선주, 안전관리책임자 등) 및 선종 등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 선별 및 맞춤형 교육 ○ (방선교육) 취약선박 종사자 대상 해양사고 예방 현장교육(연중)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내항 여객선사 대상 자발적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및 이행조치·이행여부 점검 ○ 선박점검 및 지도·감독 시, 해사안전 관련 상호 협력학습을 통한 맞춤형 안전교육 수요 발굴 및 해상종사자 대상 교육 추진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사 자발적 안전관리 이행여건 마련을 위해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시 현장 교육 및 선박 대상 해사안전 컨설팅 실시(필요시) - 인증심사 중부적합 사례를 선박 안전관리대행업체 등 유관업체 대상 통보하여 경각심 고취 및 사전 시정조치를 통한 자율안전관리 유도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및 해양종사자 대상 온라인·디지털 콘텐츠 교육 실시 - 해양안전 캠페인 시 피교육자의 적극 참여*를 통한 자발적 안전교육 체계 확립 ○ 다양한 선종(여객선, 산적화물선, 위험물운반선 등)대상 점검 및 지도·감독 시 각 해역·선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선교육 실시
제주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항여객선·화물선사 및 선원 대상 소화훈련, 퇴선훈련, 소화기 작동 및 구명정 투하 등 참여형 맞춤교육 실시 ○ 내항선사 대상으로 종사자 안전교육, 선박안전 해설, 법령 자문을 통해 안전 관리 종사자의 역량제고 홍보활동 실시(연중)

□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에 따른 해양레저 개인 활동자 증가 추세 고려, 온택트(Ontact) 중심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 활동 추진
- 레저기구 사고의 대부분(99%)이 근거리 활동(10해리 미만)에서 발생, 기관 정비 불량 등에 의한 단순 표류사고로 이에 대한 사고 예방 필요
- 국민이 참여하는 '스스로 찾아보는 안전 취약점' 제도를 통해 기초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관심도 및 이용자 안전 제고

□ '23년 추진계획

◆ 해양안전실천을 위한 종사자 및 대국민용 해양안전캠페인 실시

- 수상레저기구 이용자 대상 출항 전 사전 사전진단 서비스 5회 이상 실시 및 자가 점검 사항*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 상시 제공
- * 잦은 부유물 감김사고로 인한 축계 사고 및 엔진 고장 예방을 위한 자가점검 등 5종 이상 개발 예정
- 선박, 시설물 등의 안전취약점 발굴·개선 등 안전취약점 스스로 점검 사례* 신고·포상하는 '안전취약점 스스로 캠페인' 실시
- * 낚은 구멍설비 → 구멍설비 신환, 항해중 수밀문 개방 → 항해중 수밀문 폐쇄 등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해양안전문화 온·오프라인 홍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교통정책실)	044-330-2307	-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안전문화 확산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를 통한 안전의식 정착
 - 국민의 안전역량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직·간접 참여활동* 이행
- * 대국민 안전캠페인, 안전위해요소 신고제도, 안전정보 공유 채널 운영(기관 홈페이지內) 등

□ '23년 추진계획

◆ 대국민 직·간접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안전문화 활성화 도모

- 안전문화 확산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안전 캠페인 실시
 - 유관기관(노사정) 합동 항만안전 문화주간* 운영으로 안전캠페인 진행
- * 항만안전문화주간 : 항만근로자 대상의 안전문화 확산 활동 이행 기간
- 국민안전체험단, 안전신고센터 운영 등 대국민 참여채널 강화
 - 국민의 직접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함께하는 안전문화 정착
 - 안전정보 소통·공유 확대를 위한 안전정보 공유 채널 운영
 - 기관 홈페이지內 안전 전용메뉴 운영을 통한 안전보건 관련 정보 제공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해양안전문화 실천제도 활성화	여수광양항만공사 (재난안전실)	061-797-4484	181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종사자 대상 선박 비상상황(화재·퇴선)에 대하여 가상현실(VR) 장비를 활용한 체험형 해양사고 예방교육 추진(지속 추진) ○ 연령·대상·계절별 관심분석을 통해 선정된 해양사고예방 주제어 및 슬로건 중심 실천운동(현수막 게시)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터미널 전광판, 현수막, 포스터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안전의식 홍보 추진 * (현수막) 인천항 4개소, 8개 제작·게시, (LED 전광판) 3개소 매시간 안전문자 게시
제주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사고 예방교육으로 선장안전운항매뉴얼, 안전수칙, 비상훈련 교육자료 배포, 사회적 소통망을 통한 각종 사고예방 자료 전달 ○ 안전관리간담회를 통해 지도감독·인증심사 식별 주요 부적합사항 공유, 토론·애로사항 공유, 최근 개정된 법·제도 안내 등 실시(연 1회 이상)

4-3 맞춤형 해양안전교육 강화

4-3-1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 내실화

□ 배경 및 필요성

- 인명피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안전관리 미준수 등 인적과실이 대부분, 효과적인 예방·대처를 위한 안전조업교육 강화 필요

* 최근 5년간('17~'21) 어선사고는 9,461건, 인명피해는 456명 발생

□ '23년 추진계획

◆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교육함으로써 어선사고를 예방·대응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안전교육) 실제 조업·항행에 관여하는 선주·선장·기관장 등은 체험교육*을 확대하고, 일반 선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시스템** 개발·운영('23.1~)

* 소화기 사용법, 구명조끼 착용법, 무선통신(VHF-DSC) 작동요령, 충돌예방 항법 등

** 비대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개발('21.12~'22.6) / 시범운영(~'22.12.) / 정식운영('23.1.~)

- (안전교육 내실화) 이론 중심에 치중된 현행 안전교육(어업인 안전조업교육(4시간/년)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례·실습중심*으로 개편

* 어로작업(투·양망) 기본수칙, 사고사례, 시뮬레이터·VR장비 활용, 구명뗏목 작동·탑승 등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어업인안전조업교육)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6	1,105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감소하고 있는 해양사고 저감기조를 유지하고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양수산분야 안전교육 전반에 걸친 진단과 함께 전문가 정책제언을 통한 교육 내실화 추진 필요

□ '23년 추진계획

◆ 해양수산안전 교육 자문단 구성·운영을 통한 안전교육 내실화 도모

- 해양수산안전 교육 자문단(약칭 : 교육 자문단) 운영(반기별, 수시)

- (임무) **안전교육 정책제언, 교육체계 개선 권고 및 자문 등**

* 필요시, 해양수산분야 안전교육 강사로 초빙하여 활용

- (구성) 해양수산 안전분야 전문가 8인으로 구성 * (간사) 해사안전정책과

- (회의) 정례회의(반기), 수시회의(안전 발생시)

- (예산) 회의 운영비 등 연 15백만원

- (자문단 구성)

자문위원	전문분야
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	해상법 분야
한국해양대학교 공길영 교수	선박기술 분야
부경대학교 이유원 교수	어선안전 분야
군산대학교 김민선 교수	어선안전 분야
목포해양대학교 김인철 교수	해양안전 분야
해양수산연수원 장은규 교수	해양안전교육 분야
(사)한국항해항만학회 임정빈 회장	해상안전, 인적관리 분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홍태 박사	선박안전 분야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해양수산안전 자문단 구성 운영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9	-

□ 배경 및 필요성

- 외국인선원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교육 사각지대 개선 요구
- 외국인 선원 증가에 따라 안전교육 지원과 영어 등 외국어 제공 콘텐츠 제공을 통해 언어 장벽 낮춤 필요
-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외국인선원('20. 26,775명(상선 13,158명, 어선 13,617명)) 통계 발표(국적별 인니,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順)

□ '23년 추진계획

◆ 해양교통안전 가상현실(VR) 콘텐츠 제작 시 외국어 자막(영어·제2외국어) 및 수어 제공

- 해양교통안전 가상현실(VR) 콘텐츠 개발
 - 해양 레저활동 중 마주할 수 있는 안전사고 상황 대처방법 VR 콘텐츠 개발 시 수어통역사가 내레이션 등 안내사항을 수어로 통역 제공·반영
 - * 이안류 발생 시 대처방법('2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종사자용 콘텐츠 제작 시, 영어 및 제2외국어(인니어) 내레이션과 자막을 제공하여 안전교육 효율성 증대
 - * 밀폐구역 작업 안전수칙, 어선 줄 타격사고 예방('2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해양교통안전 가상현실(VR) 콘텐츠 개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교통정책실)	044-330-2581	-

□ 배경 및 필요성

-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안전이용에 대한 대국민 요구 증가
 -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의 교육 기회 제공 필요

□ '23년 추진계획

◆ 대국민 여객선 해양안전교육 강화

- 학교 안전교육 분야 거버넌스 구축 추진
 - 인천 백령도, 울릉도, 해남 땅끝 등 섬·벽지를 포함한 49개 지역에서 근무중인 운항관리자가 대국민 안전교육 확대 시행
 - * 태종대, 거문도 초등학생 및 교사 대상 교육 실시 중
 - 교육부와 업무협의를 통한 학교안전교육 거버넌스 구축
 - * 운항관리자 대상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분야 및 교육부 학교안전교육 전문강사 등록 추진
- 대국민 여객선 안전교육 콘텐츠 강화
 - 여객선 안전교육 콘텐츠 확대·강화를 위한 안전 교구 구매
 - * 교육용 구명조끼·소화기 구매, 교육안내와 콘텐츠 관련 브로슈어 및 기념품 제작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여객선 안전교육 강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정책실)	044-330-2371	28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연근해 해역에서는 운항자 과실 해양사고가 점증하고 있으나, 연안선 종사자들의 고령화로 이론수업 효과 한계, 연안선에 적합한 시뮬레이터 도입을 통한 실습교육 실시 요구
- (추진목적) 연안선 시뮬레이터의 내구연한 도래('13년 도입)로 인한 잦은 고장 등 교육 효과 감소에 따라 최신기술을 반영한 연안선박 시뮬레이터를 도입하여 해양사고 예방

□ '23년 추진계획

◆ 중소형 연안선 선원교육용 시뮬레이터 도입 추진을 통하여 쾌속선 등 연안여객선 및 소형 연안 선박별 특화된 교육장비 도입 추진

○ 주요 사업내용

- 실습선교 3실(지원장비 포함) 및 교육 운영 관련 프로그램 도입
- 중앙통제실(선박종류/항구/날씨 등 운항환경을 실습선교 시스템으로 제공), 연안선 운항 시뮬레이터시스템(운항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도입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해양안전교육인프라확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기획실)	051-620-5531	907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항만산업 특성(업무 다양성·복잡성)을 반영한 근로자 대상의 안전보건 교육 지원체계 구축
 - ‘지식공유(간접) 및 체험교육(직접)’ 병행 추진을 통한 안전교육 내실화

□ '23년 추진계획

◆ 다양한 안전교육* 시행 및 건강관리실** 활용을 통한 체험교육 병행 추진

* 전문가 초청 교육, 외부 위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 항만근로자 대상의 안전보건서비스 제공, 안전교육 실습의 종합 지원시설

- (안전교육) ①교육 주제의 다양화 및 ②추진방식의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 내실화 실현
 - ① 안전보건관계법령(중처법/항특법), 보건(건강관리), 위험물 등 관련분야 전반에 관한 사항
 - ② 비대면 교육(인터넷), 교육자료 공유(홈페이지內 전용페이지 운영), 외부위탁 교육 지원 및 전문가 초청 교육 확대 시행 등
- (체험교육) 광양항 건강관리실 활용을 통한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 * VR기기 활용의 사고체험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 심폐소생술 및 화재진압 대응 등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 내실화	여수광양항만공사 (재난안전실) (경영지원부)	061-797-4484 061-797-4353	48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선원의 직무환경 및 수급 관리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인 외국인 선원이 증가함에 따라 선내 안전교육 지원과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언어·의사소통 사전교육 강화 - 어선원의 이탈방지 등 안정적인 고용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외국인 선원 관리(수급)체계 확립을 위한 송출국과 협력 추진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별 맞춤형 해양안전 교육으로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항선 등 고령 선원 승선선박을 한 대상으로 현장교육 및 항만국통제 등 점검시 외국인선원 대상 안전 취약분야 방선교육 실시 - 매월 1일 '해양안전의 날' 및 '어선안전의 날' 등 관내 해양수산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양사고 예방 안전교육 및 캠페인 실시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별 맞춤형 해양안전 교육으로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선원) 고령선원이 다수 승선하는 내항선 대상 방선 안전교육 - (외국선원) 항만국통제 시 선내 비상배치표에 따른 대응절차 숙지도 확인 - (어선원) 해양안전 캠페인 시 항법·음주규정, 사고사례 공유 등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선원 근로실태 점검(상·하반기 각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원고용센터 통역 지원을 받아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근로관계, 체불 임금 등 위법행위 점검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 * (대상/방법) 20톤 이상 어선의 외국인 선원 / 노사정 합동점검반 편성 점검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의 직무환경 개선 및 안전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외국인 근로실태 조사 및 선원진정 사건조사 이행 - 해양수산연수원, 수협 등 해양안전실천 서부지역본부 유관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통해 어선원 및 외국인선원 등 안전교육 실시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안전의 날' 연계를 통한 어업종사자 대상 선박장비·기술 등 안전 분야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외국인·고령선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직무 친숙화를 위한 현장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항선 점검 및 외국인선원 근로실태 조사·근로감독 시 외국인 선원 대상 불만고충 면담·선내 의사소통 교육 실시 - 선박 점검 및 지도·감독 시 고령선원 대상 신규·첨단 장비 교육 및 新제도·국제협약 등의 교육을 통한 직무 친숙화 교육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다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유연한 대응 및 실생활 해양 안전문화 내재화를 위한 우리 원 내부 인적자원의 역량강화 필요
- 해사분야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글로벌 미래환경 대응을 위한 인재 육성 필요

□ '23년 추진계획

◆ 소속 교육요원의 교육역량(디지털 등) 향상을 위한 자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 교육환경 활성화를 위한 교육요원 전문성 강화 추진
 - 교육요원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설계
 - * 분야별 외부 전문가 초청 및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역량교육 실시
- 국제회의 대응, 국제협력사업 수행 등 글로벌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요원 세계해사대학 등 특별 연수 지원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교육요원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기획실)	051-620-5526	100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항관리사, 선박안전관리자 등 해양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구명설비 직접 시연 및 비상대응훈련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 전문 교육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목포분원 위탁교육을 통한 전문적인 비상대응 교육·훈련 및 주기적인 비대면 안전관리교육 실시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안전 분야 공유·협력을 통한 상생 생태계 조성

- 내륙 및 산간지역 거주 국민들은 해양안전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어 인식도 향상의 필요성이 있음

*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 대부분('22년 기준 6개소 중 4개소)이 연안 인접위치

- 청소년 및 아동 시기 체험(참여)형 교육이 효과적임을 감안하여 지역 공공체육시설 등 생활권 내 안전교육 접근성 강화

□ '23년 추진계획

◆ 해양안전문화 체험 기회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공공체육시설 활용
상설 해양안전체험시설 마련 추진

○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 체험시설 운영의 정기·상설화 추진

- 해양안전문화 체험 기회가 적은 지역 공공체육시설 활용을 통한 '상설 해양안전체험시설' 도입 추진

* '22년 세종시 공공체육시설(아름스포츠센터) 해양안전교육 체험 프로그램 실시(2회/50여명)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 구축운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교통정책실)	044-330-2581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교육 통합 인프라 구축 실무회의 개최(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교육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참여 기관* 간 안전캠페인 추진 관련 인력, 시기, 방법, 예산 등 논의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북교육청 학생해양수련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 해양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단체의 역량을 융합하여 다양한 교육 수요자들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직업체험 프로그램, VR 교육 콘텐츠 개발 등)

4-4 국민 참여형 해양안전문화 홍보 강화

4-4-1

해양안전문화 실천운동 지원 및 활성화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안전의식 제고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주도의 안전문화 확산기반 구축·지원 필요

□ '23년 추진계획

◆ 해양안전문화 인프라의 보완·신설을 통해 해양안전문화 확립

- (캠페인 강화) 해양안전실천본부*를 중심으로 '해양안전의 날' 및 '어선안전의 날'(매월 1일) 계기 지역별 안전문화 진흥운동 전개('23~)

* 전국 12개 본부, 해수부·해경청·지자체·수협·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수산업단체 등 참여

- (실천본부) 민간조직을 통한 해양안전문화 확산 및 협업제고를 위해 '해양안전실천본부*('13.7~)' 중심의 안전문화 민·관 협력체계 운영

* 국민해양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구성된 해양수산 관련 민·관 협업기구로 대국민 해양안전교육 등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추진, 중앙본부(44개 기관) 및 11개 지역본부(375개 기관)로 구성

- 해양안전실천본부 활성화 등 민간 주도의 해양안전문화 사업추진 방안 논의를 위한 유관기관 워크숍(상반기) 및 실무회의 추진(분기별)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해양안전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홍보 (해양안전실천본부 활성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9	20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안전문화 확산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를 통한 안전의식 정착
 - 국민의 안전역량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직·간접 참여활동* 이행
 - * 대국민 안전캠페인, 안전위해요소 신고제도, 안전정보 공유 채널 운영(기관 홈페이지內) 등
- 항만 내 안전규정 및 장비개선 증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안전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근로자 안전문화 확산 필요

□ '23년 추진계획

◆ 대국민 직·간접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안전문화 활성화 도모

- 안전문화 확산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안전캠페인 실시(여수·광양)
 - 유관기관(노사정) 합동 항만안전 문화주간* 운영으로 안전캠페인 진행
 - * 항만안전문화주간 : 항만근로자 대상의 안전문화 확산 활동 이행 기간
- 안전정보 소통·공유 확대를 위한 안전정보 공유 채널 운영(여수광양)
 - 기관 홈페이지內 안전 전용메뉴 운영을 통한 안전보건 관련 정보 제공
- 해양사고방지 세미나 후원(부산)
 -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성과, 개선방안 등을 공유·논의하여 해양수산 종사자의 사고예방 활동 동참 및 해양안전의식 정착 도모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해양안전문화 확산(사진전, 세미나)	부산항만공사 (재난안전실)	051-999-8499	2백만원
해양안전문화 실천제도 활성화	여수광양항만공사 (재난안전실)	051-999-8499	181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KOMSA 부산지사) 중심 조직 개편을 통해 민간 주도의 지역본부 운영 활성화 지원 및 업·단체의 자발적 참여 도모 ○ '해양안전의 날' 행사 확대 및 해양안전캠페인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협중앙회 부산어선안전조업국의 「어선안전의 날」 운용과 연계하여 관내 어촌계 대상 현장캠페인 실시(지속 추진)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의 날(매월 1일)' 및 해양안전 연중 캠페인과 연계하여 실천운동을 확대하고 안전사고 예방 주제어 선정·홍보 ○ 여객터미널 전광판, 현수막, 포스터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안전의식 홍보 추진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가철 여객선터미널 및 매표소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대상 해양안전 캠페인 실시(해양안전실천 지역본부 활동과 연계) ○ 해양안전 홍보영상 방영 및 구명설비 전시 등 여객안전수칙 홍보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실천본부 경남지역 본부 운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별·대상별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대국민 참여형 프로그램 시행(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명조끼 착용, 소화기 작동 체험, 응급조치(심폐소생술) 실습 등 ○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선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유관기관* 합동 해양안전 실천운동 및 해양안전 캠페인 개최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문화 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페인) 민 주도의 해양안전실천 캠페인 개최(반기별/연2회) - (해양안전의 날) 연령별·대상별·계절별 관심분야 분석을 통한 주제어 및 슬로건 중심의 해양안전 실천운동 및 캠페인 개최 - (홍보물품) '구명조끼 海주세요' 등 해양안전문구 들어간 기념품 제작 및 홍보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의 날' 및 '어선안전의 날'과 연계하여 관내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항만·어항에서 해양사고 예방 홍보·안전교육 시행 ○ 강원지역 해양안전실천본부 운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국민 관심유도 콘텐츠를 통해 개인 생존능력 강화를 위한 종사자 안전교육 및 국민 참여형 현장캠페인 지속 추진(연중) - 구명조끼 착용, 소화기 작동 체험, 비상 시 응급조치 실습, 해양오염방제 장비 시연 등 참여형 프로그램 마련·시행 - '해양안전의 날' 중점 달 활용 및 VR 등 체험형 교육 확대 - 민·관 합동 대국민 해양안전 현장캠페인 실시 등 다양화 추진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파교육, 동영상 등 시·청각 자료, 안전설비 직접사용 등 현장감 있는 교육 강화 및 피교육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시행 ○ 매달 해양사고 예방정보 홈페이지 게시, 유관기관과 업·단체 전파 및 안전 운항실천 구호 SMS 문자 발송, 항행경보 전파 등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실천 서부지역본부 대국민 캠페인 추진(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국민 관심유도 콘텐츠 개발 및 시기별(명절, 휴가철 등) 해양안전 캠페인 추진을 통한 비상대응능력 강화 - 구멍조끼 착용, 소화기 및 구멍땃목 작동, 비상 시 응급조치(심폐소생술), 해양사고 대응요령 등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 마련·시행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유관단체 합동 캠페인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단체* 합동 해양안전 캠페인 시행 및 해양안전 의식 강화 - 캠페인 시행 시 안전장비 체험을 통한 참여형 실천운동 확대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실천 지역본부 활동과 연계하여 합동캠페인 추진, 관내 초·중학교 대상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운영을 통한 해양안전문화 전파 ○ 선박종사자 대상 선종별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하여 해양안전문화 소식, 해양이용정보 및 안전수칙 등 해양안전정보 제공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안전의 날' 어업인 대상 낚시·해양레저 이용객 교육 이수 인증제도를 어선안전조업국, KOMSA 등 협조를 통한 홍보 추진 ○ 계절별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 해양사고 예방대책 이행을 통한 찾아가는 맞춤형 해양안전문화 실천운동 전개
제주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캠페인을 통해 대국민 대상 안전한 해양활동, 선사(선원) 대상 음주 운항 금지, 출항전 점검 철저 당부 및 홍보물 배포 등

□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 이후 자리잡고 있는 비대면 문화에 대응하여, 해양안전 홍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해양안전 홍보 방안 마련 필요

□ 추진계획

◆ 해양안전 홍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제고를 통해 해양안전 홍보 효과 극대화

- (소셜미디어 홍보 강화) 기관 공식 SNS 운영 활성화 및 맞춤형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제공 추진
 - 온라인 홍보 콘텐츠 3건 이상 제작해 OTT서비스, SNS 게시
 - SNS(인스타그램 등) 활용,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이벤트 개최*
- * 분기별 안전주제어 공모 이벤트, "해양안전실천서약" 이벤트 등
- (국민참여형 홍보 추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 추진
 -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직접 해양안전 홍보 콘텐츠 제작에 참여, 공모전 참여작에 대한 대국민 평가(국민생각함 등) 등 추진
 - 국민안전점검단, 안전신고센터운영 등 대국민 참여 채널 운영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해양안전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홍보 (해양안전실철본부 활성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9	480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대국민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경각심 제고 및 자발적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홍보 콘텐츠 마련 필요

□ 추진계획

◆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연령대에 특화된 해양안전문화 콘텐츠 제작

- (어린이) 안전사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어린이의 관심·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짧은 길이의 어린이용 영상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시 활용
- (청소년) SNS 사용 빈도가 높은 청소년 대상, 인스타그램 이벤트 진행을 통한 자발적 해양안전캠페인 참여 유도 및 안전 인식 확산
- (대국민) 해양레저활동 수요가 많은 성인을 대상, 실제 레저활동 시 알아야 할 주요 안전수칙 등을 포함한 영상 콘텐츠 개발 및 배포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해양안전문화 온·오프라인 홍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교통정책실)	044-330-2307	-

□ 배경 및 필요성

-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효과적인 해양안전 홍보를 위해 디지털 기반 해양안전홍보를 활성화할 필요

□ '23년 추진계획

◆ 인터넷 기반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해양안전문화 홍보 활성화

- (공식 SNS 운영 활성화) 현재 콘텐츠 디자인 강화, 신규 콘텐츠 발굴 등을 추진 중이며, 향후 공모전(유튜브 등), 이벤트 등 국민참여 행사 주최를 통해 해양안전문화 대국민 홍보 및 관심 유도(부산)
- (맞춤형 SNS 운영) 구독자수, 게시글수, 반응수(댓글+공감+공유 등) 통계분석으로 차별성을 갖춘 이용자 맞춤형 온라인 해양안전문화 홍보 콘텐츠 제작·제공으로 시간 대비 최대 홍보 효과 창출(부산)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해양안전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홍보 (해양안전문화 콘텐츠 홍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7	450백만원 (4-1-1 중복)
부산항만공사 SNS 채널 운영	부산항만공사 (홍보부)	051-999-3155	99백만원
대국민 참여 해양안전캠페인 확대 등	여수광양항만공사 (안전보안실)	061-797-4412 /4482/4489	229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시기별 주요 해양사고 유형에 대한 시사점 등을 쉽게 이해·활용 가능한 홍보자료로 제작하여 홍보
- 해양사고의 특성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월별·계절별로 주제를 선정하고 적시에 홍보함으로써 효율적인 사고예방 정보 제공

□ '23년 추진계획

◆ 시기별 해양사고 특성에 맞는 해양사고 예방정보 적시 제공

- 주요사고 및 그 예방법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요약한 예방정보를 시기별로 제작·배포해 빠르고 신속한 해양안전정보 제공
- 주요사고유형 및 사례를 선정하여 관련통계, 예방방안 및 교훈 등을 수록한 월별 해양사고 예방정보를 작성하여 배포(매월)
- 계절별 해양사고 발생현황, 사고유형 등을 분석하여 시사성 있는 사고사례와 함께 예방법 등을 포스터로 제작·배포(분기별 1회)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시기별 해양사고 예방정보 제공 (계절별 해양사고 예방정보 포스터 제작·배포)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044-200-6125	22백만원

참고

지방해양수산청 주요 추진계획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민참여형 해양안전 사진공모전 개최(7월) 및 수상작을 활용한 홍보 다각화 ○ 인구가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여객터미널 등)에 전광판 및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해양안전 메시지 전달 강화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선터미널, 통영소(사천소), 청사 민원실 등 해양종사자 밀집 지역에 전광판·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해양안전 메시지 전달 강화 ○ 선사·대리점·유관기관(단체) 등 약 130여 명이 참여하는 네이버 밴드(경남 안전海)를 활용한 해양안전정보, 기상정보, 슬로건 등 전파(수시)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청 海드림*, 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 온라인매체를 활용하여 해양안전정보, 기상정보 및 해양안전 슬로건 제공 ○ 해양안전 정보 메시지 전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밀집지역, 일정시간 머무는 장소 등 현수막·전광판 광고 게시, 청사 등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및 게시판을 활용한 안전정보 전달 * 울산 간절곶 등대, 대왕암 등대 전광판 및 게시판 활용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공식 SNS를 활용하여 해양안전체험관 체험시설 소개 및 계절별 해양 사고예방 안전문구 홍보 ○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해양안전 메시지 전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밀집지역, 일정시간 머무는 장소 등 음성·전광판 광고 활용 - 청사 및 여객터미널 등에서 전광판, 게시판을 활용한 안전정보 홍보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 주제어 선정 후 다중이용시설 전광판(포스코, 포항청 등) 송출. 계절별 빈번한 해양사고 요인 예방 및 효과적인 주제어 선정 ○ 구명조끼 상시 착용 등 해양안전 캠페인 실시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 정보·주제어 및 해양안전활동의 대산청 SNS 등 소셜미디어 게시 ○ 선박 지도·감독 및 해양안전 캠페인 시 VR장비를 활용하여 해양종사자 대상 해양안전교육 실시 ○ 바다내비 모바일 앱을 통한 해양안전정보 제공 및 긴급신고접수 등 스마트폰을 통한 디지털 기반 해양안전정보 이용 및 접근성 확대
제주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공통플랫폼(광화문1번가, 국민생각함), 온라인 배너광고, 각 주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 및 심사실시(20편 선정) ○ 선정된 작품(20편) 대상으로 시상(상장 및 상금수여)하고, 홈페이지, SNS 공개 및 단행본 발간·배부 등 홍보(~'22.12)

전략 5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 국제해사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양·다자회의 및 장관급 콘퍼런스* 개최, 국제기구 재정기여, 개도국지원 (세계해사대학 장학사업** 등), 협력사업(ODA사업*** 등) 확대

* 한국해사주간과 연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 선언문 발표·서명 등 주요 해운국 장관급 콘퍼런스 개최

** IMO 기술협력사업으로 매년 WMU, IMLI에 대한 장학지원('04~'22년, 38개국 67명)

*** △개발도상국 해상교통관리시스템 구축, △IMO 협약이행 역량강화 플랫폼 구축, △온실가스 규제대응 지원 웹포털 구축, △해사분야 여성진출 지원 등

□ 국제표준화 주도

- IMO 의제 제출 및 회의대응 등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선도 지원, 고망간강*의 활용도 확대 추진,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국내 전문가 국제기구 진출 확대

* 고망간강의 암모니아 적합성 시험(독성·부식성 등) 및 국제해사기구 결과제출(~9월)

** 기술개발 → 국제표준화(IMO 기준 반영) → 상용화 →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

□ IMO 전문 대응체계 고도화

- IMO 이사국 12연임 달성('23.12, 총회) 추진, 감사('22.11) 수감결과(경미 식별 사항 1건) 시정조치 계획 수립·제출('23.2, IMO) 및 상시감사 전환 대응* 등

* 상시감사 수감절차 등 마련을 위해 「IMO 회원국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

□ 글로벌 해사전문인력 양성 확대

- 국내 전문가의 IMO 회의체 의장단 진출을 장려, IMO 회의체 진행방식·발언문 분석 및 대응사례 등에 대한 전문교육 추진, 모의 IMO 총회 개최(하반기)

* IMO 회의 참석 및 IMO 대표부 견학기회 제공 등 검토

5-1 국제해사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5-1-1 양자 및 다자간 국제협력 활동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국제해사분야 주요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해 호주, 싱가포르 등 주요국들과 양·다자협의체 구성·운영 기반 등 구축 필요

□ '23년 추진계획

◆ 주요 해운국과 해사안전 정책회의 등을 통해 해운 탈탄소·해양 디지털 등 IMO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상호협력과 공감대 형성

- (양·다자회의) 주요국과의 양자회의* 및 아·태 해사안전기관장회의 (APHoMSA), 선진해운그룹(CSG) 참석 등 다자회의 참여·대응

* 제8차 한-싱 해사안전 정책회의, 제13차 한-호 해사안전정책회의 등

- (국제워크숍) 기후위기 대응,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등 국제해사분야 주요현안에 대한 발전 방향, 정책제시 등을 위한 한국해사주간* 개최

* (일정/구성) '23.6.14.(수)~16.(금), 서울(잠정)/①장관급 콘퍼런스, ②전문가세션(4개-미래연료포럼, 친환경선박 국제포럼, 해양디지털, 자율운항선박)

- (장관급회의) 한국해사주간과 연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 선언문* 발표·서명 등 주요 해운국 장관급 콘퍼런스 개최

* (국·영문-잠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 선언문 / Seoul Declaration for Greener Shipping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해상안전 국제협력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6021	550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국제해사분야 親韓 우호세력 확보를 위해 각국 해사분야 전문가 대상 IMO 교육기관 장학지원** 및 소통체계 구축 필요

* WMU·IMLI 재학생은 주로 관련분야 공무원으로, 졸업 후 IMO 내 주도세력으로 활동

** IMO 교육기관: 세계해사대학(WMU, 스웨덴 소재) 국제해사법대학원(IMLI, 말타 소재)

□ '23년 추진계획

◆ IMO 교육기관(WMU·IMLI) 장학생 선발(9~10월), 졸업생(장학생)과의 소통 체계 구축(연중), 및 WMU 재학생 방한연수 개최(3월) 등

- (장학지원)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WMU(6명), IMLI(2명)에 대한 장학지원사업* 지속 추진

* IMO 기술협력사업으로 매년 WMU, IMLI에 대한 장학지원('04~'22년, 38개국 67명)

- (소통활성화) 우리나라 지원 장학생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플랫폼* 운영, 동문 소식지 발행(연 2회) 등 소통체계 유지·관리

* △(페이스북) 콘텐츠(사진, 영상 등) 게시·운영, △(카카오톡) 일상적 대화·소통 및 졸업생 참여 독려, △(IMO-KOREA 누리집) WMU 장학생 전용 웹페이지 운영

- (방한연수) WMU 재학생을 초청하여 국내 해운 산업현장, 정책현장 및 해기 교육기관 등 견학과 우리나라 문화 체험행사 등 추진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해상안전 국제협력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6021	660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IMO A 이사국 11연임('01.11~) 등 글로벌 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재정기여 및 개도국들에 대한 기술지원 필요

□ '23년 추진계획

◆ IMO 기술협력사업 및 해사분야 공적개발 원조(ODA)사업 등을 통해 글로벌 해사역량 제고 및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

- (IMO 기술협력) 친환경 선박, e-Nav. 등 친환경·디지털 분야 기술·운영 노하우 공유 및 새로운 시장개척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 (기술협력위원회 대응) IMO 기술협력위원회(TCC*) 참가하여 사업 추진 성과 등을 회원국에 홍보하고 개도국의 수요 등 파악

*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국제해사기구(IMO) 기술협력국에서 주관하는 회의체로서 개도국의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기술협력사업의 내용 및 예산 심의

- (공적개발 원조사업) IMO를 통해 개도국 해상교통관리시스템 구축, 해사부문 여성역량강화 등 신규 ODA사업* 추진(다자성 양자)

* △개발도상국 해상교통관리시스템 구축, △IMO 협약이행 역량강화 플랫폼 구축, △온실가스 규제대응 지원 웹포털 구축, △해사분야 여성진출 지원 등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해상안전 국제협력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6021	190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저개발국·군소도서 국가의 IMO GHG 전략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해 IMO와 공동으로 교육프로그램* 마련·이행 협정**('22~'25)

* GHG-SMART(Sustainable MARitime Transport) TRAINING PROGRAMME

** 장관님-IMO 사무총장 서명, 우리나라가 기여 중인 IMO 사무총장 특별신탁기금 (재임기간 중 총 1,600만불) 중 4년간 250만불을 프로그램 이행에 활용하기로 합의

□ '23년 추진계획

◆ 저개발국·군소도서 국가 대상 GHG-SMART 교육 추진을 통한 국제사회 영향력 제고 및 협력체계 강화

- (이론 교육) IMO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해운 탈탄소화의 기술적·운항적 조치 등 IMO 온실가스 규제 정책에 대한 집중 교육 시행
- (현장 교육)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토록하여 △친환경선박 건조 현장 △최첨단 선박 운항센터 △친환경 항만 등 현장 교육 추진
- (국제 협력) 교육기간 중 IMO, WMU 등 초청 연사 등과 함께 정보공유와 주요이슈 논의 등을 위한 오찬·만찬 등 행사 추진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GHG SMART 교육 추진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5	IMO 특별신탁기금 활용

□ 배경 및 필요성

-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해사안전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해상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및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ODA 사업 추진
- 아시아·태평양 지역 e-Nav 도입 촉진 및 아국의 국제 해양 디지털화 선도 등을 위해 개도국 대상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18~)

□ '23년 추진계획

◆ 수원국(필리핀)에 e-Nav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웹기반 운영 플랫폼 개발 추진
아·태지역 개도국 대상 해양 디지털 역량강화 국제워크숍 개최

- (사업 추진) 수원국(필리핀)과 협정서 체결 및 사업자 선정(IMO)
- (현황조사) 개도국의 해양안전정보 등 웹 서비스 정보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현황조사 및 실무담당자 업무협의
- (플랫폼 개발) 웹기반 e-Navigation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모듈 개발 및 외부기관 연계용 API 개발을 위한 설계 등
-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디지털 역량강화 국제워크숍 개최를 통해 한국형 e-Nav 사업 소개, 국제 해양디지털 기술동향 공유 등 추진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해상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및 역량강화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044-200-6245	980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전세계 해적피해는 특정 지역 및 국가의 내부상황에 기인하여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음
- 해적으로부터 우리선원·선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역량 강화 방안으로서, 국제적 대응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강화 필요
 - * 최근 5년간('17~'21년) 총 870건의 해적사건, 915명의 인명피해(사망·부상·납치 등) 발생
 - ** 최근 우리국민 피해: ('18년) 1건, 3명 피랍, ('20년) 3건, 8명 피랍, ('21년) 2건, 5명 피랍

□ '23년 추진계획

◆ 해적피해예방 및 해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 선박 및 선원의 안전 확보

- (국제회의 대응) 국제해사기구(IMO), 아시아 해적퇴치협정(ReCAAP) 및 지역별 해적대응기구* 주관 국제회의 및 해적문제 논의 대응
 - * 소말리아 해적퇴치연락기구(CGPCS),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적퇴치그룹(G7++FoGG)
- (국제사회 기여) IMO와 연계한 연안국 역량강화사업 개발 협력, 아시아지역해적퇴치협정 국제상공회의소 해적정보센터 ReCAAP, IMB-PRC 등 해적관련 국제기구·단체 지원(매년)
 - IMO 서·중부아프리카 해상보안 신탁기금(외교부, 연 20만\$ 기여)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연안국 역량강화사업 개발·확대 추진
 - * ('22년) 기니만 Zone-F 지역 다국적해양조정센터, 국가별 정보센터(5개국) 무선통신설비 지원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국제협력 기반 해적피해 예방 역량강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51	170백만원

5-2 국제표준화 주도

5-2-1 연구개발(R&D) 기반 정부 주도 정책과 연계한 의제개발

□ 배경 및 필요성

- 친환경·디지털 등 해사산업의 주요 기술기준 선점을 위해 친환경 선박 R&D* 등을 통해 개발한 국내 기술 국제표준화 추진

* 친환경선박 연구개발('22~'31, 2,540억원), 자율운항선박 연구개발('20~'25, 1,603억원)

□ '23년 추진계획

◆ 해사분야 국가 주도형 연구 개발(R&D) 사업과 연계한 국제 표준 의제 발굴로 국내 개발 신기술의 국제표준화 토대 조성

- (전문가 지원) 연구개발 과정에 IMO 의제작성·회의대응 등 IMO 대응을 전담할 수 있는 국제해사분야 전문가 참여·지원(상반기~)
- (정책 자문) 국내 산업계·연구개발 기관 등에서 IMO 대응절차 (메뉴얼 등)를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경영진 자문* 추진(하반기)

* KMC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의 경영진이 참여하는 국제해사분야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 (국제표준화 지원단) 국내 유망기술 발굴, 국제표준화 전략수립 및 IMO 의제 제출 및 회의대응 등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선도 지원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IMO전담 대응체계 운영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8	200백만원
친환경선박 상용화 지원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38	-

□ 배경 및 필요성

- '16.5월 우리나라는 국내 기업(포스코)이 개발한 고망간강을 LNG 선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 필요성을 IMO에 제안
 - * ('18.12) '제100차 IMO 해사안전위원회'에서 '고망간강 잠정지침(Interim Guideline)' 승인, 각 기국에서는 동 지침 따라 고망간강 LNG 저장탱크 제작·검사 가능
- 고망간강 잠정지침을 IGC·IGF code에 반영하여 국제표준화함으로써 해양기자재 신소재 분야 등에서 국제 선도 기대
 - 실증선박 활용 및 기술검증 실적 보고를 통해 안전성을 확증함으로써 '국제표준화(Interim Guideline→Guideline)' 추진중

□ '23년 추진계획

◆ 친환경 대체연료의 선박운송·저장용 소재로서 고망간강의 활용도 확대 및 국제표준화 추진

- (활용도 확대) 대체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암모니아의 선박운송용 소재로 고망간강의 활용도 확대 추진
 - * 현 고망간강 활용 가능 소재 : 메탄(LNG), 에탄, 부탄, 이산화탄소, 프로판 등
 - 고망간강의 암모니아 적합성 시험(독성·부식성 등) 및 국제해사기구 결과제출(~9월)
 - * (국제표준화) IMO 제9차 CCC에 적합성 시험 결과제출('23.9) → 제107차 MSC('24.上) 승인요청 후 임시지침 개정·발효 예정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친환경선박 상용화 기반구축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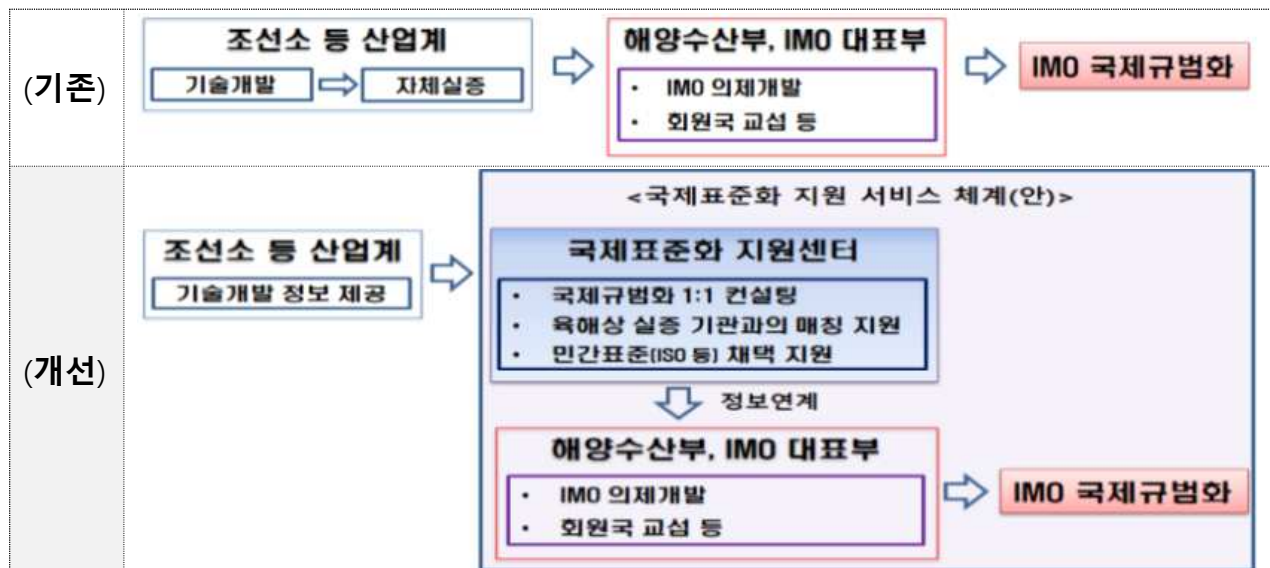
□ 배경 및 필요성

- 국내 해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조선소 등 해사 산업계의 기술이 국제표준에 반영되도록 지원

□ '23년 추진계획

- ◆ 국내기업이 자체 개발한 유망기술이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IMO 국제표준화 지원

- (체계구축) 해사분야 신기술 개발 단계부터 IMO를 활용한 국제표준화 지원 1:1 원스톱 서비스 추진(산업계와 협업체계 구축)



* '국제표준화 지원센터'는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KMC)'의 기능 확대를 통해 운영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IMO 전략대응 연구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5	-

□ 배경 및 필요성

- 해사산업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CE) 등 산업표준 제·개정 담당 국제기구 대응 필요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TC8(선박·해양기술위원회),

** ICE(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TC80(해양항해 및 무선통신위원회)

□ '23년 추진계획

◆ IMO, ISO, IEC, IALA 등 해사산업 국제표준을 다루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강화로 해사산업 분야 기술기준 조기 선점

- (전문가 풀) 기존 IMO 회의체 대응중심의 전문가 풀을 ISO·IEC·IALA 등 국제해사분야 국제기구 관련 전문가로 확대('22.3)
- (전문가 협의체) 친환경·디지털 등 국제기구 핵심의제 대응을 위한 통합의제 개발 등 국제해사분야 표준 선점 협업체계 구축
 - IMO·ISO·IEC·IALA 등 해사분야 국제기구를 대응하는 전문가들간 정책 협의체 구성·운영*
- * 국제해사협의회 등을 통해 국내외 전문가 정기 협의체 구성·운영
- (국제기구 진출) 국제해사분야 동향 파악 및 해사산업 표준 선점을 위해 ISO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 국내 전문가의 진출 확대*(12월)
 - * 고용휴직제도 등을 통해 ISO, ICE 등 해사산업 관련 국제기구 진출 추진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국제표준화기구 등 산업표준 선점·주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8	-

5-3 IMO 전문 대응체계 고도화

5-3-1 정부차원의 IMO 대응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IMO 신규제를 활용한 해운·조선산업 기술기준* 선점, 규제 대응방안 모색 등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해사분야 정책역량 강화 필요

* 온실가스 감축 72조원, 대기오염 저감 20조원, e-Nav 240조원, 자율운항선박 23조원

※ (타부처 사례) 국토교통부의 경우 민간항공기구(ICAO) 대응 전담을 위해 항공 정책실 내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 운영

□ '23년 추진계획

◆ 정부간 기구인 IMO를 활용한 해사산업 표준 선점 등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정부의 IMO 대응역량 강화

- (IMO 대표부) 대표부가 현지(런던) 국제해사정책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외교 교섭역량 강화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추진*

* IMO 대표부 주관 현지 콘퍼런스, 정기 리셉션 등 개최

- (국내 전담조직) IMO 대응, 회원국감사 후속조치, 양·다자 협력 등 국제해사분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해사팀' 신설('24년 정시직제 추진)

- (국제위상) 탈탄소 등 주요의제 논의 주도권 확보 및 국제사회 영향력 강화를 위한 IMO 이사국 12연임 달성 추진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정부차원의 IMO 대응체계 구축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8	400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IMO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해사분야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전문가들과의 협력체계 강화 필요

□ '23년 추진계획

◆ 해사분야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IMO 대응 역량 결집을 위한 산·학·연 협업체계 구축

- (협력 플랫폼) 학계·연구기관에서 축적한 경험 및 노하우 등이 상호 공유·축적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추진
 - IMO 대응, 의제문서 발굴, 전문가 역량강화 및 산·학·연간 연대 구축을 위해 '국제해사협의회' 개최
 - 각 위원회 간사 등 전문가들의 자긍심 고취 및 IMO 대응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IMO 전문가위원회' 개최
- (산업계 참여) 한국해사주간 등 해사분야 국제 콘퍼런스에 해운·조선 등 국내외 해사 산업계* 참여 추진
 - * 선사, 중소·대형 조선소, 기자재업체, 교육기관 등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국제해사 산·학·연 협력 플랫폼 활성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8	-

□ 배경 및 필요성

- IMO, IOPC 펀드 관련 업무의 연속성·체계성 증대를 위해 국제해사분야 활동에 대한 제도적 근거·기반 강화 필요

□ '23년 추진계획

◆ 국제해사분야 전문가 육성, 해양모빌리티 산업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국익 창출에 기여

- (IMO 대응지침) 효율적인 IMO 회의체 대응을 위한 규정 마련 및 국제해사분야 정책 수립·시행 관련 규정* 정비 추진

*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62호)

- (전문가 지원체계) IMO 회의체 의장단(의장·부의장) 활동, 의제문서 분석 등에 대한 자문비 지원 등 전문가 지원체계* 개정 추진(필요시)

* 국제협력전문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KMC 내부규정)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국제해사분야 대응활동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8	-

□ 배경 및 필요성

- IMO 회원국감사(IMSAS*) 수감**('22.11)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및 IMO의 상시 감사제도 도입 대비하여 대응체계 구축 필요

*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IMO가 회원국의 국제협약 이행실태(국제협약의 국내법 반영여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제도(7년 주기)

** 경미 식별사항 1건, 관찰사항 0건, 모범사례 2건(IMO 감사 수감 96개 회원국 중 최우수 평가)

□ '23년 추진계획

◆ 국제해사분야 내 협약이행 모범국가 지위 유지를 위해 철저한 감사 후속조치 이행 및 선제적 상시 감사제도 대응체계 마련

- (후속 조치) 감사에서 식별된 일부 미흡사항(1건)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수립·제출(~'23.2) 및 시정조치 이행*(~'25.11)

* 소관부서는 시정조치 계획에 따라 시정조치 이행, 감사대응팀에서는 조치현황 점검관리(반기별)

- (상시 감사) IMO의 상시 감사제도* 도입 결정('19)에 따른 상시감사 대응규정 마련 및 현행 감사대응 체계 재정비 추진

* 회원국이 IMO 협약 이행현황 자료 및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IMO 감사팀은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필요 시 현장감사 병행)

- 상시감사에 따른 수감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IMO 회원국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훈령)」 개정
- 범정부 감사대응 조직인 '감사대응팀' 및 '범령정비작업반'의 구성, 운영방식 및 체계 전면 개편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IMO 회원국감사 모범국가 도약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8	100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국제기준에 적합한 선박교통관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21.12월 개정된 IMO VTS 지침 등의 국내법 반영 추진

« IMO 「VTS 지침」 개요 »

- ✓ (문서 명칭) 국제해사기구(IMO) 결의서 A.1158(32) 'GUIDELINES FOR VTS'
 - ✓ (주요 내용) 영해 밖 VTS 시행, 관제통신 원칙, 미래기술을 고려한 VTS 정책 등
 - ✓ (문서 효력) 협약 본문 상에 적용사항을 명시하여 협약과 동등한 효력 발생
- * VTS 분야 최상위 지침으로 '97년 채택 이후 25년만에 개정(A.857(20) → A.1158(32))

□ '23년 추진계획

- ◆ 영해 밖 관제 기준 마련, 운항자 의무강화 및 관제통신 원칙 신설 등 IMO 국제기준을 반영한 「선박교통관제법」 개정('23.上) 추진

- (영해 밖 관제) 영해 밖 수역에서 자발적 참여선박을 대상으로 관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 관제업무 관련 조항 개정
 - * (IMO VTS 지침) VTS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선박에 대해 영해 밖에서 시행될 수 있다
- (운항자 의무 강화) 불가피하게 관제에 따르지 않는 선장은 사전에 그 의도를 관제사에게 알려 상호 혼선으로 인한 사고 예방
 - * (IMO VTS 지침) 선장은 VTS를 따르지 않기로 한 경우 자신의 의도를 보고해야 한다
- (관제통신 원칙 신설) 관제통신은 간결·명확하게 하고, 한국어 또는 표준 해사통신영어(SMCP)를 사용하도록 명시
 - * (SOLAS^{제5장 제14규칙}) 선박-육상통신은 영어가 원칙, 양자가 공용언어 사용시 그 언어를 사용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IMO 회원국감사 모범국가 도약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032-835-2986	-

5-4 글로벌 해사전문인력 양성 확대

5-4-1 IMO 사무국 내 인력진출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해사산업의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해운·조선 등 국내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IMO 사무국 내 우리부 직원 진출 확대 추진

□ '23년 추진계획

◆ IMO의 기구 운영에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해사분야 전문가의 IMO 사무국 진출 확대

- (국제기구 고용휴직) 인사처 주관 국제기구 고용휴직(IMO 사무국) 직위 신설(P4, 1명)에 따라 우리부 직원 국제기구 파견 조치(1월 중)
- (IMO 사무국 인력현황) 신규 채용, 정년퇴임 등으로 인한 향후 채용계획 등 IMO 사무국의 인력 운용현황 실시간 관리(계속)
 - * IMO 채용공고 및 사무국 내 우리나라 직원 등을 통해 사무국 인사 정보 수시 확인
- (인력풀 관리) 국제기구에 진출 가능한 언어역량과 조선·해운분야 전문성을 갖춘 국제해사분야 전문가 현황 파악·관리(계속)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IMO 사무국 내 인력진출 확대 (IMO 대응체제 강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8	-

□ 배경 및 필요성

- IMO 회의에서 국내 해사 산업계의 의견을 주도적으로 개진·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인 출신의 IMO 회의체 의장단* 양성 필요

□ '23년 추진계획

◆ IMO 위원회·전문위원회·작업반 등의 의장단에 우리나라 전문인력의 진출을 위한 전략마련 및 후보군 선발제도 운영으로 의장단 배출

- (전문가 관리) 선박안전, 해양환경 등 국제해사분야 전문지식 및 언어역량(영어) 등을 갖춘 국내 전문가 인력풀 지속 관리*(연중)

* IMO 회의체 작업반 참여경력 등이 있는 전문가는 IMO 회의 대표단으로 지속 임명하는 등 해당 전문가의 IMO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관리

- (활동 지원) 국내 전문가의 IMO 회의체 의장단 진출을 장려하고,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활동비 등 적극 지원*

* (근거) 국제협력전문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KMC 내부규정)

- (국제무대 진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타국제기구(UN, ISO 등) 활동 참여 및 국제컨퍼런스 참여(좌장, 토론자 등) 기회 제공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IMO 회의체 의장단 배출 지원 (IMO 전담 대응체제 운영사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8	-

□ 배경 및 필요성

- IMO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사회 내 영향력을 지속 확대하기 위해 국제해사업무를 수행하는 미래 인적자원 확보 필요

□ '23년 추진계획

◆ 국제해사분야 미래인재 확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추진

- (전문교육 활용) 총회, 이사회 등 IMO 회의체 진행방식, 발언문 분석 및 대응사례 등에 대한 전문교육 추진(하반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네트워크 구축) 한국해사주간 등을 통해 국내 전문가를 세션의 좌장으로 활용하는 등 인지도 제고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지원('23.上)
- (인재양성 기반) 대학생 등의 IMO 관심 제고 및 IMO에 진출할 글로벌 해양인재 양성을 위해 모의 IMO 총회 개최(하반기)

* IMO 회의 참석 및 IMO 대표부 견학기회 제공 등 검토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한국해사주간 및 모의 IMO 총회 개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8	90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국제해사분야 미래인재 확보를 위한 글로벌 전문가 육성 기반 확대

□ '23년 추진계획

◆ 국제해사분야 전문가 역량 강화 및 IMO 협력 등 해기교육 분야 공동사업 추진

- 국제해사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가 역량 강화 실시
 - 국제회의(IMO, IALA 등) 적극 참여 및 의제개발 연구 활성화 TF 구성·운영을 통해 국제해사분야 전문역량 강화
 - 분야별(인적자원·안전·환경·기술협력 등) 전문가 양성계획 수립을 통한 유관분야 및 국제전문가 협력 활성화 및 국제 컨퍼런스 참여 확대
 - 세계해사대학 등 해외교육기관 인적교류 및 업무협력을 통하여 국제해사동향 정보 교류 및 공동 연구 등 수행 도모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국제해사역량강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제협력팀)	051-620-5504	1,200백만원

VII.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

부 산 광 역 시

I. 개 요

☐ 어업인·어선 현황('22.12.31 기준)

(단위 : 명, 척, 개)

어업인	어선등록척수(낚시어선)	지자체관리 항·포구
7,225	3,511(168)	무역항 3, 지방관리연안항 1, 국가어항 3, 지방어항 13, 기타포구 32

☐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4대 전략 과제명	세부과제	소요예산
합 계	11	3,687.1
1.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7	3,489.6
2. 탈탄소·디지털화 촉진으로 해양모빌리티산업 선도	-	-
3.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2	10
4. 실생활 중심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2	187.5
5.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	-

※ 소요예산은 해당과제 관련 지방비만 포함

☐ 주요 추진사항

- (전략 1) 항내 계류선박 현황조사 및 전수조사 실시(월1회, 연4회), 항내 계류선박 계류지별 관리 철저히 효율적인 항만 관리 및 사고위해요소 사전 차단, 어선원(3,746명), 어선(1,116척), 어업인 안전(863명) 보험 지원

- (전략 2) 해상안전관리센터 운영을 통한 남항 내 해상안전 확보, 부산항 통합 해양사고 대응 종합훈련 추진(상반기, 하반기), 부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비용 지원 예산액 범위 내 지원, 수중 대형부유물 신속 제거로 항내 해양사고 요인 사전 제거, 어선 안전 기반 시설 구축(5개 사업, 1,151백만원) 추진, 부산남항 해안·새벽시장 전면 물양장 확충사업 및 돌제부두 전면 물양장 확충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9개 구·군 어선 85척 노후기관·장비 대체 지원, 방치선박의 신속한 제거로 2차적 해양오염 예방 및 연안 수역에 대한 어선의 안전한 항로 확보, 항내 요주의·방치선박 현황조사(연4회, 분기별) 실시, 7개 구·군 어선설비 32대 구매(설치) 지원, 32개 어촌계 월 1회(3월~11월) 찾아가는 이동수리소 운영, 어선 1,150척 소규모 부품교체 비용 지원, 연근해 어선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개정) 및 설·추석 및 취약시기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추진,
- (전략 3) 낙동강하구 어선통항로 준설사업(2차) 추진, 조선소 및 작업 예인선사 방문을 통한 시스템개선 등 업무체계 정립, ICT 기반 맞춤형 해사안전정보 제공 서비스 확대·고도화 추진, 맞춤형 해상안전 정보제공 서비스('22년 9월 52,620건 → '23년 목표 70,000건), 소형선박 조타실 외판 양현에 주·야간 시간대 원거리 식별이 용이한 '소형선박 식별번호판' 부착으로 해사안전 확보
- (전략 4) 부산광역시 해양환경관리 위원회 회의 개최(2회), 부산광역시 해양교육협의회 회의 개최(2회), 해양안전에 특화된 『2023년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개최, '23년 목표(안전교육 3회, 협의회 2회, 홍보물품 1,000여개, 만족도조사 1회), 어업지도선 해상활동 연계 현장 어선 안전조업지도 연 400척 이상

II. 2023년 시행계획

1-2-2 안전 취약지대 지도·감독체계 고도화

가. 체계적 계류선박 관리를 통한 항내 질서 확립

□ 배경 및 필요성

- 항내 사고 우려 선박 사전 조사를 통한 위해 요소 제거 및 항내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필요성 증가
- 경기 불황 등 장기계류 및 관리 부실로 인한 해양사고 위험성 증가
- 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등)의 영도굴항 계류 및 대형 연근해어선의 대평동 호안 계류로 인한 효율적 계류지 관리 애로

□ '23년 추진계획

- ◆ 항내 계류선박 현황조사 및 전수조사 실시(월1회, 연4회)
- ◆ 항내 계류선박 계류지별 관리 철저히 효율적인 항만 관리 및 사고 위해요소 사전 차단

- 부산남항 내 계류선박 현황 및 세부 선박정보 조사
- 항만시설 사용허가 취득 여부 확인
- 계류장소별 안전계류 점검(횡접안 및 선수접안)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체계적 계류선박 관리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	051-250-9524	-

1-2-3 책임안전관리 이행 지원 및 제도 활성화

가. 수산정책보험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각종 재난시 어업인들의 재해보상 보험료 일부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 및 어업경영 안정화 도모
- 해난 사고에 대비한 완벽한 재해보상 실시로 신뢰어업 구축

□ '23년 추진계획

◆ 어선원(3,746명), 어선(1,116척), 어업인 안전(863명) 보험 지원

- (지원근거) 「부산광역시 수산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집행주체) 구·군(협조 : 지구별·업종별 수협)
- (사업비) 1,019백만원(시비 509.5, 구·군비 509.5)
 - 어선원 보험(600백만원), 어선 보험(360백만원), 어업인 보험(59백만원)
- 지원방법 : 수산정보통합시스템(<https://int.fips.go.kr>) 내 구·군별 지방비 보조금 계정에 입금(시비 및 구·군비 별도)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수산정책보험 지원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	051-888-5414	시 509.5 구·군 509.5

1-3-1 해양사고 위험관리체계 고도화

가. 부산남항 해상안전관리센터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부산남항은 1일 평균 820여척의 선박이 계류 및 운항 중으로 해상 교통 및 해양오염 사고발생 위험 상존
- 부산남항은 많은 선박이 통항하는 협소한 수역이며, 선박교통량 및 복잡한 항만으로 해상교통 안전 관리 컨트롤 타워 필요

□ '23년 추진계획

◆ 해상안전관리센터 운영을 통한 남항 내 해상안전 확보

○ 운영개요

주요기능	장비현황					근무방법			비고
	CCTV	레이다	VHF	AIS	사설항로표지	형태	인원	운영시간	
부산남항 통항선박 안전항행 정보제공	25대	1대	2대	2대	4기	운영	평일	4명	07:00~22:00
							주말	2명	09:00~22:00
						관리	평일	1명	09:00~18:00

○ 주요업무

- 선박충돌, 위험구역접근 등의 위험 관찰 및 항내 실시간 모니터링
- 상황별 기상특보, 시정제한, 해양사고등 항행안전정보 제공

○ 운영효과

- 해양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 및 유관기관 상황 전파로 해양사고 조기 수습 및 확산 방지 기여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해상안전관리센터 운영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	051-230-9531	50

가. 부산항 통합 해양사고 대응 종합훈련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박 충돌·침몰사고 발생에 대비 합동훈련을 통한 신속한 인명구조 및 구난대응 태세 확립 및 해양사고 대응역량 강화
- 시 주도의 유관기관 합동 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향상 및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사고발생시 피해저감 및 인명피해 최소화

□ '23년 추진계획

- ◆ 부산항 통합 해양사고 대응 종합훈련 추진(상반기, 하반기)
- 부산광역시, 남해지방해양경찰청(부산해양경찰서) 공동주관

- (훈련장소) 부산항 인근 해상
- (주관) 부산광역시, 남해지방해양경찰청(부산해경서) 공동주관
- (예산) 10백만원(시비)
- (참가) 부산광역시 등 10개 기관/약 400여명
- (내용) 선박 충돌·침수 부상자 및 익수자 인명구조/해양오염방제

나.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비용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부산시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3년 추진계획

◆ 부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비용 지원 예산액 범위 내 지원

○ 부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비용 지원

- 예산액 : 20.5백만원(시비) ▶ 유류비 및 활동비 등
- 지원대상 : 부산시 지역 내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개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소요되는 경비 지원

다. 해상부유물 신속 처리로 선박손상 및 해난사고 예방

□ 배경 및 필요성

- 조선소 선가대 선박 받침목, 페로프 등 수중 표류 부유물로 인한 선박 안전 통항 저해

□ '23년 추진계획

◆ 수중 대형부유물 신속 제거로 항내 해양사고 요인 사전 제거

- 수리선박 상·하가 시 선박 받침목 해상유입 방지 현장 지도
- 부산남항 유입 하천 오물걸림망 설치
- 항내 통항·계류 선박의 쓰레기 해상투기 감시 및 단속
- 청항선 운항을 통한 해상 청소실시
- 물양장 쓰레기 해상유입 방지 정화 활동

라. 부산남항 해양시설 점검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시설(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2개소 안전점검 실시
 - (근거) 「해양환경관리법」 제36조 2항
-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반기별)을 통한 해양오염사고 사전 예방

《 주요점검항목 》

- 해양시설의 침하·균열 여부 및 노후화 정도 등 해양시설의 상태
- 저장탱크 및 연결관의 결합상태
- 소화 설비, 방제 자재 등 비치 여부
-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비치 및 현행화 여부
- 기름 유출사고 발생시 신고·보고 체계
- 해양오염방제에 대한 교육·훈련 상태

☐ '23년 추진계획

◆ 정기적인 해양시설 상태 점검 및 안전관리 철저

- 부산남항 해양시설(수리조선소 등) 15개소 점검 실시 (연 1회)
- 취약시간대 해양오염행위 순찰(월 1회 이상)

마. 어항시설 기반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어항시설 구축, 소형어선 인양기 등 어선안전 기반 시설 구축을 통해 어선 및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및 재산보호

☐ '23년 추진계획

◆ 어선안전 기반 시설 구축(5개 세부사업, 1,1514백만원) 추진

○ 사업내역

분류	위치	사업내용	예산
지방어항 건설	동백항	동방파제 설치 L=10m	1,000백만원
소규모어항 건설	용호항	안전난간 설치 L=120m	30백만원
지방어항 보수 등	우동항	어항정비 및 등대관리 1식	11백만원
	송정항	물양장 방충재설치 N=50EA	50백만원
	민락항	어항정비 및 등대관리 1식	60백만원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해양사고 대응 종합훈련	부산광역시 (해양수도정책과)	051-888-5282	10 백만원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비용 지원	부산광역시 (해양수도정책과)	051-888-5282	20.56 백만원
항행장애물 적기제거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	051-250-9521	-
해양시설 점검강화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	051-250-9521	-
어항시설 기반 구축	건설본부	051-888-6161	-
	부산광역시 (수산진흥과)	051-888-5424	1,151백만원

가.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 배경 및 필요성

- 어업생산의 활성화와 유류비용 절감을 통한 어업경쟁력 향상 도모
-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장비보급으로 어업경영개선과 해양사고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 '23년 추진계획

◆ 9개 구·군 어선 85척 노후기관·장비 대체 지원

-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추진
 - (사업대상) 연근해어업(근해·연안·구획)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지원물품) 어선의 기관·장비·설비(LED등 포함)
 - (총사업비) 1,003백만원(국비30% 시비30% 자부담 40%)
 - (추진계획) 구·군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9개 구·군)

나. 방치선박 정리지원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야간방치 조기 발견 애로, 선주 잠적 등 방치에 의한 2차적 해양 오염 유발 및 연안어선 안전운항 장애

□ '23년 추진계획

◆ 방치선박의 신속한 제거로 2차적 해양오염 예방 및 연안 수역에 대한 어선의 안전한 항로 확보

○ 방치선박 정리지원 추진

- (규모) 2척/7백만원(시비 5.25, 구비 1.75)

* 사하구 : 2~5톤 2척/7백만원

다. 장기계류 및 요주의 선박 관리 및 해양오염사고 예방

□ 배경 및 필요성

- 경기불황 등의 여파로 장기계류 노후선박에 의한 요주의선박(관리부실, 장기계류) 다수 발생
- 선박 기관 노후화, 연료유 불연소 등의 선박 매연으로 항만 대기 오염 발생
- 항만 주변 주거구역 주민민원 및 통항 선박 안전운항에 장애 발생

□ '23년 추진계획

- ◆ 항내 요주의·방치선박 현황조사(연4회, 분기별) 실시
- ◆ 요주의 선박 발생 여부 조사 및 요주의선박 관리대장에 등재 관리 철저
- ◆ 부산남항 계류선박 시운전 등 매연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비상연락, 선박이동)로 민원발생 저감

- 요주의선박 관리 철저로 항내 방치선박 발생 예방 및 관리부실, 장기계류선박 발생 최소화
- 항내 계류하면서 화기 작업 수리 행위 방지 및 미세먼지, 시운전 매연 발생 최소화 제도
- 항내 방치선박 발생 시 대집행 등 조치

라.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소형어선(10톤 미만)에 대한 기관·전기·구명·소방 등 어선설비 지원
- 어선설비 지원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어업인 재산과 생명보호

□ '23년 추진계획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시행에 따른 국비, 시비를 구·군에 교부하여 사업 지원(7개 구·군 어선설비 32대 구매 지원)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사업대상) 10톤 미만 소형어선 소유 어업인
 - (사업주체) 영도구 등 7개 구·군
 - (사업량) 7개 구·군 어선설비 32대
 - (총사업비) 57백만원(국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 (추진계획) 구·군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마.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교통 여건이 취약한 어촌지역 어선(선외기)에 대하여 정기적 무상 점검 및 수리를 통하여 해난사고 사전 예방
 - '22년 추진실적 : 32개 어촌계* 169회 운영, 어선 734척 지원
- * 기장군 18개소, 강서구 14개소(가덕도 5개소, 가덕도 외 9개소)

□ '23년 추진계획

- ◆ 32개 어촌계 월 1회(3월~11월) 찾아가는 이동수리소 운영
- ◆ 어선(선외기) 무상 점검·수리, 어선 1,150척 소규모 부품교체 비용 지원

○ (사업기간) '23.3~11

○ (사업비) 145백만원(국비 50, 시비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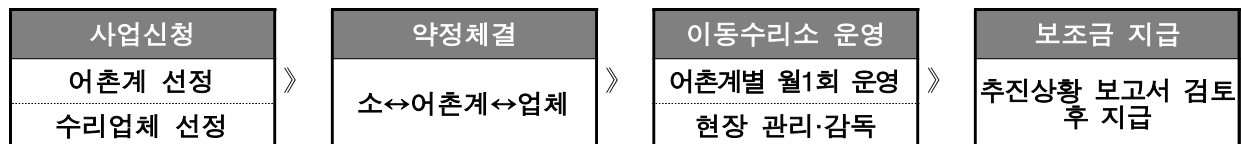
○ (사업대상) 32개 어촌계(강서구, 기장군) / 수리업체 7개소

○ 주요내용

- (지원내용) 어업용기자재 무상점검 및 수리, 소규모 부품교체비 지원

- (지원한도) 1인당 2회 20만원 이내

○ 추진절차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보급사업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	051-888-5401	1.003백만원
방치선박 정리지원 사업		051-888-5404	7백만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051-888-5414	57 백만원 (국비17)
장기계류 및 요주의 선박 관리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	051-250-9522	64 백만원
이동수리소 운영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기술보급팀)	051-209-0939	145 백만원 (국비 50 백만원)

1-5-2 선종별 안전관리체계 강화

가. 다중이용선박(낚시어선, 유람선)의 안전관리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현장 중심 안전점검을 통한 어선사고 위해요소 사전제거로 관내 어업인 생명·재산피해 최소화
- 어업인 소통을 통한 안전의식 공감대 형성, 관계법령 개정 사항, 안전관리 요령 등 수시 홍보·교육 기회 마련

□ '23년 추진계획

◆ 관내 어선 안전점검 625척 / 낚시어선(반기별 전수점검)

- 점검대상 : 관내 어선 3,555척 / 낚시어선 174척
- 점검기관 : 市, 구·군 12개 점검반(어업지도선 7척, 28명)
- 점검내용 : (어선) 항해·기관·통신 설비 등
(낚시어선) 안전설비, 어선관리, 감염병 예방 등
(교육·홍보) 각종 홍보물 배부, 관계법령 개정 사항 등
- 점검방법 : (육상) 관내 어촌계 협의 후 안전점검 교육·홍보 실시
(해상) 지도·단속 승선 조사 시 안전점검 병행 실시

나. 선박(어선)안전관리 통합운영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관련 실태조사 등 평가·환류체계 구축으로 재해예방의 지속 추진 및 기반 마련
- 안전취약 장비·작업환경 개선 및 어업인의 안전인식 제고

□ '23년 추진계획

◆ 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리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 (지속추진 기반마련) 예방업무 관리·협력체계, 실태조사 등 통계 체계 구축, 평가·환류 등 안전재해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한 체계 마련
 - * 보험 상품 개정 관련 어선원, 어선, 어업인 안전보험 예산 포함 (해수부+시비)
- (안전재해예방 지원 및 작업환경 개선) 기계적·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완화·해소하기 위한 안전저해 저감 장비 및 작업 환경 개선 등 예방사업 지원
 - *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사업 및 나잠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용역과제)
- (안전실천 인식제고)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의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다.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

□ 배경 및 필요성

-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레저사업장 안전점검 추진

□ '23년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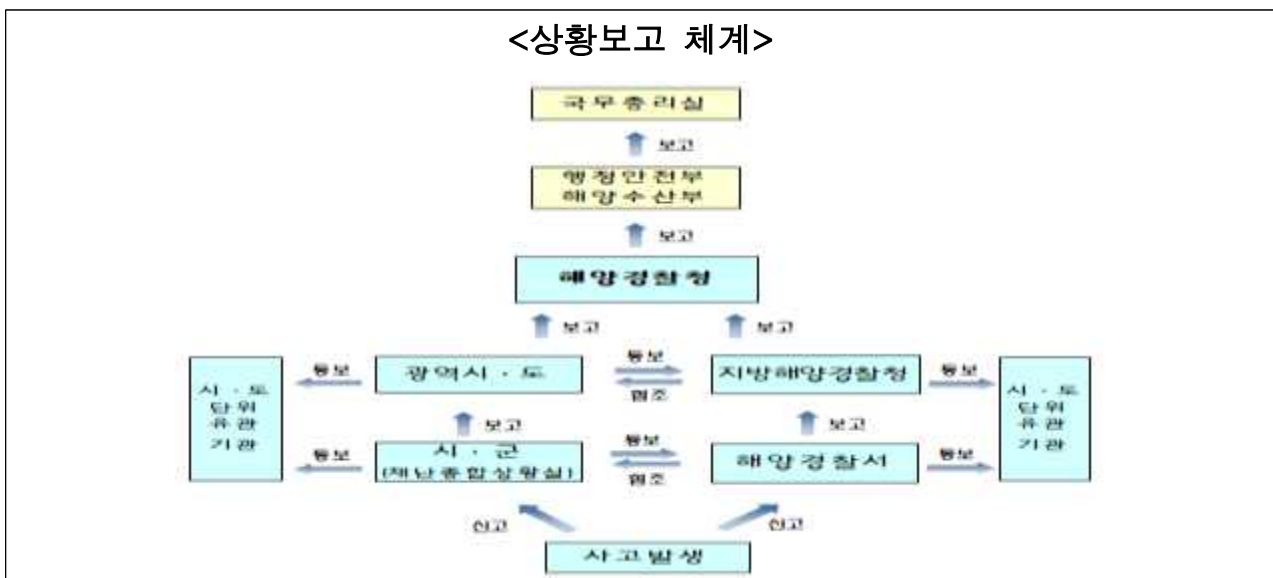
◆ 사업장 안전관리 지도·점검 강화 및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한 수상레저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사전 사고 예방

- 안전한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기반 조성
 -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계획 수립
 -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시설물 등 안전점검 실시
- * (합동단속) 시·구 담당자, 해양경찰서, 민간 전문가

-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지정·관리(자치구·군)

○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체계 구축

-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유관기관 (시, 구, 해양경찰, 민간전문가) 합동점검반 구성·운영(6~8월)
- 수상레저 사고발생 시 비상연락망 구축(시↔구↔유관기관)
- * 내수면 활동 중 인명피해 수반한 수상레저 사고발생 시「상황보고 체계」에 따라 관할 해양경찰서에 즉시 통보
- 대회 및 체험활동 시 보험 및 공제가입 철저(수상레저사업자)
- 피견인기구(바나나보트 등) 중심의 내수면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종사자 및 이용객 대상 수시 안전교육 실시(수상레저사업자)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어선(낚시어선) 안전점검반 운영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 (해양레저관광과)	051-888-5411	10백만원
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	051-888-5414	20백만원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	부산광역시 (해양레저관광과)	051-888-5367	-

가. 연근해 어선사고 대응체계 구축·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연근해 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구조 구난 및 수색을 통한 어업인의 생명·재산 피해 최소화

□ '23년 추진계획

◆ 연근해 어선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개정) 및 설·추석 및 취약시기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추진 등

- 어선사고 취약시기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 (시기) 설·추석 등 연휴,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다발 시기
 - (편성) 수산정책과 어업지도안전팀장 외 4명
 - (운영) 주말 및 공휴일 2인 1개조
 - (내용) 사고 발생 시 상황 전파 초기 대응 등

나. 해양재난 매뉴얼 통합 지도·점검

□ 배경 및 필요성

- 재난 및 사고 등으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피해예방을 위한 맞춤형 재난대응체계 구축, 초기상황 대응역량 강화
- 해양재난 매뉴얼 보유현황 및 작성·운영 실태 지도·점검으로 각종 해양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과 피해 최소화 기반 마련

□ '23년 추진계획

- ◆ 해양재난 매뉴얼 보유현황 및 작성·운영실태 점검
- ◆ 각종 해양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기반구축

- (점검대상) 부산시 9개 기관(부서) 및 11개 구·군
- (재난유형) 해양 선박사고, 해양오염, 조수 등(해수부 소관)
- (점검내용) 해양재난 매뉴얼 보유현황 및 작성·운영실태 점검
- 중점점검사항
 - 해양재난 매뉴얼 보유현황 및 비상연락망 정비 현황
 - 누구라도 쉽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간결한 표현으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 매뉴얼 구성의 적정성 및 실효성 검토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연근해 어선사고 대응체계 구축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	051-888-5412	-
해양재난 매뉴얼 통합 지도·점검	부산광역시 (해양수도정책과)	051-888-5282	-

가. 낙동강하구 어선 통항로 준설

□ 배경 및 필요성

- 낙동강으로부터 유입되어 다대포 연안 수역에 퇴적된 토사의 준설로 어선 안전항로 확보 ☞ 어업인 건의사항 해소

□ '23년 추진계획

◆ 낙동강 하구의 토사 퇴적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낙동강하구 어선통항로 준설사업(2차) 추진

- (사업대상) 다대포해수욕장 앞 ~ 도요등 하단부 수역
- (사업기간) '21.10~'23.6
- (사업비) 1,000백만원(국비)
- (추진목표) 다대포해수욕장 앞 ~ 도요등 하단부 수역 준설
- 세부 추진계획
 - 준설공사 시행 (해수욕장 시즌(7~8월) 및 김양식 기간(10~3월) 제외)

나. 조선소 상하가 작업 알림 및 통항선박 안전 확보

□ 배경 및 필요성

- 부산남항 주통항로 및 방파제 부근 교통 혼잡도가 높은 장소에 수리조선소 운영
- 수리 조선소 상·하가를 위한 자력운항불가 선박(DEAD SHIP)의 입·출항이 매우 빈번한 해역으로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실정

- 수리선박 상·하가 작업 중 통항중인 선박과 충돌 위험이 따르며 주변 교통흐름 지장 초래 및 통항선박 안전성 확보 필요

□ '23년 추진계획

- ◆ 조선소 상·하가작업 선박, 예인선과 실시간 교신 실시
- ◆ 유람선 운항시간 및 통항선박이 많은 시간대 상·하가 자제요청
- ◆ 조선소 및 작업 예인선사 방문을 통한 시스템개선 등 업무체계 정립

- 수리선박 상·하가 스케줄 수신(매일 오전 10:00)
- 상·하가 정보제공 및 전파 : 상·하가 1시간 전(1차), 30분전(2차)
- 현장 안전문화 정착 및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항내 수리조선소(13개소), 작업 예인선사(5개소)와 협업체계 강화 추진

다. ICT(TTS연동) 기반 상황별 자동항행정보서비스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통항선박 대형화, 다양화, 좁은 해역 이용 증가 등 해상교통여건 변화에 따라 'ICT 기반 맞춤형 해사안전정보' 수요 증대
- 스마트한 해상교통 환경 조성, 해상교통 밀집해역 안전관리 강화

□ '23년 추진계획

- ◆ ICT 기반 상황별 자동항행정보서비스 확대('22년 9월 552건 → '23년 목표 700건)
- ◆ ICT 기반 맞춤형 해사안전정보 제공 서비스 확대·고도화 추진
- ◆ 수요자 중심의 부산남항 관리 VHF 채널 74번 통신안전망 구축

- 항만이용자들의 입장의 실시간 해상상황 정보 및 부산남항 특성에 맞는 법령정보(항법 등)공유를 통해 일방적 정보제공 체계 탈피
- 비상상황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실시간 항행안전정보 제공으로 부산남항 해상안전관리센터의 역할 강화 및 해양사고 감소 여건 마련

- 항내 해상교통 폭주 시간, 해역, 기상악화(태풍, 기상특보, 짙은 안개 등)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항행 위험 요소 공유 등) 알림서비스 확대

라. 맞춤형 해상안전 정보제공서비스 실시

□ 배경 및 필요성

- 부산남항의 맞춤형 해상안전정보를 항만이용 종사자들에게 제공
- 일방적 제공방식을 벗어나 상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환경 구축

□ '23년 추진계획

- ◆ 맞춤형 해상안전 정보제공 서비스('22년 9월 52,620건 → '23년 목표 70,000건)
- ◆ 부산남항을 이용하는 모든 종사자 및 기관·단체로 대상 확대
- ◆ 남항관리사업소 홈페이지 개선으로 필요한 정보 접속 등 수시 확인

- 기존 선장, 선주에 제공되는 정보에서 항만이용 모든 종사자가

마. 해상부유물 신속 처리로 선박손상 및 해난사고 예방

□ 배경 및 필요성

- 조선소 선가대 선박 받침목, 페로프 등 수중 표류 부유물로 인한 선박 안전 통항 저해

□ '23년 추진계획

- ◆ 수중 대형부유물 신속 제거로 항내 해양사고 요인 사전 제거

- 수리선박 상·하가 시 선박 받침목 해상유입 방지 현장 지도
- 부산남항 유입 하천 오물걸림망 설치
- 항내 통항·계류 선박의 쓰레기 해상투기 감시 및 단속

- 청항선 운항을 통한 해상 청소 실시
- 물양장 쓰레기 해상유입 방지 정화 활동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낙동강하구 어선통항로 준설	부산광역시 (경제진흥과)	051-220-4492	1.000백만원 (국비 1,000백만원)
조선소 상하가 알림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	051-250-9530	-
ICT 기반 상황별 자동항행정보서비스 운영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	051-250-9530	-
맞춤형 해상안전 정보제공서비스 실시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	051-250-9530	-

□ 배경 및 필요성

- 부산남항은 항만의 크기는 작지만, 해상교통량(1일 평균 800여척/소형선박 45% 차지)이 무역항 보다 매우 복잡하고 해양사고 발생 위험 상존
- 부산남항 주이용 소형선박(항내운항선)과 급유선 선박충돌 후 인명사고 발생으로 '소형선박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시급
- 선박식별 불가로 신속한 초동조치 불가, 무선통신장비 법적 비치·사용의무 면제대상, 무질서한 통항 등 대형 인명사고 발생 우려

□ '23년 추진계획

- ◆ 추진기간 : 시범운영 '21.1~7(20척), 본운영 '23목표(70척), 단계적 추진 계획
- ◆ 소형선박 조타실 외판 양현에 주·야간 시간대 원거리 식별이 용이한 '소형선박 식별번호판' 부착으로 해사안전 확보
- ◆ 부산남항 내 소형선박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 및 현행법령 사각지대 해소

- '전국 최초' 저예산으로 중·장기적 해상교통 환경 개선 및 안전망 구축
-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로 2차 사고 예방 및 인명사고 최소화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부산남항 내 소형선박 '고유 식별번호 부여' 운영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	051-250-9528	10백만원

가. 부산시 해양환경관리 위원회 구성·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민·관·학 협치와 소통 강화를 위한 시민 참여형 위원회 구성
- 해양환경 관리 주요정책 수립 시 관련 자문
- 현장 중심의 해양환경 정책 발굴 및 시민체감 정책 추진

□ '23년 추진계획

◆ 부산광역시 해양환경관리 위원회 회의 개최(2회)

- 해양폐기물 관리 계획 수립·시행 등 심의·자문
- 해양쓰레기 저감 등 해양환경 관리 정책의 개발과 자문
- 해양환경 개선 및 보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자문

나. 부산시 해양교육협의회 구성·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시민의 해양의식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 참여형 위원회 구성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정책 발굴 및 시민체감 정책 추진

□ '23년 추진계획

◆ 부산광역시 해양교육협의회 회의 개최(2회)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 및 교육청의 해양교육 시책 또는 해양교육 사업의 협력·역할 분담 및 조정
- 해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역 내 해양자원의 연계 및 활용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해양환경, 교육·문화 위원회 활성화	부산광역시 (해양수도정책과)	051-888-5262 051-888-5281	7백만원

가. '23년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개최

□ 배경 및 필요성

- 대형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범시민적 해양안전 의식제고
- 미래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해사안전산업의 육성의 장 마련

□ '23년 추진계획

◆ 해양안전에 특화된 「'23년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개최

- (사업명) '23년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 (기간/장소) '23.9월중(3일간)/백스코 제1전시장 및 컨벤션홀
- (전시규모) 11,164m² (150개사, 420부스)
- (사업내용) 해양안전 산업전, 사고예방 홍보전, 컨퍼런스 등

나. 부산 남항 해양안전 문화 협력체계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일상적·관행적 운항 및 선박운항자의 안전의식 결여 따른 해양사고 발생
 - 부산남항 선박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주, 선장, 선사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해사안전 의식제고 및 기본 주의 사항 전달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선박(운항종사자 등)이 전파의 매개가 될 가능성 잠재, 주이용 선박 비대면 업무 활성화 추진

□ '23년 추진계획

- ◆ '23년 목표(안전교육 3회, 협의회 2회, 홍보물품 1,000여개, 만족도조사 1회)
- ◆ 親 해양안전문화 확산으로 부산남항 이용관계자와 소통환경 구축
- ◆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시스템개선 등 업무체계 확립

- 부산남항 특성에 맞는 해양안전문화 홍보 및 사고 방지 캠페인 추진
 - 계절별 사고유형·사고정보·기본 안전수칙 등 교육자료 제작 배포
- 부산남항 해상안전관리센터 전용 SNS(카카오프러스친구) 활성화 방안 마련
 - SNS 비대면 업무 활성화 ▶ 현장사진 첨부 SMS로 해양사고 예방
- 해사안전 홍보 안내 및 통항신호등 운영(연중무휴)로 안전인식 개선
- 관공선 순찰강화로 안전지도실시 및 현장중심의 안전사고예방 제도
- 신속한 재난·해양사고 대응을 위한 해양수산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

다. 현장 중심 육·해상 안전조업지도

□ 배경 및 필요성

- 인적과실(충돌, 기관고장)로 인한 어선사고는 약 70%로 높은 비율 차지, 어업인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중심 지도 활동 필요
- 선원 고령화, 연안어선의 1인 조업증가, 조업 격무에 따른 피로도 가중 등 운항 부주의로 인한 인적과실 어선 사고 증가

□ '23년 추진계획

- ◆ 어업지도선 해상활동 연계 현장 어선 안전조업지도 연 400척 이상

- 범위 : (육상) 항·포구 48개소, (해상) 2,361 km^2

○ 지도선 : 1척(374톤)

선명	톤수	전장	선질	기 관	속력	진수일	건조비	승무원	최대 승선원	비고
부산 201호	374톤	58m	강선	디젤6,610Hp (3,305×2기)	19 노트	'99. 3	5,387 백만원	14명	67명	단속정 2척

○ (추진계획) 연 400척 이상 육·해상 안전조업지도

- (육상) 항·포구 육상 단속 시 어업인 등 대상 지도
- (해상) 어업지도선 해상활동 시 조업·항해 어선 대상 지도

○ (지도내용) 기상악화 시 입항 조치,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조업 홍보 방송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개최 지원	부산광역시 (해양수도정책과)	051-888-5282	360백만원 (국비 180백만원)
부산 남항 해양안전 문화 협력체계 강화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	051-250-9530	0.5백만원
현장 중심 육·해상 안전조업지도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	051-888-5412	-

인 천 광 역 시

I. 개 요

□ 어업인 · 어선 현황('22.12.31 기준)

(단위 : 명, 척, 개)

어업인	어선등록척수(낚시어선)	지자체관리 항·포구
18,177	1,485(194)	무역항 2, 연안항 2, 지방어항 15, 기타포구 77

□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6대 전략 과제명	세부과제	소요예산
합 계	9	2,171.5
1.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4	1,639
2. 탈탄소·디지털화 촉진으로 해양모빌리티산업 선도	1	345
3.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0	0
4. 실생활 중심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4	187.5
5.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0	0

※ 소요예산은 해당과제 관련 지방비만 포함

□ 주요 추진사항

- (전략 1)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낚시어선) 분야, 계절별 해양사고 교통안전대책 등 수립·시행(연4회), 연평어장 안전조업 현지대책반 운영(봄·가을어기), 어선 안전설비 지원 및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및 재난안전분야 공무원 전문교육 및 매뉴얼 숙달훈련 실시

* 4개사업 : 어선(선체)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250백만원), 어선어업인보험료(728백만원),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지원(267백만원),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184백만원)

- (전략 4) “어선안전의 날”(매월 1일), 관내 주요 항·포구에서 구명조끼 착용, 어선 점검 생활화 등 캠페인 집중 전개, 어선사고 발생 다발 시기(봄철 4~5월, 겨울철 11~12월) 집중점검 실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및 인천국제해양포럼* 개최, 인천 해양·항만 뉴스센터 운영**

* 국내·외 해양분야 기업, 학계 및 전문가 참여(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주최, 5월)

** (사업내용) 해양항만 각종 정책, 이슈, 홍보 등 보도(경인방송, 150백만원)

II. 2023년 시행계획

1-2-2 안전 취약지대 지도·감독체계 고도화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해양선박사고 증가로 인한 대상 선박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및 제도 개선

□ '23년 추진계획

◆ 관내 등록 낚시어선 분기별 안전점검 및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

- 관내 낚시어선 자체 안전점검 지속적 실시(어선안전점검반 활용)
 - * 안전장비 비치현황(구명조끼, 소화기 등), 보험 또는 공제가입 여부, 해기사 면허 소지 여부 등
-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낚시어선 분야)
 -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실시
 - * 해양수산부, 인천시, 군·구, 해경,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어선안전조업국
- 미 수검 어선 및 방치 폐어선 관리
 - 미수검 선박 과태료 부과, 방치 폐어선 관리 추진(군·구)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안전 취약지대 지도·감독 강화	인천광역시 (수산과)	032-440-4864	-

1-3-2 인명·빈발사고 예방 및 집중관리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역별, 시기별 집중 대책을 수립하여 인명사고 예방 및 집중 관리체계 구축

□ '23년 추진계획

◆ 인명피해 및 빈발·단순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정책사업 추진

- 인천·경인항 확대 해사안전TF 회의
 - 인천항 해역 해양안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 체계
- 계절별 해상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 연 4회 계절별 해양사고 취약요인 분석, 중점 안전관리 방안 및 유관기관 협조사항 수립·전파
 - * 해경, 검사기관(KR, KOMSA), 어선안전조업국 등 합동대책 마련
 - 계절별 광역·지역해상수난구호대책회의 및 연중 해양사고 저감 TF팀 운영 협조
 - 연평어장 안전조업 현지 대책반 T/F(상·하반기)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인명·빈발 사고 예방 및 집중관리체계 구축	인천광역시 (해양항만과)	032-440-4813	-
	인천광역시 (수산과)	032-440-4863	

1-3-3 고위험선박 관리 및 지원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소형어선이 안전장비 부족, 어선 노후화 등으로 인해 어선사고 발생 및 사고 시 대응 능력 약화
- 이에 따라 소형어선, 노후화 어선 등에 대한 장비보급 등 관리 필요

□ '23년 추진계획

◆ 안전관리가 열악한 어선에 대하여 안전설비 지원 강화로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및 해양사고 예방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화재 및 충돌사고 예방, 신속한 위치 파악, 구명조끼, VHF-DSC 등 안전장비 지속 보급
- (노후 기관·장비 대체) 기관 고장 문제 해소를 위해 노후기관 대체 및 장비 개량 지원 확대
-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조업 중 발생하는 사고·재해 등에 대해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 (이동수리서비스) 도서벽지 등 정비업체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엔진, 소화·구명설비 등 안전점검, 부품교환 등 찾아가는 수리서비스 제공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고위험 선박 안전관리 지원 강화	인천광역시 (수산과)	032-440-4862	1,639백만원

1-5-3 통합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국민안전을 중시하는 시대적 요구와 이상기후·시설노후·인적과실 등 새로운 자연·사회 재난 환경에 맞추어 지속적 보완·개선 필요
- 국가 재난관리·대응 역량 제고를 통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재난으로 확산 방지 필요

□ '23년 추진계획

◆ 해양사고 매뉴얼 관리 및 재난관리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해양사고 대응 및 피해 최소화

-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 신속·체계적 재난발생 대응을 위한 유형별 상위 매뉴얼 개정에 따른 소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및 재난대응수칙 개선
- 재난안전분야 공무원 전문교육 및 매뉴얼 숙달훈련 실시
 - 재난유형별 부서장 및 실무자 교육(11월, 12월)
 - 해양 선박사고 매뉴얼 숙달 훈련 실시(11월 중)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고위험 선박 안전관리 지원 강화	인천광역시 (해양항만과)	032-440-4812	-
	인천광역시 (수산과)	032-440-4862	-

2-3-1 공공부문 선박의 선제적 기술 도입

□ 배경 및 필요성

- 직항노선에 부재한 덕적, 자도에 다목적 연료운반선을 투입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과 섬 지역 활성화 도모

□ '23년 추진계획

◆ 덕적·자도에 가스 석유 생필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연료운반선 건조

- (사업비) 6,900백만원 (국비 2,000, 시비 1,000, 군비 3,900)
- (사업기간) '21.7~'23.12
- (선박제원) 400ton 급 선박 1척 건조
- (사업주체) 웅진군
- (사업대상) 덕적도, 자도(문갑도, 굴업도, 울도, 지도, 백아도)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공공부문 선박의 선제적 기술 도입	인천광역시 (섬 발전지원과)	032-440-4994	345백만원

4-2-2 자발적 참여형 맞춤형 안전교육 체계화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 스스로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기적으로 해양안전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계기 마련 필요

□ '23년 추진계획

◆ 관련 어업인 대상 해양안전 캠페인의 확대 등 해양안전 의식개선을 위한 다각적 활동 추진

- (홍보강화) “어선안전의 날”(매월 1일), 관내 주요 항·포구에서 구명조끼 착용, 어선 점검 생활화 등 캠페인 집중 전개
 - 수협 중심 플래카드, 홍보물, 전광판 등을 통한 수시 홍보
 - 관내 주요 항·포구에서 구명조끼 착용 및 어선 안전장비 점검 등 캠페인 실시
- (안전점검 강화) 어선사고 발생 다발시기(봄철 4~5월, 겨울철 11~12월)에는 노후어선 등 2톤 이상 어선을 대상으로 관계기관(지자체·수협·한국해양 교통안전공단·해경 등) 합동 “특별 어선 안전점검” 실시
- (조업정보 서비스 홍보) 어업인 및 어업인 가족에게 어선의 위치 및 기상정보 제공을 위해 개발된 “수협조업정보알리미”(스마트폰용) 앱 배포 및 사용방법 홍보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자발적 참여형 맞춤형 안전교육 체계화	인천광역시 (수산과)	032-440-4862	-

4-3-1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 내실화

□ 배경 및 필요성

- 어선원, 외국인선원, 고령선원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교육 사각지대 개선

□ '23년 추진계획

◆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어업인 안전의식 제고 및 교육 내실화 도모

- (교육대상) 어선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 대행자
- (교육시간) 연 1회/4시간
- (추진일정) '23.1~12
- (교육대상) 1,500명
- (교육내용)
 - 인천광역시 해양수산 시책 등 홍보
 - 해상사고 사례별 분석 및 초기대응 교육, 구명설비 운영, 응급처치 등
- (관계기관) 수협중앙회, 군·구
- (관련법령) 「어선안전조업법」 제25조(안전조업교육)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자발적 참여형 맞춤형 안전교육 체계화	인천광역시 (수산과)	032-440-4862	-

4-4-1 해양안전문화 실천운동 지원 및 활성화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안전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체험형 교육 및 해양안전문화 홍보 강화를 위한 국제 행사 추진

□ '23년 추진계획

◆ 해양안전문화 확대 및 홍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

- ① 제4회 인천국제해양포럼, ②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추진

- 제4회 인천국제해양포럼(IIOF '23) 개최
 - (주최/주관)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IPA
 - (사업비) 6.5억원
 - (개최시기) '23.5(2일간)
 - (주요내용) 전야제, 개막식, 기조연설, 6개 세션
 - '23년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추진
 - (사업기관) '23.3~11
 - (사업비) 80백만원(시비 60, 구비 20)
 - (사업지역) 왕산마리나, 경인아라뱃길
 - (사업대상) 일반시민(무료체험)
 - (체험내용) 요트(왕산마리나), 경인아라뱃길(카약, 수상안전체험)
- ※ '21년 추진실적 : 14,519명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해양안전문화 실천운동 지원 및 활성화	인천광역시 (해양항만과)	032-440-4847	650백만원 (국비 550백만원)
	인천광역시 (해양항만과)	032-440-4813	80백만원 (국비 20백만원)

4-4-3 해양안전교통방송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인천항 및 서해5도 지역 등 항만, 수산업 관련 종사자에게 해양·항만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 할 수 있는 방송 미디어 환경 조성

□ '23년 추진계획

◆ 라디오를 통한 해양·항만뉴스 제공 등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구축

- (사업명) 인천 해양·항만 뉴스센터 운영
 - (사업기간) '23.1~12(연중)
 - (방송사) (주)경인방송(iFM 90.7MHz)
 - (사업비) 150백만원
 - 사업내용
 - 뉴스 프로그램 제작·방송(해양·항만·수산 뉴스, 특집리포트 등)
 - 해양항만 각종 정책·이슈 홍보, 시민과 소통하는 문화관광 행사 개최* 등
- * 인천 섬 탐방, 섬 특집 공개방송, 파워 인터뷰, 해양항만 토론회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해양안전교통방송 추진	인천광역시 (해양항만과)	032-440-4824	150백만원

울 산 광 역 시

I. 개 요

□ 어업인 · 어선 현황('22.12.31 기준)

(단위 : 명, 척, 개)

어업인	어선등록척수(낚시어선)	지자체관리 항·포구
1,326	787(39)	지방어항 4, 기타포구 20

□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기본계획 5대 전략	세부과제	소요예산
합 계	4	1,619
1.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1,519
2. 탈탄소·디지털화 촉진으로 해양모빌리티산업 선도	-	-
3.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	-
4. 실생활 중심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2	100
5.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	-

※ 소요예산은 해당과제 관련 지방비만 포함

□ 주요 추진사항

- (전략 1) 연근해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구축사업 추진, 어업인 재해보험료 지원을 통한 재해발생시 신속한 경제적 피해 복구
- (전략 4)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통한 구명조끼 착용의무화 정착 등 어업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조업 홍보 강화, '23년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

II. 2023년 시행계획

1-2-3 책임안전관리 이행 지원 및 제도 활성화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어선 전복 등 각종 사고로 국민안전 이슈가 국가적으로 대두되고, 어선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 증가
- 해양사고 발생 시 인근 조업어선의 적극적인 신고로 해양사고 신속대응
- 재해 임차료 지원을 통한 신속한 재난 대응 및 대비로 어업인의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

□ '23년 추진계획

- ◆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인 의식을 제고하고 선박안전관리의 통합적 운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연근해 어선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운영
- ◆ 해양경찰서, 어선안전조업국 등 관계 기관의 유기체제 구축
- ◆ 해사안전 업무의 실무역량 개발을 위한 내용 숙지
- ◆ 태풍 등 기상악화 발생시, 관내 어선의 육지 인양 및 안전한 대피 지원으로 재해피해 예방 및 어업인 경제적 부담 경감
- ◆ 어업인 재해보험료 지원을 통한 재해발생시 신속한 경제적 피해 복구

○ 연근해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 어선안전 인프라 확충: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보급 사업,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어업인 재해보험료 지원, 재해예방 장비 임차비 지원 등 추진
- 안전문화 확산: 어선안전 합동점검, 어업인 안전교육, 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상시 순찰·점검 강화 등

○ 어선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울산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 상황센터 112구조대	052-230-2841 052-230-2442 052-230-2222	052-230-2942
동해어업관리단	안전정보과	051-410-1066~72	051-410-1065
울산광역시	해양항만수산과	052-229-2993	052-229-2969
남구	경제정책과	052-226-5661	052-226-5260
동구	경제진흥과	052-209-3527	052-209-3519
북구	농수산과	052-241-8094	052-241-8059
울주군	축수산과	052-204-1646	052-204-1646
수협중앙회	울산어선안전조업국	052-251-2147	052-252-2530

○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지원

- (위치) 북구, 울주군
- (사업비) 620백만원(시558, 구·군62)
- (사업량) 인양기 6기
- (지원목적) 자연재해시 어선 육지 인양을 통한 어업인 재산 보호 및 평시 어획물 인양 등 활용 어업인 근로여건 개선

○ 어업재해 예방활동 임차료 지원

- (위치) 관내 항구(동구, 북구, 울주군)
- (사업비) 85백만원(시비42.5, 구·군42.5)
- (사업량) 800여척
- (대상자) 어선어업인, 어업인 단체 또는 어촌계
- (지원내역) 태풍 등 재해예방 장비·기자재 동원에 소요되는 비용

○ 수산정책보험 지원

- (위치)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 (사업내용) 전년도 납부한 어선원·어선·어업인 재해보험료에 대해 차년도 자부담 일부지원
- 사업비: 443.2백만원(시비 221.6, 구·군비 221.6)
 - * 어선원(228척) : 210백만원(시비 105, 구·군비 105)
 - * 어선(232척) : 224.8백만원(시비 112.4, 구·군비 112.4)
 - * 어업인(242명) : 8.4백만원(시비 4.2, 구·군비 4.2)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어업재해 예방임차료 지원	울산광역시 (해양항만수산과)	052-229-2992	85백만원
소형어선인양기설치지원		052-229-2993	620백만원
어업인 재해보험료 지원 (어선원·어선·어업인)			443.2백만원
어선안전관리 제도개선	울산광역시 (해양항만수산과)	052-229-2993	-

□ 배경 및 필요성

- 유가상승으로 인한 어업생산활동 위축, 노후어선 증가로 인한 해양사고 위험 증가에 대비코자 기관·장비 교체 등 노후어선 현대화 추진

□ '23년 추진계획

- ◆ 저효율·노후기관을 고효율로 대체 지원하여 안전조업 및 해양사고 예방,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 ◆ 소형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및 항해 안전장비 지원으로 어선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피해 예방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감소

○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 (사업기간) '23.2~12
- (사업대상) 어선의 기관·장비·설비 대체 또는 설치를 희망하는 관내 어업인
- (사업비) 303백만원(국 91, 시 45.5, 구·군 45.5, 자담 121)
- (사업량) 20척 정도
- (지원기준) 국·시·구비 보조사업(보조 60%, 자담 40%)
- (사업내용) 고효율 장비 설치·교체 및 노후기관 대체 등 지원

○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사업

- (사업기간) '23.3~12
- (사업대상) 연근해 어업허가 어선 중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 (사업비) 5.8백만원(국 1.8, 시 0.9, 구·군 0.9, 자담 2.3)
- (사업량) 5척 정도

- (지원기준) 국·시·구비 보조사업(보조 60%, 자담 40%)
- (사업내용) VHF-DSC(초단파대무선전화), 자동소화장비, 구명조끼 등
-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운영사업
 - (사업기간) '23.2~12
 - (사업대상) 관내 21개 어촌계(관내 5톤 미만 어선 661척)
 - (사업비) 62백만원(국 31, 시 31)
 - (사업량) 500척 정도
 - (사업내용) 어업용기자재(어선 엔진 등)의 간단한 수리·점검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울산광역시 (해양항만수산과)	052-229-2993	303백만원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		052-229-2992	5.8백만원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052-229-2992	62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불법어업 단속 및 지도로 어업질서를 확립하여 위반행위 근절과 자원남획 방지
- 어선사고 증가 및 낚시 이용객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기적 안전점검 필요
- 구명조끼 미착용의 안전무시 관행 여전

□ '23년 추진계획

- ◆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관행적인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필요시 강력한 사법처벌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
- ◆ 어선 및 낚시어선 주기적 점검을 통한 어선 안전강화 및 안전의식 제고
- ◆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통한 구명조끼 착용의무화 정착

○ 불법어업 합동지도·단속

- (기간) '23년 상시
- (단속반) 시, 구·군 및 유관기관 합동
- (방법) 육·해상 합동단속팀 구성·운영

※ 어업지도선 울산해오름호(49톤) 상시 출항 가능

○ 다목적어업지도선(울산해오름호)

- 사업비 : 2,881백만원
- 선박재원 : 강선+알루미늄, 49톤급 1척, 엔진 1,468마력 x 2대
- 승선정원 : 20명(승무원 5, 기타 15)
- 용도 : 어업질서 확립, 안전조업 지도, 적조 예찰 등
- 건조일자 : '18.6.25

- 어선 및 낚시어선 사고예방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 (기간) '23년 분기별 점검
 - (대상) 관내 어선 791척(낚시어선 43척 포함)
 - (점검반) 시, 구·군, 해경,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안전조업국 등
 - (점검사항) 안전설비, 항해장비, 구명조끼(구명부환)
- 안전문화운동 전개
 - 7대 안전무시관행 중 구명조끼 미착용 상시 홍보 실시
 - 낚시어선 점검 및 단속을 통한 홍보 실효성 확보, 현장교육 실시
 - 시, 구·군 낚시감독공무원 안전보안관(5명) 편성 및 활동
- 어업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조업 홍보 강화
 -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및 상시작동 의무화 홍보
 - 연 1회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 실시(6월 예정)
 - 20톤 이상 선박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지도·홍보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불법어업 지도단속	울산광역시 (해양항만수산과)	052-229-2992	-
어선 및 낚시어선점검 안전문화운동 안전조업 홍보 강화		052-229-2993	-

□ 배경 및 필요성

- 학생, 청소년, 시민 대상으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해양안전문화 확산

□ '23년 추진계획

◆ 학생, 청소년, 시민 대상으로 수상안전 및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 교육을 통한 해양사고 사전예방 및 응급 상황대처 교육

- '23년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간) '23.5~10
 - (위치) 3개소 (태화강 하류 및 연맹훈련장, 진해해수욕장, 일산해수욕장)
 - (대상) 학생, 청소년, 시민 누구나
 - (내용) 수상안전교육(구명조끼 착용법, 생존수영, 응급상황 및 대처법), 해상스포츠 체험(카약·카누, 윈드서핑, 스킨스쿠버) 등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울산광역시 (물류해양진흥과)	052-229-5313 052-229-2993	100백만원

경 기 도

I. 개 요

☐ 어업인·어선 현황('22.12.31 기준)

(단위 : 명, 척, 개)

어업인	어선등록척수(낚시어선)	지자체관리 항·포구
2,456	1,010(76)	32개소 (국가어항 2, 지방어항 5, 어촌정주어항 등 25)

☐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기본계획 5대 전략	세부과제	소요예산
합 계	4	2,570
1.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	175
2. 탈탄소·디지털화 촉진으로 해양모빌리티산업 선도	-	-
3.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	-
4. 실생활 중심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3	2,395
5.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	-

※ 소요예산은 해당과제 관련 지방비만 포함

☐ 주요 추진사항

○ (전략 1) 어선 안전설비·장비 지원

- 노후어선 기관·장비 등 교체 71개(구명조끼40, 무선통신기10, 선박위치자동발신장치 6, 기관 3, 고효율에너지장비 12)

○ (전략 4) 체험중심 교육시스템 개발 및 확대

- 해양안전체험관 11개(육상체험 7, 수조체험 3, 응급처치 1) 프로그램 운영

○ (전략 4)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 수상레포츠 체험, 조종면허 취득교육, 항해심화교육, 덩기요트, 선박 탈출 훈련, 카약, 모터보트 체험 및 교육 운영

○ (전략 4) 해양레저 인력양성

- 정규반 : 해상엔진 정비훈련(3개월) 및 FRP선체 정비(1개월)
- 단기반 : 해상엔진 자가정비 교육 및 맞춤형 위탁교육(2~5일)

II. 2023년 시행계획

1-3-3 고위험선박 관리 및 지원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노후어선의 기관·장비 교체와 선박위치발신장치(V-PASS), 무선통신기, 구명조끼 등 어선의 구명·항해안전설비 지원을 통해 어선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으로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 '23년 추진계획

- (사업비) 260백만원
- (사업지) 화성시,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 (사업량) 131개(구명조끼 96, 무선통신기 13, V-PASS 10 양망기 등 9, 기관 3)
- (추진절차) 사업자 선정(1~3월) → 개별 및 공동구매 신청·설치(4~12월) → 보조금 지급(4~12월)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지원	경기도 (해양수산과)	031-8008-4547	250백만원 (국비 75백만원)

4-1-1 체험중심 교육시스템 개발 및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세월호 특별법 제36조에 따른 해양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정업무 수행
- 전국민의 안전한 바다 이용을 위해 기초 해양안전 수칙과 비상 대응방법을 교육하여 해양사고 대응능력 배양

□ '23년 추진계획

- (사업내용)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체험프로그램) 11개(육상체험 7, 수조체험 3, 응급처치 1)
 - (체험내용) 해양생존체험, 해양안전, 선박화재진압, 비상상황 체험 등
- (사업규모) 해양안전체험관 연면적 9,833.49㎡(지하1층, 지상3층)
- 추진목표
 - 연간 체험 프로그램 인원 8만명 추진
 - 도 교육청 연계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추진
 - 해양안전 관련 전문교육기관 추가 지정 및 인증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지원	경기도 (해양수산과)	031-8008-4506	3,325백만원 (국비 1,995백만원)

4-2-3 해양안전문화 실천제도 활성화

□ 배경 및 필요성

- 요트, 카약 등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기회 제공을 통한 여가 복지 문화 창출
- 현장 해양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

□ '23년 추진계획

- (사업내용)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및 해양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 (안산) 수상레포츠 체험, 조종면허 취득교육, 항해심화교육 등
 - (시흥) 덩기요트, 바나나보트 등 체험 및 선박 탈출 훈련 등
 - (김포) 수상안전교육 및 카약, 모터보트 등 레저기구 체험
- (사업규모) 3개 시(안산, 시흥, 김포) 교육프로그램 운영
- (추진목표) 연간 약 20,000명 교육프로그램 참여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경기도 (해양수산과)	031-8008-4506	730백만원 (국비 365백만원)

4-3-2 교육요원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 배경 및 필요성

- 경기도는 해양레저산업의 국내 최대 소비지로서 유지보수 정비인력 수요 증가
 - 전국 동력수상레저기구 신규 등록지역 중 경기도가 1위(17.9%)
- 안전한 해양레저활동을 위한 유지보수 인력양성 및 사용자 안전 관리 능력 함양

□ '23년 추진계획

- (사업내용) 해상엔진 및 선체 유지보수, 자가정비 등 해양레저 전문 인력양성 교육
 - (정규반) 해상엔진 정비훈련(3개월) 및 FRP선체 정비(1개월)
 - (단기반) 해상엔진 자가정비 교육 및 맞춤형 위탁교육(2~5일)
- (사업규모) 정규반 3회 / 단기반 14회 운영
- 추진목표
 - (교육인원) 200명 내외(정규반 3회 42명, 단기반 14회 158명)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해양레저 인력양성	경기도 (해양수산과)	031-8008-4505	700백만원

강 원 도

I. 개 요

□ 어업인·어선 현황('22.12.31 기준)

(단위 : 명, 척, 개)

어업인	어선등록척수(낚시어선)	지자체관리 항·포구
9,262	2,580(252)	■ 항만 : 무역항 5, 연안항 1, ■ 어항 : 국가 14, 지방 14, 기타 30

□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기본계획 5대 전략	세부과제	소요예산
합 계	5	2,351
1.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4	2,351
2. 탈탄소·디지털화 촉진으로 해양모빌리티산업 선도	-	-
3.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	-
4. 실생활 중심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1	-
5.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	-

※ 소요예산은 해당과제 관련 지방비만 포함

□ 주요 추진사항

- (전략 1) 어선·낚시어선 합동점검(7회/361여척), 안전장비 보급 지원, 유관기관 협업 강화, 어선원 재해보상 및 진료비 지원
- (전략 4) 어선·낚시어선 합동 안전교육*(8회, 220명) 및 사고취약선박 대상 현장방문 교육** 시행

* 구명설비 시연, 관련법규, 각종 안전설비 사용법, 인명구조·응급처치 요령 등

** 기초 항해당직 수칙, 기관정비요령 등 기본수칙 집중교육 및 기기별 관리요령 등

II. 2023년 시행계획

1-1-1 국민의 해사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도 기반 조성

□ 배경 및 필요성

- 어업인의 안전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어선원의 안전권리 강화 및 조업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제도적 연관사항 확대 시행
 - 해양선박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해양 유도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조업 및 항해금지 고시, 저도어장 안전보호지침(어업지도선 운영) 등

□ '23년 추진계획

◆ 어선사고, 풍수해 등으로 인한 해양수산분야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역량 강화

- 조업 및 항해금지해역 설정고시 지속 운영
 - 「어선안전조업법」이 제정('19.8.27) 및 시행('20.8.28) 됨에 따른 동 고시를 제정('21.7.1)하여 연안어선의 효율적 관리
 - * 금지해역(연안 1해리 이내) 및 금지기간 및 시간 설정 등
- 저도어장 안전보호 지침에 따른 어업지도선 지속 운영
 - (조업기간) 매년 4.1~12.31(9개월)
 - 출어선(연 8,700여척), 안전관리 선박 지원(1일 6척)
 - * 어업지도선(1척), 해경(2척), 해군(2척), 수협(1척)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어선안전관리제도	강원도 (어업진흥과)	033-660-8358	-

1-2-3 책임안전관리 이행 지원 및 제도 활성화

□ 배경 및 필요성

- 어선원에 대한 재해보상보험료를 일부 지원하여 안정적 어업경영 및 어선원 보호 도모

□ '23년 추진계획

◆ 연근해 어선소유자의 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으로 어업경영 안정화 기여

-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도내 연근해 어선소유자에 대한 어선규모별 자부담분 차등 일부 지원
- 나잠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 나잠어업인의 작업중 재해발생 대비 보험료 자부담분 일부 지원
- 잠수 어업인 진료비 지원
 - 잠수질병 요양급여 외래 진료비 중 본인 부담액 일부 지원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어선·어선원 보험료 지원	강원도 (어업진흥과)	033-660-8362	1,779백만원

1-3-3 고위험선박 관리 및 지원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소형어선의 인력난에 의한 종사자 확보가 어려워져 나홀로 조업 증가로 해난사고 발생시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고, 발생시 안전장비 확보로 사고방지

□ '23년 추진계획

◆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사고발생 예방은 물론 발생 후에도 신속한 전파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비 보급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

- 어선사고 발생률 저감을 위한 항해 안전장비 지원

* 초단파대 무선전화, 자동소화시스템, 구명조끼, 어선용 구명동의 등

** 레이다, 구명사다리, 소화기, V-PASS 등

○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 태·폭풍, 해일 등 해양기상 악화시 소형 어선의 신속한 인양 및 대피를 위해 인양기 시설 설치

○ 조난어선 예인 구조비 지원

- 기관고장 등 자력항해 불가어선 발생시 조난 예인어선 구조활동비 지급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어선사고예방	강원도 (어업진흥과)	033-660-8359	572백만원

1-5-3 통합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어선사고 발생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간 긴밀 공조 및 유지 필요
- 재난발생 대비 사전예방 및 발생시 적극 대처를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매뉴얼 필요

□ '23년 추진계획

◆ 재난사고 대응 매뉴얼 관리 및 어선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 재난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 신속·체계적 재난발생 대응을 위한 유형별 상위 매뉴얼 개정에 따른 소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및 재난대응수칙 개선
 - * 조수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해양선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유관기관 협업 주요 강화방안
 - 어선사고 대비 시군, 해경,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등 비상연락망 구축
 - 어선사고 발생시 협업체계 강화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를 위한 합동훈련 실시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재난안전 매뉴얼 관리 및 안전관련 유관기관 협업	강원도 (어업진흥과)	033-660-8358	-

4-2-2 자발적 참여형 맞춤형 안전교육 체계화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5년간 전체 선박사고 중 어선이 약 77%차지 하였으며, 사고 원인별로 기관손상, 충돌이 해양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

□ '23년 추진계획

◆ 선박 운항자 대상 안전교육과 선종별 취약요인 점검·검사 확행 및 기상정보 등 해양안전정보 제공으로 신속한 대처

- 어선 안전사고 예방 추진
 - 어선사고 상황별 예방 요령 및 응급대처 교육 홍보(8개반, 월1회)
- 어선 및 낚시어선 관계기관 합동 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 * 합동점검(4회/120여척), 안전교육(8회/220명)
- 봄철 및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 실시
 - 레이더 등 전자장비 관리상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
- 주요 점검 내용
 - 출항 전 자체점검(윤활유, 냉각수와 배터리 등) 및 소모성 부품 교환주기 준수
 - 항해장비(레이더, 선박위치 자동식별장비, 조타기 등) 유지보수 및 작동법 숙지
 - 기상악화시 무리한 조업자제, 비상시 피항요령 및 피항지 숙지 등 교육
 - 주요 해양사고 및 기상 악화시 안전조치 강화 등 휴대전화 메시지 전송확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안전수칙 전달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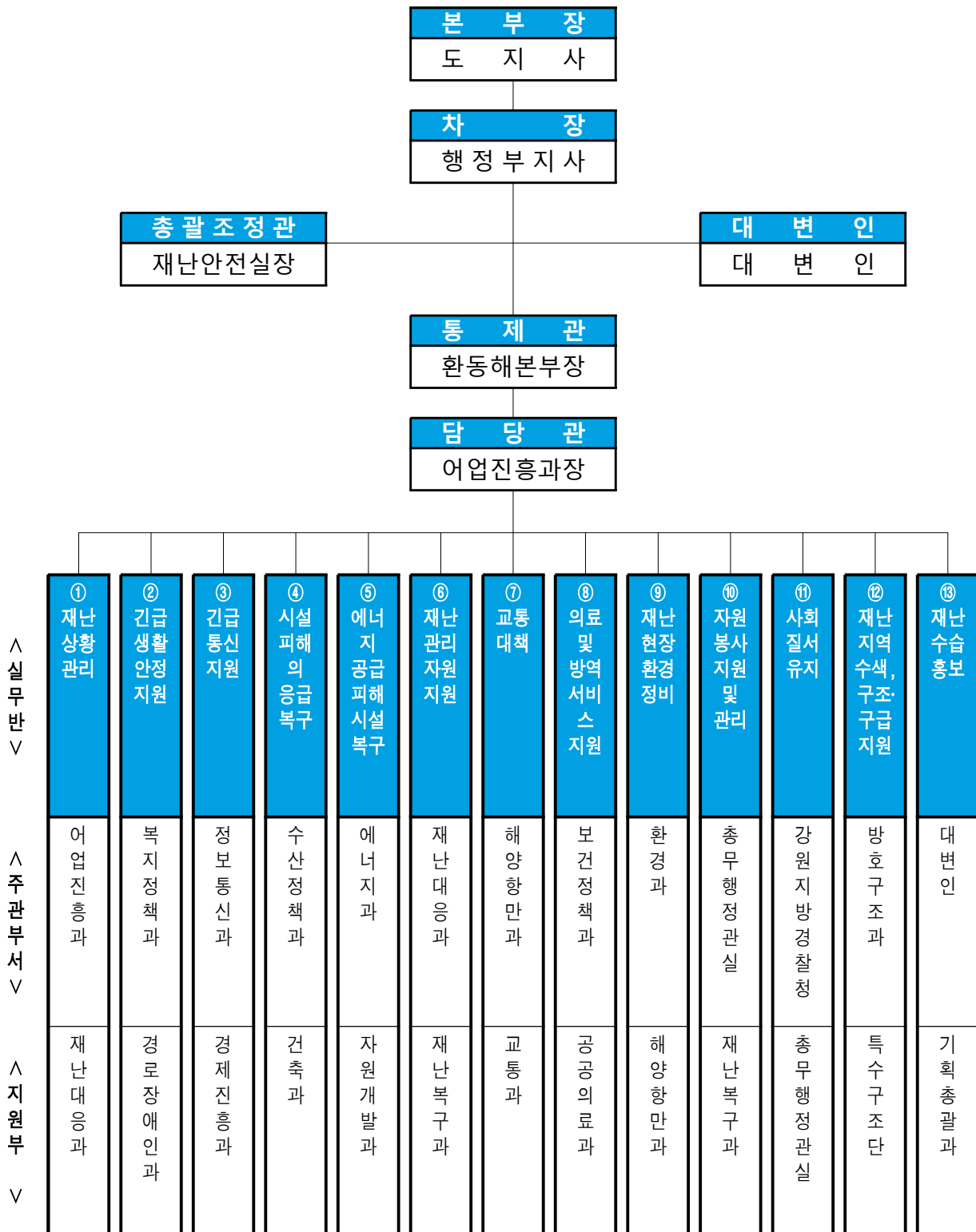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어선안전교육	강원도 (어업진흥과)	033-660-8358	-

참고

강원도 해난사고 대책본부 구성 및 시행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부 및 실무반 주요임무

구성		주요 임무
지휘부	본부장 (도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 총괄 접경해역(북방한계선 인근해역)에서조난 등으로 선박, 사람이 북측으로 아동,표류 가능 있을 경우 가용한 통신망 활용 등 어업지도선 투입
	차장 (행정부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부장 보좌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대변인 (대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 수습홍보 총괄
	통제관 (환동해본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담당관 (어업진흥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실무반	1.재난상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대통령·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사고수습본부장 특별 지시사항 처리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지역사고수습본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시·도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2. 긴급 생활 안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3. 긴급 통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통신기반시설 긴급복구 지원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관할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접경해역(북방한계선 인근해역)에서는 가용한 통신망 활용 등 해수부, 해경 등 관계기관 실시간 정보 시스템 구축

구성		주요 임무
실무반	4.시설피해 의응급 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 관할지역 재난현장 응급복구 현황 파악
	5. 에너지 공급 피해시 설 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 관할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6.재난관리 자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 운영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가동 •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 재난관리자원의 비축·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7.교통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 교통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8. 의료 및 방역 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9.재난현장 환경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 • 관할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구성		주요 임무
실무반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11. 사회질서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12. 재난지역 수색,구조·구 급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13. 재난 수습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텔레비전·라디오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 사항 등의 전파 •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 현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고수습본부, 시·도 재난안전 대책 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충 청 남 도

I. 개 요

□ 어업인·어선 현황('22.12.31 기준)

(단위 : 명, 척, 개)

어업인	어선등록척수(낚시어선)	지자체관리 항·포구
13,155	5,530(1,089)	무역항 5, 연안항 3, 국가어항 10, 지방어항 28, 기타포구 34

□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기본계획 6대 전략	세부과제	소요예산
합 계	5	4,673
1.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4	4,673
2. 탈탄소·디지털화 촉진으로 해양모빌리티산업 선도	-	-
3.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	-
4. 실생활 중심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1	-
5.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	-

※ 소요예산은 해당과제 관련 지방비만 포함

□ 주요 추진사항

- (전략 1) 어선·어선원 등 대상 어업보험료 지원사업 추진(7,905건, 연중),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 마련(3월) 및 낚시전용선 도입을 위한 전문가 연구 추진(연중), 연근해어선 안전설비(구명·소화장치 등 417개) 지원(1월~)
- (전략 2) 연근해어선(105척) 노후장비 → 친환경 기자재 교체지원(1월~)
- (전략 4) 어업 집중기(2,4분기) 화재취약분야 안전점검 및 양망기 등에 의한 사고예방 매뉴얼 홍보 추진(연중)

II. 2023년 시행계획

1-2-3 책임안전관리 이행 지원 및 제도 활성화

□ 배경 및 필요성

- 어선원 및 어선이 어업활동으로 각종 재해발생 시 어선원 보호 및 안정적 조업활동 보장

□ '23년 추진계획

◆ 어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어선 및 어선원, 수산인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 (사업비) 3,461백만원 (도비 450, 시·군비 1,038, 자담 1,973)
- (사업지) 연안 7개 시·군(보령, 아산,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 (사업량) 7,905건
- (사업내용) 국비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에 대한 지방비 지원
 - 톤급별 지방비(도비+시비) 보조율 차등 지원
 - * 어선원보험 : 5톤미만 ~ 100톤미만(43%)
 - ** 어선보험 : 5톤미만(43%), 10톤미만(35%), 30톤미만(27%), 50톤미만(19%), 100톤미만(10%)
- (추진상황) 보험 가입자 보조금 지급(6~12월/반기별) → 보험금 지급실적 및 사고내용 제출(6~12월/반기별)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충청남도 (수산자원과)	041-635-2772	3,461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어선법」에 따른 어선설비(전기,소방,구명,항해,무선설비) 구입 설치비 지원으로 어선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 '23년 추진계획

◆ 소형어선에 소방, 구명, 항해 안정장비 지원으로 인명피해 예방

- (사업비) 163백만원(국비 49, 도비 15, 시·군비 34, 자담 65)
- (사업대상) 연안 6개 시·군(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 (사업량) 417건
- (사업내용) 연근해 어선의 전기·소방·구명·항해·무선설비 설치지원
- (지원내역) 초단파대 무선전화기(VHF-DSC), 자동소화시스템(화재탐지기, 자동소화기, CCTV), 구명조끼, 선박자동입출항단말기(V-PASS), 그 외 「어선법」 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에 따른 어선설비 구입·설치 지원
- (추진일정) 사업자 선정(1~3월) → 개별 및 공동구매 신청·설치(4~12월) → 준공검사 및 보조금 지급(4~12월)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충청남도 (수산자원과)	041-635-2772	163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저효율 기관·장비·설비 대체로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 '23년 추진계획

◆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된 저효율 기관·장비·설비 대체 지원

- (사업비) 1,049백만원(국비 315, 도비 95, 시군비 220, 자담 419)
- (사업대상) 연안 6개 시·군(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 (사업량) 105척
- (사업내용) 연근해 어선의 노후기관·장비 교체 지원 및 해양사고 예방
- (지원내역)
 - 유류비 절감을 위한 유류절감장치 설치
 - 어선 노후 장비·설비 대체 및 신규로 어선 장비·설비 설치
- (추진일정) 사업자 선정(1~3월) → 수협 공동구매 신청 및 설치(4~12월)
→ 준공검사 및 보조금 지급(5~12월)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충청남도 (수산자원과)	041-635-2772	1,049백만원

1-5-1 사고취약분야 안전관리 고도화

□ 배경 및 필요성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 및 낚시어선의 구조 및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합동 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의식 고취

□ '23년 추진계획

- 어선사고 다발시기 각종 어선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 어선 안전점검 및 낚시어선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

《2023년 어선 및 낚시어선 안전점검 실시 계획》

- 기간
 - 어선 : '23.4(봄철), 11~12월(겨울철)
 - 낚시어선 : '23.1~2월(겨울철), 4~5월(봄철), 8~10월(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가을철)
- 장소 : 연안 6개 시군(보령, 서산, 당진, 홍성, 서천, 태안) 등
- 점검대상 : 10톤 이상 어선 약 400여척, 낚시어선 997척 중 50%이내
- 점검방법 : 유관기관(도, 시·군, 해경,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안전조업국 등) 합동 점검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낚시어선 안전점검	충청남도 (어촌산업과)	041-635-4834 041-635-4848	-

□ 배경 및 필요성

- 원거리 조업에 따른 과속, 정비불량 등 운항부주의에 의한 어선 사고 매년 증가로 사고예방 대책 방안 마련 필요

□ '23년 추진계획

◆ 어업 집중기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어업인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조업 교육 및 사고예방 매뉴얼 홍보 추진

- (계획수립)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목표설정, 인명피해 예방, 안전조업 문화확산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안전점검) 어업활동이 증가하는 3~5월, 10~12월에 기관·전기설비 및 어구설비(양망기·밧줄등) 등 취약분야 중점 안전점검 추진
 - 도(시·군), 해경,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안전조업국
- (안전교육) 안전조업교육을 통한 사고예방 및 어업인 안전의식 고취
 - 어선안전의 날 캠페인과 연계하여 어업인의 인식개선 지속적인 추진
- (안전문화 확산) 20톤미만 어선의 비조업 시 항해당직 준수제도, 20톤이상은 관련법의 항해당직 규정 이행토록 지도
 - 항해당직 관련 안전조업교육 실시, '조업정보알리미앱' 링크 등 홍보
- (예방매뉴얼) 조업시 양망기, 투망, 로프 등 어구사용 부주의(끼임, 추락, 타격 등) 따른 사고예방 매뉴얼 등 어업인 홍보자료 배부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안전문화 확산	충청남도 (수산자원과)	041-635-4134	-

전라북도

I. 개요

□ 어업인·어선 현황('22.12.31 기준)

(단위 : 명, 척, 개)

어업인	어선등록척수(낚시어선)	지자체관리 항·포구
5,581	2,795척(271척)	국가어항 7, 지방어항 10, 어촌정주어항 16, 소규모항포구 9

□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기본계획 6대 전략	세부과제	소요예산
합 계	6	937
1.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3	837
2. 탈탄소·디지털화 촉진으로 해양모빌리티산업 선도	-	-
3.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	-
4. 실생활 중심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3	100
5.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	-

※ 소요예산은 해당과제 관련 지방비만 포함

□ 주요 추진사항

- (전략 1)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어선안전조업법 시행 및 어선 안전조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 낚시어선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및 계절별 어선사고 예방 합동점검
- (전략 4) 직접 보고 배우는 기초해양안전체험관 운영, 해양사고 예방정보 및 포스터 송부, 도민 대상 기초 수상안전 수칙과 비상 대응요령 교육실시 및 체험

II. 2023년 시행계획

1-3-2 인명·빈발사고 예방 및 집중관리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자연·사회재난 등 해양에서의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예방·대비 대책 추진 필요
-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현장중심의 교육·훈련 강화 및 상황대응체계 확립 등 필요

□ '23년 추진계획

◆ 선박사고, 해양오염, 풍수해 및 지진 등 해양수산 분야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역량 강화

-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 신속·체계적 재난발생 대응을 위한 유형별 상위 매뉴얼 개정에 따른 소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및 재난대응수칙 개선
- 재난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재난관리 소 단계(예방·대비·대응·복구)에 걸친 전문교육 강화 및 대응훈련 내실화 추진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역량 강화	전라북도 (해양항만과)	063-280-3377	-
		063-280-3379	

□ 배경 및 필요성

- 어선 안전사고 예방 대응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저효율·노후기관·장비·설비 및 에너지절감형 LED등 대체로 어업 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 태풍·폭풍 등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 육지 인양으로 재산피해 예방 및 평상시 수산물, 어구 등의 인양으로 부족한 노동력 해소

□ '23년 추진계획

- ◆ 어선안전조업을 위한 연근해어선 위치정보 상시관리 체계구축을 통한 어선사고 예방 도모
- ◆ 소형어선 노후기관 장비 현대화를 통한 안전조업 및 에너지 절감
- ◆ 5톤이하 소형어선 소유 어업인들에게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방법 마련

○ 어선 위치발신체계 정비

- 고의적으로 선박위치발신장치를 끄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 VHF-DSC 등 사용방법 교육, 상시작동 제도·홍보 강화

* 총톤수 2톤이상~3톤미만의 어선은 초단파대 무선설비(VHF-DSC)를 미 설치 시 출항 제한 등 조치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 및 어선 안전조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제1차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22 ~ '26년) 수립

○ 해양사고 예방 및 영업질서 유지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단속 정례화

- 안전저해행위 근절을 위해 해양수산부(해수청), 해양경찰청(해경서) 등 관계기관 간 합동단속 실시

○ ‘낙시해(海)’ 앱 시범운영

- 낙시어선 안전관련 정보 확인, QR코드 승선자명부 작성·제출, 긴급구조 요청 등

* 군산 비응 107척 대상 시범운영

○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

- (사업량) 90대
- (사업비) 360백만원
- (내용) GPS프로타, 어군탐지기, 레이더, 그물인양기 등

○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 (사업량) 24척
- (사업비) 277백만원
- (내용) 노후기관·장비·설비 및 에너지절감형 LED등 대체

○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 (사업량) 24척
- (사업비) 277백만원
- (내용) 노후기관·장비·설비 및 에너지절감형 LED등 대체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인명·반발사고 예방 및 집중관리체계 구축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063-280-4652	-
고위험선박 관리 및 지원강화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063-280-4652	837백만원
		063-280-4651	

1-5-1 사고취약분야 안전관리 고도화

□ 배경 및 필요성

- 다중이용선박*의 이용객 연간 3천만명 이상이며, 수요 증가 추세
 - 다중이용선박의 사업별로 안전관리 절차와 기준이 상이하여 개선 필요성 제기

* 13인 이상 승선하는 여객선, 유·도선, 통선, 낚시어선 및 레저선박(요트 등)

□ '23년 추진계획

◆ 어선(낚시어선 포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사고 개연성 사전차단

- 낚시어선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및 계절별 어선사고 예방 합동점검
 - (점검대상) 시·군별 신고 낚시어선
 - (점검내용) 통신장비, 기관설비, 구명설비, 소방설비, 항해설비 등
- 수상레저 안전관리 지도·점검 및 홍보활동
 - 구명조끼 착용, 출항 전 개인 안전점검(연료유, 배터리 점검 등) 확대 등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홍보·교육
 - 수상레저사업자 및 종사자 소집교육
- 유·도선 안전관리 지도·점검 실시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고위험선박 관리 및 지원강화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063-280-4652	-
	전라북도 (해양항만과)	063-280-4714	

4-1-1 체험중심 교육시스템 개발 및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레저 저변확대, 레저스포츠 이용증가 등으로 일반인의 해양 활동 증가에 따라 대국민 해양안전교육 및 체험 확대 필요

□ '23년 추진계획

◆ 다양한 해양안전 체험기반 마련으로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제고 및 안전의식 생활화 도모

- 도민의 안전한 해양레저이용을 위한 기초 수상안전 수칙과 비상 대응 요령 교육실시 및 체험
 - 군산(해양소년단전북연맹), 김제(지평선마린리조트), 순창(섬진강수상레저연맹), 부안(전북요트협회) 등에서 체험활동 운영
-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여객터미널, 해수욕장 등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추진
 - * 구명조끼 착용법, 응급처치 및 대응요령 등
- 수협중앙회 주관 어선안전조업 교육 시 위급상황 조치 교육 강화 요청
 - * 심폐소생술, 조난신고 등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지역별 체험공간 마련	전라북도 (해양항만과)	063-280-4714	100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수상레저활동 및 낚시어선체험 등 해양활동 인구증가에 따른 해양안전의 올바른 이해와 문화 정착 필요

□ '23년 추진계획

◆ 도민대상 해양안전캠페인 확대, 다양한 매체 활용 해양안전 종합홍보 등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 활동 추진

- 구명조끼 등 해양안전장비, 심폐소생술 등 비상시 대응요령 등을 직접 보고 배우는 기초해양안전체험관 운영(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 다중이용선박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문화 확산 참여(군산해양수산청 주관)
 - 여객선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 비상시 대피요령 등 이용객의 비상 시 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안전수칙 사전교육 실시
 - 다중이용시설 내 구명조끼 착용 사진 상설비치, 구명설비 사용방법 및 비상시 대피요령 설명문 게시 등
- 어선안전의 날 현장캠페인 및 어업인 교육 참여(군산어선안전조업국 주관)
- 해양사고 예방정보 및 포스터 송부(매월 1회)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해양안전문화 확산	전라북도 (해양항만과)	063-280-3377	-

4-3-1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 내실화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레저 저변확대, 여객선 이용증가 등 일반인의 해양활동 증가에 따라 대국민 해양안전교육 및 체험 확대 필요

□ '23년 추진계획

◆ 다양한 해양안전 체험기반 마련으로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제고 및 안전의식 생활화 도모

- 도민의 안전한 해양레저이용을 위한 기초 수상안전 수칙과 비상 대응요령 교육 실시 및 체험
 - 한국해양소년단전북연맹, 전북요트협회, 도 119안전체험관 시설 활용
-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여객터미널, 해수욕장 등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추진
- 수협중앙회 주관 어선안전조업 교육 시 위급상황 조치 교육 강화 요청
- 해양·수산 유관기관 관련 시설을 활용한 체험기회 확대
 - 전북학생해양수련원을 활용한 도민의 해양안전체험 확산 추진
- 초·중학생 대상 해양안전교육 확대 및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운영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및 한국해양소년단전북연맹과 협조하여 추진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지역별 체험공간 마련	전라북도 (해양항만과)	063-280-4714	-

전 라 남 도

1. 개 요

□ 어업인 · 어선 현황('22.12.31 기준)

(단위 : 명, 척, 개)

어업인	어선등록척수(낚시어선)	지자체관리 항·포구
5,581	2,795척(271척)	국가어항 7, 지방어항 10, 어촌정주어항 16, 소규모항포구 9

□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기본계획 6대 전략	세부과제	소요예산
합 계	10	8,942
1.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6	6,109
2. 탈탄소·디지털화 촉진으로 해양모빌리티산업 선도	-	-
3.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2	13
4. 실생활 중심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2	2,820
5.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	-

※ 소요예산은 해당과제 관련 지방비만 포함

□ 주요 추진사항

- (전략 1) 14개 시·군별 낚시인 안전관리 지침 마련, 소모품성 해양 구조·구난 물품 지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재투기 방지를 위한 기반 시설 구축,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재난대비 교육 및 훈련 실시
- (전략 3)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여객선 출항통제 제도 운영현황 개선
- (전략 4) 청소년해양교육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체험교실) 운영

II. 2023년 시행계획

1-1-1 국민의 해상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도 기반 조성

□ 배경 및 필요성

- 어선등록 척수가 27,807척으로 전국 66,207척의 42% 정도 보유
- 그간의 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어선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전국 어선사고는 지속적 증가 추세

* 연도별: '17년)1,756건→'18년)1,928건→'19년)2,004건→'20년)2,030건→'21년)2,209건

□ '23년 추진계획

◆ 연근해 어선사고 감소를 위해 어선 안전관리 체계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대어업인 홍보 예방활동 강화

- 어업인 피부에 와 닿는 안전관리체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
- 14개 시·군별 낚시인 안전관리 지침 마련 추진
 - (근거)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9조(낚시인 안전의 관리)
 - (내용) 낚시인 준수사항, 기상악화시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위험 지역 출입금지, 사고 발생의 보고 등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어선 안전관리 제도개선	전라남도 (수산자원과)	061-286-6952	-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해상 조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수색구조·구난을 수행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역할이 증대
- 구조물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해양구조단체에 구조물품 지원 필요

□ '23년 추진계획

◆ 민간해양구조단체 구조장비 지원을 통한 민간의 해양사고 대응 수준 향상

- 공모를 통한 사업자 지원으로 지원의 투명성 확보
- 해양구조를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최근 1년 내 해양구조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수상구조사 자격증 보유자가 소속된 단체 등의 자격요건 필요
- 소모품성 해양 구조·구난 물품 지원
 - 레스큐 튜브, 구명조끼, 구조용 로프백, 구조환, 응급 구급상자, 스쿠버 장비, 산업 잠수장비*, 해상화재 구조물품 등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선박안전관리 통합운영체계 구축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061-286-6831	96백만원

1-3-2 인명·빈발사고 예방 및 집중관리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빈발하는 단순사고에 대한 집중관리 강화
- 바다에 버려진 밧줄, 어망 등이 선박의 추진기에 감기거나 비닐 봉투가 냉각수 파이프에 빨려 들어가 엔진 부하 유발하여 사고 발생
 - * 전체 선박사고 1/10이 해양쓰레기로 인해 발생함

□ '23년 추진계획

◆ 해양쓰레기 재투기 방지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해양환경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추진

- 조업 중 해양쓰레기 수거 및 재투기 방지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 어선이 조업 중 인양한 폐어구 등 수매(2,915톤)
 - 어선이 많은 항·포구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45개소)
- 해양환경 관리 필요성에 대한 홍보 등 종사자 의식개선 추진
 - '연안 정화의 날' 운영(매월 셋째주 금요일, 민간 자율 참여)
 - 해양환경 보전분야 민간단체 활동 지원(10개 단체)
 - * 수중 정화활동,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어민단체 환경교육 등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폐어망·로프 감김사고 예방 대책 추진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061-286-6951	5,330백만원

1-5-1 사고취약분야 안전관리 고도화

□ 배경 및 필요성

- 연근해어선에 대한 기관·전기·구명·소방 등 어선설비 지원을 통해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및 최소화 등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 '23년 추진계획

◆ 어선 안전사고 발생 시 사망·실종 예방 안전인프라 확충 및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으로 안정적 어업활동 도모

○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 (지원대상) 「수산업법」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지원내용) 어선설비 150여종

*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자동소화시스템, 구명조끼,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 「어선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그 밖의 어선설비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어선 안전설비·장비 지원	전라남도 (수산자원과)	061-286-6953	684백만원

1-5-2 선종별 안전관리체계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안전관리 주체별, 시기별로 안전점검이 중복적으로 이행되고 있어 통합적 운영 추진을 통한 어선안전 지도·감독 체계 정비 필요
- 지자체관리 선박에 대해 자체점검 시 부족한 전문성을 유관 기관과의 합동 점검으로 해소 가능

□ '23년 추진계획

◆ 유관기관과 안전정책 공유로 통합적 선박 안전관리 운영체계 구축

- '해양안전실천본부' 서부 지역본부 및 '해사안전종합관리 TF팀'을 통한 지속적 선박안전관리 운영체계 구축 협의
- 계절별 어선사고예방 유관기관(해수부, 도, 시·군, 관계기관 등) 합동 '어선 안전점검' 실시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선박안전관리 통합운영체계 구축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061-286-6831	-
	전라남도 (수산자원과)	061-286-6952	-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 선박사고, 대규모 해양오염 등 해양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체계구축

□ '23년 추진계획

◆ 해양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신속한 정비·관리 및 재난 교육과 훈련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

- 해양 재난분야의 작성·관리하고 있는 매뉴얼의 내용 현행화
 - (행동매뉴얼) 해양선박, 어선, 해양오염, 조수, 적조
 - (실무매뉴얼) 해양유·도선
- 재난대비 교육 및 훈련
 - 재난담당자 전문교육 수료, 해경 등 유관기관과 재난 모의훈련 실시
- 어업감독공무원의 불법어업 단속분야 뿐만 아니라 어선안전조업 지도, 해난사고시 구조활동 지원 관련 직무역량 강화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역량 강화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061-286-6831	-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공간의 보전·이용·개발 영역의 확장으로 다양한 해양이용 수요 간에 상충과 갈등이 발생하며, 해사분야 안전의 담보가 필요함
- 어업 활동, 해양관광, 원활한 선박항행 등 안전하고 조화로운 해양 이용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 필요

□ '23년 추진계획

◆ 해양공간관리계획 이행점검 및 변경사항 반영

-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관련 관계기관 의견조회('23.1~'23.5)
-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 개최('23.5)
 - * 「해양공간계획법」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 「해양수산발전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전라남도 관련 조례 등에 따름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해양공간관리 계획 수립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061-286-6823	13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72년 제정되고 현재까지 개정 및 해사안전법은 최근의 해상 교통환경 변화 및 선박기술 발달시행되어온 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섬 주민 복지에 대한 인식 확산, 섬 관광 활성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객선 운항 규제는 매우 중요

□ '23년 추진계획

◆ 여객선 출항통제 제도 운영현황 분석 및 개선안 검토

- 현행 출항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한 개선안 도출 및 제도개선
 - '23.1 여객선 운항 시계제한 완화 건의에 따른 규제개선 토론회
 - * 행정안전부 장관, 전남도지사, 전문가, 관계부처, 규제애로 기업인 등
- 여객선에 도입된 기술 수준에 따른 차등적 출항통제 기준 고안 및 건의
 - * 현행 : 시정 1킬로미터 이내 / 개정안 : 500미터 이내 또는 300미터 이내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역량 강화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061-286-6831	-

4-1-1 체험중심 교육시스템 개발 및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미래 해양 인재를 양성하고 해양 관련 재해·재난 등 긴급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대처 능력을 배양
 - 운영현황 : '21년(9~12월, 총 3,621명 참여), '22년(1~9월, 총 14,881명 참여)
 - * 청소년해양교육원 '21년 9월 개원 이후 교육프로그램 체험자 꾸준히 증가

□ '23년 추진계획

◆ 청소년해양교육원 및 국민해양안전관 운영

- 청소년이 해양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교육프로그램) 안전海탐방, 해양안전교육, 생존수영, 초등생존수영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청소년해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라남도 (섬해양정책과)	061-286-6741	1,620백만원

4-4-1 해양안전문화 실천운동 지원 및 활성화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레저스포츠 다양화 및 양적 증가에 따른 국민들의 안전 해양 안전의식 확산 필요

□ '23년 추진계획

◆ 해양레저 참여자 대상 해양안전문화 홍보 및 교육

- 해수욕장 이용객 대상 해양안전문화 홍보(방송, 현수막, 안내판 등)
 -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수칙 및 사고발생시 대응요령 등 홍보
-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체험교실) 운영시 해양안전교육 실시
 - 생존수영, 심폐소생술 등 수상안전교육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안전요원채용· 안전장비임대	전라남도 (섬해양정책과)	061-286-6742	1,200 백만원

경 상 북 도

I. 개 요

☐ 어업인·어선 현황('22.12.31 기준)

(단위 : 명, 척, 개)

어업인	어선등록척수(낚시어선)	지자체관리 항·포구
5,245	3,247(137)	연안항 2, 지방어항 22, 기타포구 94

☐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기본계획 6대 전략	세부과제	소요예산
합 계	4	3,240
1.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1,130
2. 탈탄소·디지털화 촉진으로 해양모빌리티산업 선도	-	-
3.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2	2,110
4. 실생활 중심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	-
5.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	-

※ 소요예산은 해당과제 관련 지방비만 포함

☐ 주요 추진사항

- (전략 1) 어선 안전점검, 어선시설 현대화 지원 및 장비지원, 민·관 합동 어선 안전점검 운영 계획 수립·시행
- (전략 3) 어업지도선 활용 해상 불법어업 단속활동 강화, 로프·페그몰 등 바다쓰레기 제거

II. 2023년 시행계획

1-3-3 고위험선박 관리 및 지원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저효율·노후기관 선박용 기관으로 대체 지원하여 안전조업 및 해양사고 예방
 - 노후장비, 설비의 현대화 및 어선의 기계화 지원촉구
 - 선원복지 향상을 위한 선체구조 등 설비개선추진

□ '23년 추진계획

- ◆ 노후어선 기관대체 지원하여 안전조업 및 해양사고 예방
- ◆ 어선장비 설비의 현대화 및 기계화로 해양사고 예방 및 조업능률향상

- 노후선박의 지도·감독 강화 및 선원 안전관리능력 향상을 통한 노후선박 안전성 제고
 - 어선시설 현대화 지원 및 장비지원
 - 어선(원) 보험료 및 어업인 안전 보험료 지원
 - 어선안전점검 : 반기별 1회 합동점검 시행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지원(약 35척, 63백만원)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노후어선 장비 지원사업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054-730-6567	630백만원

1-5-2 선종별 안전관리체계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지자체, 해경, 수협 등 전분분야별 민·관 합동 어선 안전점검반 운영을 통하여 해양사고 위해요소 제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최근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따른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 등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 '23년 추진계획

- ◆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통해 안전한 항만 조성
- ◆ 지속적인 개항 질서 유지와 관리를 통해 항만경쟁력 제고

- 민·관 합동 어선 안전점검 운영 계획 수립·시행
 - 관내 등록어선 및 낚시어선 대상 안전설비, 구명장비, 선체·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 실시
- 항·포구 CCTV, 소화장비 설치 등 항내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지자체 등 해사안전관리 조직 확충 및 역량 강화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054-730-6586	500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어촌계 등 홍보 및 예방순찰 적극 실시하여 고질적인 불법어구 설치에 대한 단호한 단속 및 폐어망 등 제거 필요

□ '23년 추진계획

◆ 적극적인 행정단속·지도를 통하여 관행적인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필요 시 강력한 행정처벌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

- 안전항행 저해행위 단속을 위해 불법어로 행위 합동단속 및 계도 강화
 - 어업지도선 활용 해상 불법어업 단속활동 강화(연중)
 - 육상 순찰 및 어업인 홍보 활동 강화(월 1회)
 - 강구항, 감포항내 수역 순찰 방치어망, 어망부이 제거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어업지도선(영덕누리호) 운영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054-730-7281	390백만원
불법어로 합동단속.계도 강화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054-730-6756	200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바다에서 표류하는 폐어망·어구 등으로 인하여 어선사고 발생 확률이 증가하여 어업인 생계에 직접적 위협 발생

□ '23년 추진계획

◆ 해양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선박 안전운항 도모

- 어업인이 조업중에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수매·처리하여 어업인의 자발적 해양환경 보전활동 참여 유도
- 로프·폐그물 등 바다쓰레기 제거
 -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및 해안가 폐기물 수거처리 : 수시
 -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추진 : '22.3~12
 - 민·관·군 합동 해양정화 활동 추진 : 년 1회
 - 항 내 침적폐기물 인양작업 : 반기 1회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조업중인인양쓰레기수거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054-730-6757	200백만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054-730-6562	320백만원
대게어장정비사업			250백만원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750백만원

경 상 남 도

I. 개 요

□ 어업인·어선 현황('22.12.31 기준)

(단위 : 명, 척, 개)

어업인	어선등록척수(낚시어선)	지자체관리 항·포구
16,597	13,831(1,210)	무역항 7, 연안항 2, 지방어항 67, 기타포구 480

□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기본계획 6대 전략	세부과제	소요예산
합 계	8	112,103
1.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14,225
2. 탈탄소·디지털화 촉진으로 해양모빌리티산업 선도	1	15,909
3.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2	6,948
4. 실생활 중심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3	1,936
5.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	-

※ 소요예산은 해당과제 관련 지방비만 포함

□ 주요 추진사항

- (전략 1)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어선 안전설비 지원,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정치성어업 자동화 장비 지원,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지원, 여객선 및 여객선터미널 안전점검
- (전략 2) 2023 국제 LNG컨퍼런스 개최, 조선해양기자재 친환경 스마트화 기술지원,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
- (전략 3) 자율운항선박 해상 실증데이터 확보 및 안전 검증
- (전략 4) 체험형 해양안전 교육을 위한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

II. 2023 시행계획

1-2-3 통항로 선박안전운항 여건 개선

가.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조업작업 중 양망기 끼임·뺏길 타격, 기상악화 시 무리한 출항 및 경계소홀 등 안전수칙 미준수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

* 최근 5년간('16~'20) 어선사고 9,321건, 인명피해 470명 발생, 기관손상(30.2%) 등 경미한 사고가 74.5%, 인명피해는 양망기 끼임 등 안전사고가 53.4% 차지

□ '23년 추진계획

◆ 어선사고 인명피해 예방대책 지속 추진으로 어업인의 생명·재산 보호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 (사업비) 703백만원(국 30%, 도 9%, 시군 21%, 기타 40%)
- (사업내용) 법령에 따른 어선설비(전기·구명·소방·항해 등 장비) 보조

○ 어선 안전설비 지원

- (사업비) 105백만원(도 24%, 시군 56%, 기타 20%)
- (사업대상) 구명조끼, 자동소화장치, VHF-DSC, V-PASS 등

○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 (사업비) 4,363백만원(국 30%, 도 9%, 시군 21%, 기타 40%)
- (사업내용) 어선 저효율 노후기관·장비·설비의 설치·대체 등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 (사업비) 2,000백만원(용자 90%, 자담 10%)
- (사업내용)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 선령과 관계없이 개발 고시된 표준어선형*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어선대체 건조 지원

* 알루미늄 5개 업종(연안복합·통발·자망·개량안강망, 패류형망), 강선(근해안강망) / FRP 4개 업종(근해채낚기·자망·통발·연승)

○ 정치성어업 자동화 장비 지원

- (사업비) 330백만원(도 15%, 시군 45%, 기타 40%)
- (사업내용) 정치성어업 운영을 위한 자동화 장비* 구입 지원

* 자동화 장비: 해상작업대, 고압세척기, 크레인, 양승기 등

나. 어선어업 재해 안전망 마련

□ 배경 및 필요성

- 수협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대상 자부담 보험료 일부 지원, 어업인 부담 경감 및 어촌사회 안전망 구축

□ '23년 추진계획

◆ 안전장비 보급 및 보험제도 개선 등 어업재해 안전망 구축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사업대상) 도내 주소지와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소유자
- (사업비) 1,585백만원(도 30%, 시군 70%)
- (사업내용) 어선원재해 보상보험 가입한 어선원 보험료 일부지원

○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사업대상) 도내 주소지(선적지) 30톤미만 연근해어선 소유자
- (사업비) 1,344백만원(도 30%, 시군 70%)
- (사업내용) 어선재해 보상보험 가입에 대한 자부담료 일부 지원

○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 (사업대상) 도내 주소를 둔 만 15~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 (사업비) 491백만원(도 20%, 시군 28%, 기타 52%)
- (사업내용) 어업인 재해공제 보험료 부담 중 일부지원(48%)

○ 연안어선 기관개방검사비 지원

- (사업비) 318백만원(도 30%, 시군 30%, 기타 40%)
- (사업내용) 어선 기관고장 방지를 위한 기관개방검사비 일부 지원

○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지원

- (사업비) 4,320백만원(전환 50%, 도 15%, 시군 35%)
- (사업내용) 소형어선인양기 시설 및 정비(보수·보강)

○ 취약 지구 이동수리소 운영

- (사업비) 370백만원(국 50%, 도 50%)
- (사업대상) 284개 어촌계
- (사업내용): 어선 정비가 어려운 지역에 무상 이동수리·점검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어선 안전설비 지원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055-211-4045	7,501
어선 어업 재해 안전망 마련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055-211-4054	8,428

1-5-2 선종별 안전관리체계 강화

가. 연안여객선 및 시설물 안전관리

□ 배경 및 필요성

-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으로 사고 예방 강화 및 각 시설 운영자 안전 의식 제고 필요

구 분	합 계	통 영	사 천	거 제
여객선	23	20	1	2
여객선 터미널(매표소)	9	7	1	1

□ '23년 추진계획

◆ 연안여객선 안전 모니터링 및 재난대응체계 강화

- 여객선 및 여객선터미널 안전점검
 - (대상) 31개소(도내 여객선, 터미널)
 - (내용) 소방시설 및 건축물의 축대 및 구조, 균열 등 전반적 안전상태 점검, 자체 안전관리계획, 다중이용시설 밀집 시 대응계획, 시설점검 등

나. 어선 안전조업지도 및 협업체계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도내 어선 척수는 전국 21%(13,564척)를 차지, 해마다 100건 내외의 어선 사고로 인명사고 지속

* '19년 84건(21명), '20년 116건(3명), '21년 101건(1명), '22년 9월말 104건(4명)

- 최근 3년 사고원인 75%는 운항과실(경계 등 항해 일반원칙 미준수 90%)

□ '23년 추진계획

◆ 계절별·특별·상시 어선 사고 예방 점검·교육·지도·홍보 체계 마련

○ 어선 안전조업지도

- 계절별·연휴기간 등 어선사고예방 정기 안전점검(연 5회)
 - * (중앙)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합동점검 참여 / 연 2회 이상
(지자체) 도, 시군, 해경, 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안전조업국, 민간협회 등 / 수시
-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 낚시어선 집중안전 점검 실시(연 1회)
- '해양안전지킴이', 매일 항포구 순회 지도·홍보 실시(7개 시군/20명)

○ 어선 안전관리 거버넌스 구축

- (명칭) 경남 어선안전 실무협의회
- (구성) 5개 기관·단체, 위원 18명
- (역할) 추진실적 및 계획 공유, 역할 분담, 관련 현안 토의 등

○ 상시 소통 채널 운영

- BAND [어선안전海](도, 시·군, 어업인, 어선안전조업국, KOMSA 221명)
- SNS 대화채널 상시 운영(어선안전담당자, 유관기관 등)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어선 안전조업지도 어선 안전관리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055-211-4045	-
여객선 안전점검	경상남도 (해양항만과)	055-211-3956	-

가.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산업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기존 선박 개선 및 신규 선박 건조에 다양한 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기자재 수요가 급증
- 국제해사기구(IMO)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저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조선시장 변화의 산업 동향 공유 및 시장 방향성 파악 필요

□ '23년 추진계획

◆ 도내 조선기자재업체의 글로벌 시장 판로개척, 저·무탄소 연료추진 선박 핵심기술 교류 등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 2023 국제 LNG컨퍼런스 개최
 - (사업비) 200백만원(도비 100%)
 - (사업내용) 저·무탄소(LNG, 암모니아 등) 연료추진선박 미래 기술 변화와 시장전망 등 공유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
- 조선해양기자재 친환경 스마트화 기술지원
 - (사업비) 200백만원(도비 100%)
 - (사업내용) 친환경 유망품목 기자재 개발지원(컨설팅, 시제품, 시험인증)
- 해양조선산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업지원
 - (사업비) 270백만원(도비 100%)
 - (사업내용)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중소기업 참여 조선해양산업 발전교류회 운영(유망품목 발굴 등)

- 친환경 조선기자재 상용화 및 스마트 유지보수 기업지원
 - (사업비) 350백만원(도비 100%)
 - (사업내용) 조선 및 해양플랜트기자재, LNG선용기자재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개발 지원 및 상용화 지원
 - 중소형 특수선박* 고도화 지원 플랫폼 구축
 - (사업기간) '21~'23년(3년간)
 - (사업비) 11,700백만원(도 28%, 시군 39%, 국가직접 33%)
 - 사업내용: 중소형 특수선박 지원센터 건립 및 장비 구축
- * 중소형 특수선박: 고속정, 경비정, 순찰정, 감시정, 침투정, 중소형 함정 등

나. 친환경 연료 사용 기술개발

□ 배경 및 필요성

-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 온실가스(CO₂) 저감을 위해 '08년 대비 '30년까지 40%, '50년까지 70% 감축 규제 시행 중
- 조선소·국내외 엔진 제조사 등은 화석 연료추진 선박을 대체하기 위해 암모니아 추진시스템('24년 상용화 목표) 기술개발 중

□ '23년 추진계획

◆ 암모니아 혼소 선박 연료 추진시스템 생태계 창출

- (사업명)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
- (사업기간) '23.1~'24.12
- (사업비) 15,000백만원(도 35%, 국가직접 53%, 기타 13%)

○ (사업내용) 500톤급 암모니아 연료활용 실증선 건조 및 해상실증

(■ 개발 ■ 실증 ■ 인증)

실증내용	1차년도('23년)				2차년도('24년)				비고
	1/4	2/4	3/4	4/4	1/4	2/4	3/4	4/4	
실증선박 건조 및 운항 해상실증	<div><div style="width: 100%;"></div></div>				<div><div style="width: 100%;"></div></div>				
연료공급장치 및 연료탱크, 배관 등 연료공급시스템 해상실증	<div><div style="width: 100%;"></div></div>				<div><div style="width: 100%;"></div></div>				
암모니아 엔진 및 배기가스 처리 시스템 해상실증	<div><div style="width: 100%;"></div></div>				<div><div style="width: 100%;"></div></div>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산업 지원	경상남도 (전략산업과)	055-211-3154	12,692백만원
암모니아 연료추진 시스템 지원	경상남도 (전략산업과)	055-211-3154	15,000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로프·페그몰 등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통한 통항 안전 확보

□ '23년 추진계획

◆ 선박 통항로인 전 해역 해양쓰레기 수거로 부유물감염 원인 제거

○ 양식어장 관리사업

- (사업대상) 4개 시군(850ha)
- (사업비) 945백만원(전환 80%, 도 6%, 시군 13%, 기타 1%)
- (사업내용) 해저 오염퇴적물 및 폐기물 인양, 바닥갈이, 객토 등

○ 어업폐기물 처리

- (사업대상) 연안 시군
- (사업비) 1,170백만원(도 30%, 시군 70%)
- (사업내용) 어업활동 중 발생한 폐기물(폐어망, 폐어구 등) 집하장 운영

○ 해양쓰레기 정화

- (사업대상): 연안 시군
- (사업비) 920백만원(군 50%, 도 15%, 시군 35%)
- (사업내용) 도서·벽지 접근 어려운 해안변 집적쓰레기 수거·처리

○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 (사업대상) 연안 시군

- (사업비) 1,390백만원 (전환 50%, 도 15%, 시군 35%)
- (사업내용) 연안 어업허가 어선 등의 조업 중 인양한 쓰레기 수매·처리
-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 (사업대상)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 (사업비) 605백만원(국 50%, 도 15%, 시군 35%)
 - (사업내용) 낙동강 하구를 통해 유입되는 육상쓰레기 수거 및 처리
- 해양쓰레기 전용 집하장 설치·운영
 - (사업대상) 연안 시군
 - (사업비) 1,618백만원
 - * 집하장 설치: 200백만원(기금 70%, 도 9%, 시군 21%)
 - 집하장 처리: 720백만원(기금 50%, 도 15%, 시군 35%)
 - 선상 집하장: 698백만원(전환 50%, 도 15%, 시군 35%)
 - (사업내용) 해양쓰레기 집하장(육상·선상) 설치·운영·처리 지원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부유물감김 사고예방 위해요소 제거	경상남도 (해양항만과)	055-211-3154	6,648백만원

3-2-2 자율운항선박 도입환경 기반 조성

□ 배경 및 필요성

- 무인선박 사업화 및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해상운항 및 원격통제 등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필요

□ '23년 추진계획

◆ 자율운항선박 해상 실증데이터 확보 및 안전 검증

- (사업기간) '20~'23(4년간)
- (사업비) 700백만원(도 43%, 시군 43%, 국가직접 14%)
- (위치) 해상실증지역 및 창원국가산업단지 등 60.4km³
- (사업내용) 무인선박 실증 및 수요발굴을 위한 기술지원
 - 시제품제작, 실증지원, 장비구축, 법령정비, 네트워크 운영 등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	경상남도 (전략산업과)	055-211-3163	700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안전관리 미준수 등 인적과실*이 대부분인 어선원 인명피해 사고의 효과적인 예방·대처를 위해 안전조업교육 강화 필요

* 화재·폭발사고 원인: 관리소홀(71.9%), 부주의(7.8%), 장비파손(17.2%), 미상(3.1%)

- 낚시어선 포인트 선점 경쟁과열, 잦은 사고 발생·증가

□ '23년 추진계획

◆ 어업인 안전의식 제고 및 어선사고 최소화 도모

- 해양안전지킴이 지원
 - (채용인원) 20명(연안시군)
 - (사업비) 243백만원(도 30%, 시군 70%)
 - (사업내용) 각 항포구 배치로 어선안전 상시 교육·홍보·지도 실시
- 명품낚시어선(41척) 운영
 - (지정선박) 41척
 - (유효기간) '22.1~'23.12(2년간)
 - (활동내용) 자율구조 활동, 낚시안전 계도, 건전 생활낚시 캠페인 등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현장교육전문가 및 참여형 교육 도입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055-211-4045	243백만원

가.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청소년 안전문화 확산

□ '23년 추진계획

◆ 청소년 해양레저 안전문화 교육(체험)으로 인명피해 사전 예방

- (사업명)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사업
- (사업대상) 7개시군 11개소, 약 3만명
- (사업비) 300백만원(도 50%, 시군 50%)
- (사업내용) 청소년, 시민, 관광객 대상 해양레저스포츠 무료 교육 지원

나. 해양레저스포츠 안전문화 전파

□ 배경 및 필요성

- 청소년, 시민, 관광객 대상 해양레저스포츠 무료교육을 통한 해양 분야 관심 제고 및 해양레저인구 저변 확대 도모

□ '23년 추진계획

◆ 도민 참여형·관람형 해양레저스포츠 행사 개최 및 안전문화 체험으로 사전 예방 교육 중요성 공유

- 도지사배 전국요트대회
 - (사업대상) 거제시
 - (사업비) 72백만원(도 50%, 시군 50%)
 - (사업내용) 크루저요트대회, 덩기요트대회 등 남해안 해양관광 항로 개발
- 해양스포츠 바다로세계로
 - (사업대상) 거제시
 - (사업비) 660백만원(도 8%, 시군 73%, 기타 20%)
 - (사업내용) 해양스포츠대회, 해양레저체험, 해양문화 체험 등
-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 (사업비) 430백만원(도 47%, 시군 47%, 기타 7%)
 - (사업내용) 국제요트대회, 해양레저체험 등
-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 (사업대상) 통영시
 - (사업비) 200백만원(도 50%, 시군 50%)
 - (사업내용) 남해안 3개 해양도시 국제요트대회 및 해양축제 개최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경상남도 (어촌발전과)	055-211-3294	300백만원
해양레저스포츠 안전문화 전파	경상남도 (어촌발전과)	055-211-3294	1,362백만원

4-3-1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 내실화

□ 배경 및 필요성

- 어선원, 고령선원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교육 사각지대 개선 요구

□ '23년 추진계획

◆ 어선원, 고령 선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 수산업경영인 교육

- (교육대상) 어업인 및 수산업경영인
- (사업비) 29백만원(국 50%, 도 50%)

○ 어촌지도자 교육

- (교육대상) 어촌계장, 수산업경영인회장, 자율관리어업회장 등
- (사업비) 33백만원(국 50%, 도 50%)

○ 자율관리어업 확산 교육

- (교육대상)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및 구성원
- (사업비) 7백만원(국 100%)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 교육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055-211-3524	69백만원

제 주 특 별 자 치 도

I. 개 요

□ 어업인 · 어선 현황('22.12.31 기준)

(단위 : 명, 척, 개)

어업인	어선등록척수(낚시어선)	지자체관리 항·포구
7,500	1,940(282)	무역항 2, 연안항 5, 국가어항 2 지방어항 19, 기타포구 75

□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기본계획 5대 전략	세부과제	소요예산
합 계	8	4,160.3
1. 안전한 해상이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5	3,550.3
2. 탈탄소·디지털화 촉진으로 해양모빌리티산업 선도	1	555
3.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	-
4. 실생활 중심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2	55
5.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	-

※ 소요예산은 해당과제 관련 지방비만 포함

□ 주요 추진사항

- (전략 1) 항내 선박사고 예방시스템 구축(3개사업/6억원), 수난구조 참여 어선 지원, 어선 장비 등 안전인프라 구축(4개사업/27억원), 선종별 선박 안전점검 추진* 등

* 연중 어선, 낚시어선, 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 (전략 2) 환경친화적 선박도시 구축 종합계획 수립 및 재사용 배터리 기반 친환경선박 실증연구 등

- (전략 4) 어선 안전조업교육, 어선 안전조업 및 의식개선 캠페인

II. 2023 시행계획

1-3-2 인명·빈발사고 예방 및 집중관리체계 구축

가. 항만 내 선박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항만 및 어항 내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을 통한 화재, 침수사고 등 예방·대응 및 재산보호

☐ '23년 추진계획

◆ 항내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2개 사업, 800백만원) 추진

- 항내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 항만 및 어항 내 화재감지용 열화상카메라 설치
 - 항·포구 CCTV 설치 및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나. 수난구호 참여 어선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연근해어선 구조체계 확립

☐ 추진계획

◆ 수난구호 참여한 어선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지방비를 행정시에 교부하여 사업추진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항만 내 선박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7	800백만원
수난구호 참여어선 지원			80백만원

1-3-3 고위험선박 관리 및 지원 강화

가.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 배경 및 필요성

-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장비 보급으로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 '23년 추진계획

◆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시행에 따른 국비, 도비를 행정시에 교부하여 사업추진

- (사업대상) 연근해어업(근해·연안·구획)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지원내용) 어선의 기관·장비·설비(LED등 포함)

나.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연근해어선에 대한 기관·전기·구명·소방 등 어선설비 지원을 통해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및 최소화 등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 보호

☐ 추진계획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시행에 따른 국비, 도비를 행정시에 교부하여 사업추진

- (사업대상)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지원내용) VHF-DSC, 자동소화시스템, 구명조끼, V-Pass 등

다. 어선 자동화시설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연근해 어선어업 생력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 어선 항행 및 어로작업 자동화를 통한 어업경영비 절감

□ '23년 추진계획

◆ 어선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추진

- (사업대상)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지원내용) 자동조타기, 자동투·양묘기, 자동양망(승)기, 전자장비 등

라. 노후기관 대체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저효율 노후기관 대체를 통한 어업경영비 절감 및 해양사고 사전 예방으로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 추진계획

◆ 노후기관 대체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지방비를 도·행정시 사업추진

- (사업대상)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지원내용) 연근해어선 노후기관 대체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7	205백만원 (국비205)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50백만원 (국비 50)
어선 자동화시설 지원			828백만원
노후기관 대체 지원			1,620백만원

1-5-1 사고취약분야 안전관리 고도화

□ 배경 및 필요성

- 화재 자동경보기 및 소화설비 지원으로 어업인의 재산·인명피해 사전 예방 및 안전조업 도모

□ '23년 추진계획

◆ 연근해어선 화재 감지시스템 구축사업 시행에 따른 지방비율도·행정시 사업으로 추진

- 근해어선 화재 감지시스템 구축
 - (사업대상)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지원내용) 기관실 내 열화상카메라 시스템, 화재경보기 및 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장치
- 어선화재 예방 및 소화설비 지원(행정시)
 - (사업대상)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지원내용) 화재경보기 및 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장치 설치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근해어선 화재 감지시스템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7	200백만원
어선화재 예방 및 소화설비 지원			21백만원

1-5-2 선종별 안전관리체계 강화

가. 민·관 합동 어선 안전점검반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도·행정시, 해경, 수협 등 전분분야별 민·관 합동 어선 안전점검반 운영을 통하여 해양사고 위해요소 제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 '23년 추진계획

◆ 매월 1회 관계기관·단체 합동 어선 안전점검반 운영으로 어업인과 함께하는 점검 내실화 및 사고 위해요소 사전 차단

- 민·관 합동 어선 안전점검반 운영 계획 수립·시행
 - '22년 어선등록 척수 : 1,940척(제주시 1,088, 서귀포시 852)
 - 매월 1회 도내 주요 항·포구 순회 어선 안전점검 추진
 - * 구명장비, 통신장비, 기관 점검 등

나.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따른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 등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 추진계획

◆ 관내 등록 낚시어선 분기별 안전점검으로 선박안전관리 강화

-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낚시어선 안전점검 실시

- 낚시어선 자체 안전점검 지속 실시(어선 안전점검반 활용)
 - '22년 낚시어선 신고척수 : 282척(제주시 190, 서귀포시 92)
 - '23년 명절·휴가철 등 안전 취약시기 대비 점검 실시
 - * 안전장비 비치현황(구명조끼, 소화기 등), 보험가입여부, 면허소지여부 등
- 집중안전점검 실시
 - 관계기관·단체 합동점검 실시
 - * 해양수산부, 제주도, 행정시, 해경, KOMSA,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 낚시어선 영업구역 관련 제도개선 등 중앙절충 강화

다. 다중이용선박(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세월호 이후, 선박 안전에 관한 국민 관심 고조
- 설, 추석 연휴, 휴가철 등에 여객선 이용객 증가
- 여객선사의 영세화로 인해 선사 안전관리능력 배양 필요

□ '23년 추진계획

◆ 명절, 휴가철 등 연안여객선 이용객 수요 증가에 대비,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추진

- (점검대상) 제주항 기항지 여객선 및 가파·마라항로 여객선
- (점검시기) 설·추석 명절 연휴, 봄·가을 행락철, 여름 휴가철 등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어선 안전점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7	1.3백만원
낚시어선 안전점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45	-
다중이용선박(여객선) 안전점검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	064-710-6353	-

1-5-3 통합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 선박사고*에 대한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 기관 간 협조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 일반선박, 여객선, 연근해어선, 유도선 등

□ '23년 추진계획

◆ 선종별 해양 선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자체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사고 대응체계 구축

- 해양수산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등에 따른 제주지역 사고 대응체계 구축
- 위기대응 수준에 따른 대응단계별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와 역할 등 대응체계 확립
- 개정 요인발생 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등 개정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일반선박, 여객선 등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	064-710-6353	-
연근해어선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7	-
유도선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064-710-3227	-

2-2-2 친환경 연료별 사용기술 개발

가. 환경친화적 선박도시 구축 종합계획 수립 용역

□ 배경 및 필요성

- 제주형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등 전 주기의 「환경친화적 선박도시 구축 기본계획」(‘22.1) 수립·시행에 따라 중장기 세부투자·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종합계획 정립

* 「환경친화적 선박도시 구축 기본계획」에 따른 제주형 친환경선박으로 수소 및 배터리 등 친환경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전기추진선박

□ '23년 추진계획

◆ 전문기관 용역 시행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도시 구축 종합계획’ 수립

- (사업기간) '22.3~'23.3
- (주요내용) 제주형 친환경선박 기술개발·실증연구·충전인프라 확충·민간보급을 위한 전 주기의 중장기 종합계획 정립

나. 친환경선박 연구개발단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의 원활한 실현을 위해 국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 국가중점추진과제에 발맞춘 친환경선박 연구개발 필요
- 제주형 친환경선박의 新기술 연구개발 및 국가정책 연계방안 수립, 도민의식 전환, 산업 거점 육성 등을 위한 전문·전담기관 육성

□ '23년 추진계획

◆ 친환경선박 연구개발 지원 등 전담조직 운영으로 경쟁력 강화 추진

- (사업기간) '23.1~12
- (주요내용) 친환경선박 연구개발 지원 등 전담조직 운영
 - 제주형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전 분야 연구 및 기업 지원
 - 제주형 친환경선박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마련
 - 전문가 협의체 운영, 투자유치 활동, 홍보 등 제주형 친환경선박 생태계 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등

다. 제주형 친환경선박 실증연구

□ 배경 및 필요성

- (탄소중립) 해양수산 탄소중립은 어선 등 소형선박 혁신에 직면
- (기술선도) 제주형 친환경선박의 실증 핵심요소 및 데이터 확보 등 기초연구 수행을 통한 해양수산 탄소중립 대표모델 육성

□ '23년 추진계획

◆ 제주형 친환경선박 실현 가능성 확보 등 실증연구

- (사업기간) '23.1~12
-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선박도시 구축 종합계획」에 따라 제주형 친환경선박 과제 수립을 위한 핵심요소 및 데이터 확보 실증연구 수행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친환경선박 연구개발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97	200백만원
제주형 친환경선박 실증연구			355백만원

4-3-1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 내실화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연안 수산자원 고갈 등으로 인한 연근해어선 원거리 조업 중 기관고장, 어선 전복 등 안전사고 지속 발생
-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참여형·체험형 교육 확대

□ '23년 추진계획

◆ 도·행정시, 해경, 수협 등 관계기관·단체 합동 어선 안전조업교육 실시

- (교육대상) 어선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 대행자
- (교육시간) 연 1회 / 4시간
- (교육내용) 유사시 현장 대처요령, 통신·구명장비 운용 등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어선 안전조업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7	20백만원

4-4-3 해양안전교통방송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수산자원 보호, 불법어업 근절, 안전의식 고취 등 라디오 방송을 활용한 집중 홍보를 통해 어업인 의식향상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 '23년 추진계획

◆ 한국교통방송을 통한 '어선 안전조업 및 의식개선 캠페인' 추진

- (활용매체) 한국교통방송(라디오 방송)
- (주요내용) 수산자원 보호, 불법어업 근절,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 준수 생활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등
 - 테마별 라디오 방송 편성, 매일 주요 시간대(7회) 집중 홍보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3년 예산
어선 안전조업 및 의식개선 캠페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43	35백만원

Ⅷ. 전략별 소요예산

□ '23년 해사안전시행계획 소요예산: 5,187억원*

* 국비 3,601억원(69%), 지방비 1,191억원(23%), 공공기관 395억원(8%)

【 과제별 소요예산 】

(단위: 백만원)

기본계획 5대 전략		계	국비	지방비	공공기관
전략1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 기반 마련	220,349	171,616	39,698	9,035
전략2	해양모빌리티산업 선도	199,452	113,177	61,380	24,895
전략3	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78,741	66,034	9,081	3,626
전략4	실생활 중심 교육·문화 정착	15,623	5,932	7,781	1,910
전략5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4,540	3,340	1,200	-
합계		518,705	360,099	119,140	39,466